

인천 감사 이음

Vol.1

감사·면책 사례



발간사

민선7기 인천시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해왔습니다. 소통과 협력은 해묵은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힘이 되었고, 시정 운영의 근간으로서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초에 발맞추어 공직사회 역시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근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 행정의 답습, 부조리, 소극행정 등이 엿보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날로 높아지는 시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수행, 전문성 강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수행 등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2020 인천감사이음』은 감사행정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이러한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종합감사·특정감사 등 감사 유형별 행정 실무를 정리한 매뉴얼은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종합감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적극행정 면책 사례, 사전 컨설팅 감사 주요 사례 등을 총망라한 우리 시 최초의 감사사례집은 유관기관을 포함한 전 공직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실수와 오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간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직자들이 두 편의 자료를 업무현장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함께 견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9.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Contents



2020 감사·면책 사례

PART 1 시 종합감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1

PART 2 보조금감사 주요지적사례 189

PART 3 적극행정 면책 사례 251

PART 4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339

PART 1

2017~2019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CONTENTS

I. 군·구

[인사·복무]

- 1.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11
- 2.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12
- 3.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등에 관한 사항 13
- 4.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14
- 5. 지방공무원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 16
- 6. 공무원 등 채용관련 면접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17

[세입]

- 7.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에 대한 사항 18
- 8.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19
- 9. 수입증지 인증기사용 수수료 일일결산 및 금고납입에 관한 사항 ... 20
- 10. 재산세(토지분) 사권제한 감면에 관한 사항 21
- 11. 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22
- 12. 취득세 감면 과세관리에 대한 사항 23
- 13. 종교용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소홀 25

[회계·계약]

- 14. 다수공급자물품(MAS)의 분할구매로 2단계 경쟁 회피 26
- 15.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28
- 16.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업무 소홀 29
- 17.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30
- 18. 계약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 19. 적격심사 부적정 33
- 20.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34
- 21. 수의계약 체결 관련 35
- 22. 선금지급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 36
- 23. 신기술(특허)기술사용료 계상 및 사용협약 체결 소홀 38



| | |
|---------------------------|----|
| 24. 하도급 관리 관련 | 39 |
| 25. 하자검사 업무 소홀 | 40 |
| 26.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관련 | 41 |
| 27. 재정운영 관련 사항 | 43 |

[보조금]

| | |
|-----------------------------------|----|
| 28.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45 |
| 29.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6 |
| 30. 보조금 물품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소홀 | 47 |
| 31. 축제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48 |
| 32. 보훈단체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0 |

[재산관리]

| | |
|---|----|
| 33. 공유재산 사용·사용허가 및 대부시 손해보험 부과 소홀 | 52 |
| 34. 물품(차량)관리 소홀 | 53 |
| 35. 정수물품 취득 절차 미준수 | 54 |
| 36. 미술품 관리 소홀 | 55 |

[사회복지]

| | |
|---------------------------------------|----|
| 37.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 56 |
| 38. 국민기초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관리에 관한 사항 | 57 |
| 39.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58 |
| 40.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60 |
| 41. 사회복지시설(법인) 비지정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 62 |
| 42.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 63 |
| 43. 장애인복지 업무처리 부적정 | 65 |

[문화·관광·체육]

| | |
|------------------------------------|----|
| 44.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 67 |
| 45.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68 |
| 4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 69 |
| 47.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70 |
| 48. 문화·관광시설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71 |
| 4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73 |
| 50. 여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 74 |
| 51.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75 |

〔경제〕

| | |
|----------------------------------|----|
| 52. 공장설립승인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77 |
| 53. 대부중개업 관리업무 소홀 | 78 |
| 54.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 79 |
| 55. 직업소개사업소 지도감독 소홀 | 80 |

〔교통〕

| | |
|--------------------------------------|----|
| 56.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관리 소홀 | 81 |
| 57.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 관련 | 82 |
| 58.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83 |
| 59.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85 |
| 60.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 행정처분 소홀 | 87 |

〔보건·위생·의료〕

| | |
|-------------------------------------|----|
| 61. 기존 위생자 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관리 소홀 | 88 |
| 62.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9 |
| 63.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횟수 관리 소홀 | 90 |
| 6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91 |
| 65.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92 |
| 6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보고에 관한 사항 | 93 |
| 67.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 94 |
| 68.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휴·폐업에 관한 사항 | 95 |

〔건설·도시계획〕

| | |
|------------------------------------|-----|
| 69. 시설공사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96 |
| 70.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 98 |
| 71. 건설기술자 배치 등 현장관리 부적정 | 99 |
| 72. 공공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미 이행 | 101 |
| 73. 도로 굴착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02 |
| 74.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103 |
| 7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 104 |
| 76. 보도정비공사 관련 사항 | 105 |
| 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106 |
| 78. 소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 107 |
|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08 |
| 80.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 109 |
| 81.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 111 |



[건축]

| | |
|--------------------------------------|-----|
| 82. 건축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112 |
| 83. 가설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13 |
| 8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 114 |
| 85.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115 |
| 86.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 116 |
| 87. 다중이용건축물 등 안전점검 관리업무 소홀 | 117 |
| 88. 장기 미사용승인 및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관련 | 118 |

[환경·녹지]

| | |
|---|-----|
| 89.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119 |
| 90.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 | 120 |
| 9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121 |
| 92.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22 |
| 93.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23 |
| 94.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24 |
| 95.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검수 부적정 | 125 |
| 96. 수목 부적기 식재 및 하자검사 관련 | 126 |
| 97.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 | 127 |
| 98.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128 |
| 99. 지하수 개발·이용자시설 관리 부적정 | 129 |
| 10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130 |

[농·축·수산]

| | |
|-----------------------------------|-----|
| 101. 어업면허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31 |
| 10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소홀 | 132 |
| 103. 어항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133 |
| 104. 축산물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134 |

II. 직속기관·사업소

[일반행정]

| | |
|------------------------------------|-----|
| 105. 기간제 근무자 채용업무 소홀 | 137 |
| 106. 사회교육 강사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8 |
| 10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소홀 | 139 |
| 108. 부가가치세 납세 업무에 대한 사항 | 140 |

[회계·계약]

| | |
|-------------------------------|-----|
| 109. 금고(계좌) 운영에 관하여 | 141 |
| 110.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소홀 | 142 |
| 11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143 |
| 112. 행사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 144 |
| 113. 회계·지출 운영에 관한 사항 | 146 |
| 11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147 |
| 1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149 |
| 116. 계약목적물 하자관리 소홀 | 150 |
| 117.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 152 |
| 118.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검토 소홀 | 153 |

[재산관리]

| | |
|--------------------------------------|-----|
| 119. 공유재산 시설물 사용허가 등 관리·운영 부적정 | 154 |
| 120. 물품관리 업무 소홀 | 156 |
| 121. 석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57 |

III. 공공기관

[인사]

| | |
|------------------------|-----|
| 122.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 161 |
| 123.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 163 |

[계약]

| | |
|------------------------------------|-----|
| 124. 예정가격 작성 소홀 | 165 |
| 125. 선금 업무처리 부적정 | 166 |
| 126. 입찰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 | 167 |
| 127.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 168 |
| 128.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169 |
| 129. 하자검사 업무 소홀 | 170 |
| 13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소홀 | 171 |
| 131. 건설사업 설계변경 처리 소홀 | 172 |
| 132.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평가 미 실시 | 174 |
| 13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175 |



[회계]

| | |
|---|-----|
| 134. 관리·감독업무 수행관리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176 |
| 135.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 177 |
| 136.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 | 178 |
| 137. 여비 지급 부적정 | 179 |
| 138. 유급휴가일 운영에 관하여(공사공단 창립기념일) | 180 |
| 139. 회의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1 |

[재산관리]

| | |
|---------------------------|-----|
| 140. 공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 182 |
| 14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183 |
| 142. 물품관리 소홀 | 184 |

[기타]

| | |
|-------------------------------------|-----|
| 143. 기록물 관리 소홀 | 185 |
| 144.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소홀 | 187 |
| 14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사항 | 188 |

I



군·구(9개 기관)



1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의하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교육훈련 부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활동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의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이 오류 또는 부정 입력된 경우에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아울러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불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2016. *. **. 인사위원회 근속승진심사시 당시 사무운영○급 A의 교육훈련부서 주관 집합교육 실적 35시간을 소속부서에서 중복 입력하여 교육훈련시간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승진대상자 명부에 포함, 2019.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는 당시 행정○급 B의 교육훈련부서 주관 집합교육 7시간과 사이버교육 60시간을 소속부서와 교육훈련부서에서 중복 입력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미충족 하였음에도 승진 임용하였음
- ② □□구에서는 2016.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 행정○급 C의 집합교육 실적이 승진심사 대상자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의결 후 승진 임용 하였고, 2017.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 행정○급 D의 사이버교육 실적 60시간이 중복입력(동일과정 재이수)되었음에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의결 후 승진임용 하였으며, 2017.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 행정○급 E의 사이버교육실적 15시간이 중복입력(동일과정 재이수)되었음에도 승진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의결 후 승진임용하였음
- ③ △△구에서는 2015.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 행정○급 F의 집합교육 실적 21시간을 입력 누락함으로써 교육훈련시간 충족자를 승진심사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고, 2017.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시 사회복지△급 G의 사이버교육 실적 44시간이 중복 입력되었음에도 승진심사대상에 포함하였음



2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 보상비의 지급) 제1항에 의하되 해당 연도 중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동 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로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개인별 연가에 대하여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 제7조 제4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 지적사례

- ① ○○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시, 휴·복직자에 대한 개인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산정오류가 있었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총 104명에 대하여 17,623,820원을 착오 지급하였음
- ② □□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시 휴·복직자에 대한 개인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교육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총 56명에 대하여 12,291,550원을 착오 지급하였음

3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등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보장)에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는 “평등권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의 2015. *. *. 인사위원회, 2016.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정당하게 처리된 육아휴직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근무성적 및 상별사항 등을 다른 대상자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함에도,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당연히 불리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비교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음
- ② □□구의 2016. **. **. 인사위원회, 2017. *.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정당하게 처리된 육아휴직 사용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근무성적, 명부상 순위, 보직경로, 전문성 및 업무추진 역량·성과, 상별사항 등을 다른 대상자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함에도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당연히 불리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비교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음



4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4항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인사규칙에 대상 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류전형 시험 위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① 응시자격 제한 부적정

- ○○군에서는 2016년 제○회 및 제*회 ○○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군 인사규칙에서 정한 응시요건 이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 □□구는 2015년 제○회 시간선택제 ○급, 2015년 제*회 시간선택제 ○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시 직무분야 경력자 자격기준 만을 적용하여 공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구 인사규칙상 직무분야 경력자 자격기준 외에 자격증 소지자 및 학위 소지자 채용자격기준과 舊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기준 중 하나인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까지 임의로 포함하여 공고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

② 채용시험 서류심사 소홀

- 서류전형 시험위원회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인사규칙에 2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채용시험계획 수립시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채용업무 담당자가 주된 서류심사(응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판단)를 담당하였음
- △△구의 2015.*.*. 채용공고 한 2015년 *회 일반임기제 ○급 채용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15.*.*. 최종 채용된 A의 경우 서류전형 당시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2건 중 1건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등재되지 않은 업체로 해당경력 인정범위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추가 자료 요구를 통해 검증을 명확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구의 2015년 제○회 시간선택제 ○급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서류심사는 ○○팀 채용담당자가 직접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응시자 ○○○ 이력서 상의 비상근 경력기간을 상근경력기간으로 오인하는 등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함은 물론 서류전형 채점표에 심사위원 확인 서명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서류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자격요건 미충족자가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을 거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음
- ▽▽구의 2015년 제○회 및 2016년 제○회 시간선택제 ○급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관련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실무경력이 없는 A와 B를 각각 2015년 제○회와 2016년 제○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응시자 A와 B는 해당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음



5 지방공무원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과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은 가산점을 평정할 수 없다고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사회복지 등 17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군은 임용예정분야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특별채용된 공무원 ○명의 해당 자격증과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공무원 ○○명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도 부당한 자격증 가산점 평정을 하였음
- ② □□구에서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공무원 ○명(사회복지 ○명, 의료기술 ○명)의 해당자격증에 대하여 부당한 자격증 가산점 평정을 한 사실이 있음

6 공무원 등 채용관련 면접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각 기관은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채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면접위원 등 시험위원에 대하여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시험위원) 제4항은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조(정의) 제1호는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특혜의 배제) 조항을 통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는 “ㄴ분야 일반임기제 7급”채용과정 중 2018.*.**.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B(당시 ㄷ분야 임기제공무원)와 ○구 ■■■실에서 약 2년 1개월을 함께 근무하였던 C(▼▼과장)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해당 채용시험에서 B가 최종 합격하였음
- ② □구 ◇◇과 J는 기존 ‘스 전문인력’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업무를 대행하면서 “스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채용계획 공고문을 게시하며 면접위원 명단을 함께 공고하였음
또한, 동일 시험의 응시자 중 P는 □구 ■■■과에서 ‘스 DB 입력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면접위원으로 내정 및 공고되었던 Q, R, S과 상당기간을 동일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상호 직무 관련자였음

8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조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관계 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의 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고지된 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였음에도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수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 △△△과, ●●●과에서는 납세자가 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금을 독촉기한이 경과된 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전국 재산조회, 세무부서 과세자료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소유 부동산을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체납자의 재산을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촉탁을 하여야 했으나 체납액 분할 납부·납부약속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② □구(○○과, □□□□□과, △△△△소)에서는 A, B, ◇◇건설, C, D, E,[주]■■■■■, F 등의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재산조회, 세무부서 과세자료 등을 확인하여 소유부동산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조치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압류를 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수입증지 인증기사용 수수료 일일결산 및 금고납입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에서 민원처리기 관리 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서식[수입증지 수입금 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결산자료와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에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에서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전자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의 2016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현금 수납한 증지수입에 대하여 구금고 납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업무담당자의 부재(교육, 연가) 등의 사유로 863건 42,869천원을 1일에서 최장 26일까지 지연 불입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의 2017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현금 수납한 증지수입에 대하여 구 금고 납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2건 126,275천원을 1일에서 최장 103일까지 지연 불입한 사실이 있음

10 재산세(토지분) 사권제한 감면에 관한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의 감면은 해당 토지가 「국토이용법」에서의 도시계획시설 중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적사례

- ① ○○구(○○○과)에서는 A 등 5명이 소유한 **동 ○○○-○ 등 16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토지를 사권제한 감면대상 토지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 17,516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의 B 외 38명이 소유한 ○○동 ***-*** 등 39필지가 2013.○.○.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용 토지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감면대상 토지로 판단하여 2014년~2016년까지 토지분 재산세 대해 과세 감면한 사실이 있음



11 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납세지)에서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지로 사업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78조(세율) 제1항 제2호에서 법인균등분주민세 표준세율로 ①자본금 등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을 500,000원으로, ②자본금 등이 50억원~100억원으로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을 350,000원으로, ③자본금 등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 등이 30억원~50억원인 법인으로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을 200,000원으로, ④자본금 등이 30억원~50억원으로 종업원수가 100명이하인 법인과 자본금 등이 10억원~30억원으로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을 100,000원으로, ⑤그 밖의 법인은 세액을 50,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9조(징수방법 등) 제1항에서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에서 8월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과)에서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자본금·출자금 및 종업원수 등을 고려한 균등분 세액을 적정하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일부 법인에 대해 과세를 누락하여 주민세 5,625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 ② □□구(□□□과)에서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자본금·출자금 및 종업원수 등을 고려한 균등분 세액을 적정하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일부 법인에 대해 과세누락하여 주민세 10,968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12 취득세 감면 과세관리에 대한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1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① 농업법인 영농목적 감면 부적정

- 농업회사법인 [주]□□는 2016.*.**. ○구 □□□ ***-* 토지를 취득하고 2017.*.**. 착공하여 2018.*.**. 식품공장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였는 바,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착공함으로써 기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구청(○○○과)에서는 법인장부 검토 및 현지출장 확인을 통해 기감면된 부동산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예기간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실제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취득세 등 40,620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 [주]○○○의 경우, 2015.*.**.일 □□구 ○○동 산** 임야를 취득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100% 면제 받았으나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 내(1년)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경우 2016.*.**.일 □□구 ○○동 ***-*외 *필지의 농지를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100% 면제 받았으나 일부 토지는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구(□□□과)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및 현지출장 확인 등을 통해 기 감면된 부동산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예기간 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실제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취득세 등 132,870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② 노인복지시설 감면 부적정

- 납세자 A와 B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각각 ○구 ●●● ****- * ***호와 ○구 ●●● ****- * ***호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청(○○○과)에서는 유예기간(1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취득세 등 76,782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 납세자 C는 2015.**.**일 □□구 ○○동 ***- * ○○프라자 ***호, ***호, ***호, ***호, ***호를 유상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확인 결과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고 ***호, ***호 등은 노인복지시설로 인가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미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에서는 사회복지부서의 관련 현황자료 및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시설이 아님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 31,869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13 종교용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소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1항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과)는 ○○동 **번지 ●●●교회 외 1개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실로 미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 면적만큼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 과세 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3건 13,147,070원, 재산세 9건 7,460,750원 등 총 12건 20,607,82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 ② □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는 2016.*.**. □□동 ***-* 토지를 취득하여 2017.*.**. 교회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물 일부를 근린시설 용도로임대하여 교회 건축물의 일부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구 (□□□과)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관리 미흡으로 취득세 등 33,469천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14 다수공급자물품(MAS)의 분할 구매로 2단계 경쟁 회피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에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출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특히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종합계약 등)에서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물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 구매를 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 계약) 제5항에 따른 조달청 고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MAS 2단계경쟁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10자리)이 동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1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제안을 요청하여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4조에는 수요기관의 장은 MAS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과)에서는 ‘○○여고 외 6개교 조도 개선사업’ 공사에서 LED보안등기구 288개 117,216천원을 구매하면서 MAS 2단계경쟁 기준에 따라 계약가격의 최대 10%(11,721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규격별로 물품을 분할 구매하여 MAS 2단계 경쟁 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으며, ‘○○○ ○○○ 가로등 정비 공사’에서는 100w 규격의 LED가로등기구 399개 249,673천원을 구매하면서 MAS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할 경우 계약가격의 최대 10%(24,967천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동일 수요물자의 납품요구금액을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1억원 이상) 미만으로 분할 구매하여 MAS 2단계 경쟁업무 처리 기준을 위반하였음
- ② □□구는 ‘□□□□□ □□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알루미늄 난간 126,415천원을 2016. 7월과 8월 2회에 걸쳐 구매하여 다수공급자물품(MAS)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구매할 경우 계약가격의 최대 10%(12,641천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동일한 수요물자의 납품 요구금액을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1억원 이상) 미만으로 분할하였으며, 유사사업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일한 제품의 알루미늄 난간을 2016. 5월에 37,728천원에 구매하였는 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유사사업의 통합노력으로 2016. 7월, 8월에 시행한 '□□□□□ 설치 정비공사'와 물품을 통합발주하여 사업별, 시기별로 분할납품을 받았다면 다수공급자물품(MAS) 2단계 경쟁을 통해 최대 10%(16,414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음에도 통합노력을 소홀히 하였음

- ③ △△군은 2016. 4. 18. △△공설운동장 LED스포츠조명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법령에 따라 LED투광등기구를 일괄 발주하여야 함에도 MAS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 2016. 5월과 6월에 각각 79백만원, 78백만원 2건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였음



15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참가토록 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에 의거 동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임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면허·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함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민간 기업의 하드웨어 운영관련 민간자격증명서 등을 갖춘 유지보수요원을 둔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며, 면허 등의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을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이 아닌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정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음
- ② □구에서는 “ㄱ 용역” 등 19건의 연간계약 체결에서 지역제한과 중복하여 추정가격 기준 실적제한의 대상이 아님에도 3년 또는 5년 이내의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였음
- ③ △△구청 △△과에서는 2015. *. *.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에 대한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를 득한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으나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시스템 입력 시 ‘투자제한-일반사항’ 중 업종제한을 등록하지 않아 실제 입찰에 참여한 19개 업체 중 입찰참가 허용 면허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업’은 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과에서는 낙찰된 업체인 ‘ㄱ’가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업체와 계약상대자인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유지보수 포함) 확약서’를 각각 첨부한 후 2015. *.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16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업무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및 제81조(시정명령 등) 규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하도급 계약 내역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받았을 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18.11.8.)」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요구 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례

① 하도급 계약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미반영

- ○구에서는 “○ 설치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총9,190천원)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군에서는 “A 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 ○구에서는 “ㄷ 공사” 등 6개 공사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기준일 내에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선급금)을 최소 4일에서 최대 73일간 지연하여 하도급인에게 지급하였음
- □□군에서는 “D 공사” 등 2개 공사 수급인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기준일 내에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급기준일 7일을 초과하였음



17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여야 함
-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발주청은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 자격은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기준 매뉴얼」(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전문분야 경력자, 공기업 등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 경력자, 해당 발주청(상급기관 포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함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A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적정성을 위하여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자체위원회 구성이나 전문기관 평가 의뢰 없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함으로써 사업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C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의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해 2017. *. *. ○○군 소속직원으로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총7명 : 5급 1명, 6급 6명)하였으나 위촉된 소속 6급 공무원 전원은 평가위원 자격기준인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므로 이럴 경우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선정·평가하여야 함에도 자격기준 미달인 발주청 소속부서 직원들로만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평가를 실시하였음
- ② □구에서는 “ㄷ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구 소속직원으로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5급 1명, 6급 4명)하였으나, 위촉된 소속 6급 공무원 전원은 평가위원 자격기준인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아 이럴 경우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선정 평가하여야 함에도 자격기준 미달인 발주청 소속부서 직원들로만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평가를 실시하였음

18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 중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및 계약체결 방법 등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은 각 호와 같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2015. *.*. ○○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을 위촉한 후 2017. *.*.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위촉하지 않았으며,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신설(2017.8.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되기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했어야 함에도 “2015년 제*회 ○○군 계약심의위원회(2015.*.*)”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심의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2019~2021년 A 용역(추정가격 2,259,528천원)”의 계약 및 B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 등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의 관련 조례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장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 *. *. ㉠국장(●●관)이 공로연수로 해촉되자 간사인 ◇◇과장(분임●●관)을 위원으로 위촉,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위촉과 동일하게 임기를 2년으로 하였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용역에 해당하여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계약심의 안건으로 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심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19 적격심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0000 및 00 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본설계 용역”(기초금액 226,138천원)을 발주하면서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입찰공고 하였으며, 개찰결과 주식회사 ◆◆는 3순위로 1, 2순위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을 사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하여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지역업체 단독으로 투찰했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3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3점을 부여하여 심사한 결과 95.38점(95점 이상 통과)이 되어 낙찰자로 선정되었음
- ② □□구 ○○○○과에서는 2016년 ㄱ·ㄴ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1·2구간)의 입찰공고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인천광역시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억원 미만인 용역)을 따른다고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실제 적격심사시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시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하였음



20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 없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는 영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세부 기준을 <별표 2>로 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구에서는 “ㄷ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2018.*월부터 2018.**월 사이에 각각 ‘공사개약 해지 통보’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임”을 포함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부정당업체 제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1년 2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부정당업체(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어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구 ○○과에서는 2016. *. **. 「2016년도 0000 00000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계약상대자인 ‘(유)○○○○조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받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2014. **. **.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인 ‘(유)○○○○조경’으로부터 ‘주소지 변경 및 대표자 변경’ 문서를 접수 받았음,
□□구 ○○과에서는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유)○○○○조경’에 대하여 2014.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을 실시할 때 현재의 대표자인 ‘A(업체소재지 : 전북 △△군)’가 아닌 최초 계약 대표자인 ‘B(업체소재지 : 인천 △△구 00로)’에게 청문을 실시하였고, 2016.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검토보고 역시 前 대표자인 B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검토·시행하였으며 나라장터 시스템(g2b) 부정당 제재 6개월의 처분을 시행하였음 → 그러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므로, 現 법인대표 ‘△△△’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했으나 前 법인대표 ‘○○○’에게 부정당 제재 처분을 하는 등 부정당 제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

21 수의계약 체결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에는 계약담당자가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한 근거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는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ㄱ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 담당부서가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 중 일부가 제조사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자체 부품으로 장비의 신속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 제조사의 부품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요청 하였고, 음식물폐기물 RFID 장비 운영을 전국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한국○○공단에서 장비 제조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권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계약부서는 제조사 1인 견적을 제출받아(96.8%)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관련 유사 상품 등이 존재하고 자체 제조사가 제작한 부품이 특허가 있어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어 제조사만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도 해당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등 제조사와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의 체결이 적정한지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음
- ② □□군 □□과에서는 ○○과의 시설공사 계약의뢰에 따라 기존 ○○연륙교 건설사업 도급업체인 (주)○○와 2개사와, 군도**호선(○○~○○간) 선형 개발공사(2구간) 도급 업체인 (주)○○○○○○와 각각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과에서는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하여 시공 능력평가, 경영상태, 기술사항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의 계약 운영요령을 위반하였음



22 선금지급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구매 제외),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의 충당을 위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의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른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 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되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함

지적사례

- 구에서는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미만이거나 선금지급일이 보증 개시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적용)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ㄱ 제작’ 등 7건의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액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았음
- 구 ○○과에서는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하여 2015. *.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인 (주)○○○○엔지니어링에서 2015. *. **. 선금 청구 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으며, ‘□□□□□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공사’의 4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추가)보증서추가확보 없이 기간을 연장하였고,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제작발간 용역’에 대하여는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의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되어야 하는 보증기간 종료일을 위반하여 계약기간과 보증기간 종료기간이 같음에도 확인 없이 선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③ ○○군에서는 연도 말에 선금을 지급하면서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선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는 바 특히, “A 용역”은 선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아 선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이나 보증금액이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선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의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였고, 선금 전액사용 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으면서 지급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23

신기술(특허)기술사용료 계상 및 사용협약 체결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공사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 단계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하여야 하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에 따른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 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기준”을 적용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ㄷ 정비공사” 등 14건에 반영된 특허공법(신기술)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술사용료를 “0원”으로 체결하여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에 계상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② □구 □□과에서는 “ㅇ 정비공사” 등 9건에 반영된 특허공법(신기술)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술사용료를 “0원”으로 체결하여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에 계상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24 하도급 관리 관련

- 입찰공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11>에 따라 시행하되 이 중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은 <별지 2>에 의거 1. 수행능력평가(30점), 2. 입찰가격 평가(50점), 3.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5.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로 평가한 후 평가점수 95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 항목 중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1.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2.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3.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의 항목으로, 50억 이상의 공사는 1. 하도급 비율 2.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3.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4.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5.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6.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의 세부 심사항목으로 평가함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센터 2단계 △△△ 공사(건축등)’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10점 만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에서는 2018.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보고’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 작성시 제출한 토공사업 하수급 예정자인 (주)■■■■이앤씨(시공능력 76억)로부터 하도급 포기서를 받고 신규 토공사업체로 ■■■■건설(주)을 선정하여 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 예정금액보다 적은 업체임에도 부적정하게 승인처리 하였음
- ② □구 □□과에서는 “□구 ㄴ센터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등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주) 및 △△(주)와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토공사 업종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한 후 공사 시행 중 사후에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음



25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제70조(하자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정기하자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군 ○○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자검사 실시 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따르면 ‘하자검사’는 사업부서 시설공사 담당자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하자검사 실시요청 공문과 하자검사 미실시에 대한 실시 공문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하자검사는 실시대상물 총 586건 중 86건, 하자만료검사는 실시대상물 총 181건 중 89건을 미실시하였으며,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미실시에 따른 독촉공문(1회)만 발송하였을 뿐 하자검사 이행완료율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 □□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자검사 실시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따르면 ‘하자검사’는 사업부서 시설공사 담당자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하자검사 실시요청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하자검사는 실시대상물 총 2,122건 중 102건, 하자만료검사는 실시대상물 총 466건 중 109건을 미실시 하였으며,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미실시에 따른 독촉 등 하자검사 이행완료율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6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위원회 구성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등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지적사례

①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 2015~2017년 ○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행사 대행용역 7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국장, ●●●●과장 및 ▲▲ ▲▲ 등 내부 공무원을 21명 중 최대 5명 포함시켰고, ○구■■■■■■■■■■회라는 관내 단체 임직원을 21명 중 최대 8명 포함시켰으므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시켰으며 계약의 전문가로 판단하기 어려운 은행 지점장, 병원 직원, 주민자치위원장 및 바르게살기○구협의회장 등을 포함시켜 평가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하였고, 특히 ○구■■■■■■■■■■회장은 최근 3년간 ○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모든 행사 대행 용역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포함시키는 등 부적정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업무를 처리하였음
-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7개 사업 예비위원 147명 중 2%인 3명(□□시청 공무원, ○○대 교수, ▲▲▲▲▲연구소장)만이 타 시·도 위원이었고, 심지어 제22회 ●●●●예술제의 평가위원은 100% 모두 ○구 관내 위원만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이 부적정하게 선정되었으며 특히, 평가위원 선정시 예비명부를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면 그에 대한 선정(추첨)은 계약부서에서 추진하여 평가위원 선정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구는 예비명부 작성과 평가위원 추첨을 모두 사업부서에서 추진하여 공정성 확보를 소홀히 하였음



- □□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정한 근무지 기준 다른 시·도 위원 20% 이상 구성을 이행하지 않고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심사하여 최근 3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 총 13건 중 조달청 계약 2건을 제외하고 총 11건 중 10건이 평가위원 구성 비율을 미준수하였음

②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절차 미준수

- “2015년 ○○구 **** 전면 개편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공고 시 제출한 제안서를 단독 응찰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여 제안서에 대한 평가 요소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기술능력을 평가한 후 통보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에 부합할 것이나 기술능력 평가 없이 가격에 대한 평가만으로 수의시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계획 수립 용역」 및 「2018년 인천광역시 □구 ●● 미디어 운영」 용역 모두 인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안서를 포함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미실시하여 계약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27 재정운영 관련 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 원칙은 모든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됨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세입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따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를 제외하고 예산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적사례

① 징수대비 미수납

- 2014~2016년 ○○군 지방세(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11,383백만원, 세외수입 12,087백만원, 과태료 7,506백만원, 개발부담금 외 708백만원 미수납 현황 확인
- 2014~2016년 □□구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종합토지세, 면허세) 15,276백만원, 세외수입·과태료 58,934백만원 미수납 현황 확인
- 2014~2016년 △△구 세외수입·과태료 85,043백만원 미수납 현황 확인
- 2014~2016년 ▽▽구 세외수입·과태료 48,875백만원 미수납 현황 확인

② 세입예산 미편성

- 2014~2016년 ○○군 국고보조금 외 15개 항목 30,476백만원 미편성
- 2014~2016년 □□구 순세계잉여금 외 13개 항목 59,866백만원 미편성
- 2014~2016년 △△구 자치구조정교부금 외 7개 항목 39,968백만원 미편성



③ 불용액 과다 발생

- ○○군은 2014년 31,264백만원, 2015년 33,402백만원, 2016년 37,49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6.5% ~ 7.6% 수준으로 적정 예산 편성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과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구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예측 및 예산 추계없이 편성을 요구하여 2015년 61,012백만원, 2016년 55,983백만원, 2017년 80,572백만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
- △△구의 최근 3년간 일반예산 불용액 규모는 2014년 39,411백만원, 2015년 45,037백만원, 2016년 79,64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 ~ 18%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음

④ 예비비 집행 부적정

- ○구에서는 2015.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사업은 예측 가능한 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등에 편성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로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 기념행사의 경우 행사성 경비로 행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판단하여 의회 의결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하였음
- □□구에서는 2016. 2월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직제개편 등을 위한 사무실 정비를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 시에는 사전에 직제개편 담당부서와 예산편성 담당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

⑤ 예산 전용

- ○○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사업을 추진 하면서 참여자의 간식비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지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예산에서 참가자 간식비, 식비 등 제공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 □□구 □□□□과에서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이전)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에 대하여 직접 수행코자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그린스타트인천 네트워크실천단운영 프로그램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전용 신청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전용제한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하였으며, 2016년 □□□□□실 구성시책홍보(구정홍보영상 자체제작용역 수수료) 22,000천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 후 집행 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음

28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방과 후 학교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 소재 유치원, 초·중·고교에 보조금 교부조건(보조금 집행 주의사항)을 명시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경비 지원 사업 완료시 각급 학교로부터 정산보고서 및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받아 정산검사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처리하며, 부정적인 집행 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지적사례

- ① ○○구는 2015년~2017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학교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증빙 자료는 대부분 지출부와 지출결의서 등만 첨부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당 학교에 방문점검시 또는 학교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함에도 세부 증빙서류 확인 없이 정산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2016년~2017년 정산검사시 지적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지출’ 및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집행 건’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하는 것을 교부 조건에 명시 하였음에도 6개교 10,165천원에 대한 환수 조치 없이 시정·경고 조치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음
- ② □□군이 2015년~2017년 ‘학교 급식비 보조사업’ 종료 후에 5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에는 ‘지출일자별 세부내역’의 작성 없이 ‘통합지출부 출력물’로 대체되어 있으며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어 제출된 ‘통합지출부’를 살펴보면 □□군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지원된 경비의 구분이 곤란하며, 제출된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만으로 보조금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군은 각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정산보고서를 보완하게 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9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시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및 각 자치구 관련 조례에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지적사례

- ① ○○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2건의 보조금사업 994백만원(2016~2017년)과 2016년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사전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② □□구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3건의 보조금사업 101백만원(2015~2016년)과 2015년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사전 보조금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외에도 2015~2017년 기간 중 □□구의 전체 보조금 사업수는 85~63개에 해당하나 3~4개만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구에서는 나머지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와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초에 수립한 ‘□□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 자체 심사한다’는 기준 외에는 명확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의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30

보조금 물품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 구분 및 설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비(복사기, 컴퓨터 등)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대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무상대부) 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구입하여 물품등록 후 수탁기관에 지급(무상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수탁기관에서 물품을 구입 시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물품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종합지원센터 정수기장 등 3종과 ○○장난감월드 2개점 데스크 의자 등 5종의 주요 자산취득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5조 및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 「인천광역시 ○구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의 물품목록으로 관리하지 않아 재물조사 목록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복지관 탁구대 등 10종과 □□문화센터 탁구대 등 2종의 주요 자산취득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5조 및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제24조, 「인천광역시 □구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 부서의 물품목록으로 관리하지 않아 재물조사 목록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있음



31 축제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 및 조례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정하고,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권자의 승인 없이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조사·검토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보조금 사용방법 등을 교부결정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보고서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적사례

① 민간위탁금 집행 소홀

- ○○구에서는 “2016년 ㄱ” 개최시 인천시로부터 시비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구 ○○○○○○”에 교부하였고, 추가로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축제 용역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행사 개최를 위해 임시적 또는 일회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용역 이거나, 물품·장비의 임차, 축제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로 등으로 행사운영비 또는 행사관련 시설비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를 소홀히 하였음

② 축제 사업비 교부결정을 위한 지도감독 소홀

- ○○구는 2014년 ○○축제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사업자(△△방송, ****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미첨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통해 보조금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하여야 함에도 검토 없이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정산 검사시 보조금이 산출기초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비교 확인할 수가 없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ㄱ 축제(2015~2017년), ㄴ 축제(2016~2017), ㄷ 축제(2015~2017년)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한 기한을 지연하여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사업 계획 변경시 **과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4년 2 축제 성과결과 보고(행사결과 보고 및 관련 사진) 미제출, 2014년, 2015년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미사용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구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 교부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교부 조건 대로 보조금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 □□□□□공단에서 2015. *. **.과 2016. *. **.에 ○○구에 청구한 축제 대행사업비 교부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축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단에 통보 되었음에도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비 산출기초, 경비의 사용 방법 등의 내용 없이 대행사업비를 신청하였고, ○○구에서는 사업계획서상의 산출기초와 경비의 사용방법 등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 교부를 결정하여 2015. *. **.과 2016. *. **.에 각 380,000천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 하였고 그 결과 2015년도에는 축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익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아 실제 발생한 수입금이 구체적인 계약, 세입처리 과정 없이 민간행사 기획사가 축제공연비로 상계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축제 개최 3일전에 ○○○○ 용역계약이 변경되는 등 축제 사업비 교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③ 축제 보조금 예산집행 정산 소홀

- ○○구는 축제관련 보조사업자가 행사 종료 후 제출한 정산서에 증빙자료 미첨부 되었거나, 증빙자료간 집행일이 불일치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음에도 정산서를 반려하거나 증빙자료 보완요구, 시정 조치없이 대부분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게 처리 된 것으로 정산 보고 하는 등 축제예산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였음
- □□구에서는 2014년~2016년 △△△△원 및 □□□□□□□□공단에서 제출한 ○○ ○○ 축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증빙자료 미첨부 등 위탁금 교부조건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서를 반려하거나 자료 요구를 통하여 이를 보완 하였어야 하나 ○○○○ 축제 사업비 정산서가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정산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32

보훈단체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류, 집행품의서류, 청구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하여 집행하고 채권자의 영수인 등 그 증빙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게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지적사례

- 1 ○○구 ■■■■■회의 경우 2016년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중식비용 등 행사비용으로 4,000천원을 집행하였지만 집행세부내역 증빙자료를 미첨부하였고 2017년도 하반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에도 참석자 명단, 집행내역 등 관련 자료가 없으며 2017년도 향군의 날 행사비용 2,000천원을 집행하면서 집행증빙자료 일부를 누락하였고 기념품으로 손톱깎기 40개 구입에 대한 배부내역 없이 집행·교부하였음
□□□□□□회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재난구조활동 행사를 하면서 중식비용 등을 지출하였지만 참여자 명단을 누락하였으며 수건(300천원)을 구입하였으나 구입한 수건에 대한 배부 내역 증빙서류 없이 정산을 실시하였음
■■■■■■회에서는 2017.*.**에 사무실 컴퓨터를 보조금 50%인 220천원, 자부담 50% 220천원으로 구입하여 ○○구 해당부서 물품관리대장에 물품 등재없이 사용하고 있어 추후 물품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게 될 상황이므로 물품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 2 ■■■■■회 □구지회의 경우 2015.*.**.에는 식품운반 유류비(20,000원)를 법인카드로 결제 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상이군경 A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2015.*.**.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카드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산 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임
2015. *. **.에 회원 독거노인 및 병환우 위안 방문을 위한 비용을 일괄 지회장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2015.*.**.에는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회장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음

□□□□유공자회 □구지회에서는 2015.*.**에 월례회의 및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를 추진하면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고 2015.*.**에 ○○동 ○○○추모행사비를 집행하면서 집행세부내역이 없어 정산 확인을 할 수 없으며 또한 2015.**.**에 사무장 연말 위로비로 200,000원을 사무장 B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였고 2016.*.**에는 재난구조활동 답례품(선물)을 600,000원 상당 구입하였지만 답례품에 대한 상세내역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음 한편 2017.*.**에 사고처리를 위하여 100,000원을 보조금 목적과 관련없이 가불(사무장 A 계좌로 이체)받아 집행한 후 2017.*.**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반납, 2017.*.**에는 집행 증빙내역에 집행내역 표기없이 500,000원을 B를 지급자로 하여 지급품의하여 가불(실제로는 C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한 후 2017.**.**에 재입금, 2017.**.**에 집행 증빙내역에 집행내역 표기없이 100,000원을 가불(사무장 A 계좌로 이체)하여 2017.**.**일에 재입금, 2017.*.**에는 집행 내역표기 없이 200,000원을 가불(사무장 A 계좌로 이체)하여 2017.**.**에 재입금, 2017.**.**에 집행 증빙내역에 집행내역 표기없이 230,000원을 가불(사무장 A 계좌로 이체)하여 2017.**.**에 재입금 하였으며 또한 2015.*.**. 보훈회관 상수도비 60,500원을 사무장 A 계좌로 이체한 후 집행, 2016.*.**. 복합기 수리비 50,000원을 사무장 A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 2016.*.**. 프린터기 수리비 20,400원을 사무장 A 계좌로 이체, 2017.*.**. 통신비 65,850원을 사무장 A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③ 대한민국 ○.○.○회는 (주)□□투어로부터 버스를 임차하면서 2015. *.*. 버스임차료 3,000천원을 임대인이 아닌 “A”에게 입금하고, 2015.*.**. 전자세금계산서는 임대인 으로부터 받아 정산검사 시 A가 정당한 채주인지, 임차료가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여 실적보고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음



33

공유재산 사용·사용허가 및 대부시 손해보험 부과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에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당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000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사용인은 해당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공단은 국민▲▲센터내 커피전문점 등 5개소에 대해 손해보험가입 또는 공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구를 피보험자로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구가 가입한 공제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계약이 중복됨으로써 「상법」 제672조에 따라 사고 발생시 구와 사용자가 당초 각각 보장받은 전액이 아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되고 ○구가 불필요한 공제금 지출(청사내 카페 등 6건 432,552원 상당)을 하였음
○구가 가입한 공제금(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배상공제)을 사용자에게 부과시 해당 시설물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만 부과하여 사용자가 납부했어야 할 영조물배상공제금(₩₩₩₩ 등 2개소 30,660원 상당)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무상 사용에 대해서도 공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회의 ○구협의회 등 4개소 280,546원 상당의 공제금을 미부과하였음
- ② □구 □□과는 ㄷ센터를 준공 후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나, 3년간 유상 수익허가 받은 사용자가 3년간 개별보험을 가입하여 중복됨에 따라 ‘ㄷ센터 공제 등록해지 요청’ 문서를 ㉠㉠과에 발송하여 해지 요청하였고 5개월 이후 사용자는 중도 계약해지 요청함으로써 새로운 사용자에게 수익허가시까지 ㄷ센터는 공실기간인 약 6개월간 화재보험 등의 미가입이 발생하였음

34 물품(차량)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 조례 시행규칙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등 물품사무 관리자의 사무를 정하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 명의의 소유차량 중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건은 총 22건으로 최소 2일부터 최대 162일이 지연되어 총 1,02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과의 ㄱ과 ㄴ 2대의 차량은 각 300천원씩 부과되었으나 폐차 말소까지도 미납되어 &&과는 ○구 소유 공용차량을 대체 압류하였으며, 또한 최근 3년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22건으로 미가입일이 최소 1일에서 최대173일로(12,000원~300,000원 과태료) 과태료 총 1,048천원이 부과됨으로써 차량관리에 소홀하였음
- ② □구 ◎◎실 등 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중형승용차 **우***** 등 5대 공용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지연 가입하여 총 121,800원의 과태료(대인 및 대물)를 납부하였으며, □구 □□과 소형화물차 **구***** 등 2대는 2일에서 최대 26일까지 검사 지연하여 36,840원의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납부함



35

정수물품 취득 절차 미준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 물품 정수취득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주관 실·과장이 물품 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 하고는 사전에 물품 및 차량을 구입 할 수 없음

■ 지적사례

- ① ○○구 ○○실에서는 최근 3년간 향온합습기 등 총 59건 487,839천원에 대해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에서는 구입한 후 정수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과는 최근 3년간 경로당 지원 물품 8건에 대해 매년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구매 후 정수 승인하였음
- ② □구 ◎◎실에서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6,116천원 상당) 등 52건 469,134천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에서는 물품을 구입 후 정수승인 하였으며 특히, △△△△과는 현 보유차량인 화물트럭 3대 대신 밴으로 정수물품을 교체하면서 용어를 혼동하여 대체취득 요청하였고, ◇◇과는 기존의 화물트럭 3대를 정수 감배정하고 밴 3대를 “신규취득”으로 배정하여야 함에도 화물트럭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새로운 화물트럭 3대 구입을 승인통보 하였음

36 미술품 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서화·예술 작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미술품관리 메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유한 미술품은 작품명·작가명·취득가격·취득사유·사진·게시장소 등을 포함하여 새울행정 미술품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재 후 미술품관리카드를 사진첩 또는 앨범 형태로 정리하여 현품과 대조·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미술품 현품에 관리번호·작품명 등을 기재하여 명제표를 부착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 미술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미술품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함

지적사례

- 구 ○○○○○○과에서는 2017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전국 공모 「○○ ◇◇◇◇대전」을 개최하면서 취득한 수상작 등을 포함한 미술품 총 92점333,000천원 상당을 2018년 3월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아직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새울행정 미술관리시스템에 관리번호·게시위치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았고, 또한 작품 5점은 목록상 관리번호와 실제작품 부여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다른 5점은 명제표 미부착 상태로 게시하였으며 2015년·2016년 ○○ ◇◇대전 당선작 총 7점은 새울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등재 누락하였으며 보유 미술품 일부는 ○○○○과 등에 게시된 것으로 관리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체는 창고에 보관중이었고 미술품관리카드를 사진첩 또는 앨범의 형태로 정리하여 현품과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 전자화일로 분산 보관하고 있는 등 관리에 소홀하였음
- 구 ◎◎과는 미술품관리 메뉴얼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 미술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보유중인 미술품 7점 중 2점은 새울시스템상 제목 미상으로 게시되어 있으나 실제 작품에는 “육망적 시선” 및 “빛의 하모니” 제목이 명제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과에서 2017. 12. 15. □구 ㉠㉠㉠㉠회에서 구입한 “나무이야기 2” 등 3점 10,000천원 상당의 미술품을 등재 누락하는 등 미술품 관리에 소홀하였음



37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야 함
-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가 가능 하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조회 후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보장비용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보장 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보장비용이 납부될 수 있도록 보장 비용 징수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보장비용 징수가 진행 중인 94명에 대한 징수 실적이 264,908,478원 중 21,130,688원을 징수하여 7.9%로 저조한 상황이며, 장기간 납부 실적이 없는 A 등 4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하여야 함에도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7.10.31.에 일괄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생계·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A 등 44명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실적이 122,242,790원 중 20,770,095원을 징수하여 17%로 저조한 상황이며, 납부실적이 없는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B 등 7명 및 주거급여대상자 C 등 18명, 총 25명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하여야 함에도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D와 E는 보장비용 징수 결정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8 국민기초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관리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와 및 유예를 결정하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판정 유예기간 만료일 70일 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 대상자를 확인,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만료예정일임을 통보하고 대상자는 3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근로능력평가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가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고,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미만~만료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서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판정유효기간 만료일을 통보하지 않고, 19명은 8일~101일 지연통보 하였으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을 초과한 21명에 대하여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변동처리 하여야 하나 변동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② □□군에서는 근로능력재판정 대상자 221명 중 4명에 대하여 유예기간 만료예정일이 지났음에도 통보를 시행하지 않았고, 113명에 대하여는 3일~319일 까지 지연하여 통보 하였으며,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초과한 33명에 대하여 “근로능력 있음”으로 변동처리 하여야 하나 진단서를 제출할 때까지 대상자에게 독촉만 하고 변동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39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에 따르면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변동사항(사망, 교정시설 입소, 국적상실, 선정기준액 초과, 해외체류 60일 이상 등)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 사유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처리 또는 정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결정처리 및 행복e음에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에 의거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함
- 또한,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 지적사례

- 1 ○○구에서는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연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상계하여 반환을 완료하여야 했음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 및 직역연금수급 등으로 과잉 지급한 31명(23,562,870원) 중에서 10명(5,831,390원)에 대하여 환수완료 하였으나, 직역연금 지원대상자 8명 및 사망 13명(17,730,980원)에 대하여는 환수를 지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 등 16명은 납부실적이 없고, 독촉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납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 □구에서는 직역연금 지원대상자 등 34명에 대하여 51,029,440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환수대상자 중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직역연금 지원대상자 12명 및 사망 5명, 비상장 주식 보유자 2명에 대하여 환수절차를 지연하고 있음은 물론 독촉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납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3 △△군에서는 환수대상자 중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직역연금 지원대상자 10명 및 사망 13명에 대한 기초연금 16,176,420원의 환수절차를 지연하였으며, 독촉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납부실적이 없는 B 등 10명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④ ▽▽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직역연금 지원대상자 128명 및 사망 4명에 대하여 2014. 3월~2017. 9월까지 기초연금 168,520,17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반납실적이 없는 11명에 대하여 독촉고지 후 체납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과지급분에 대한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0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 □□□□□□과 및 ■■■■■■■■■■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각 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사항에 대해 최소 매 3년마다 1회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 지적사례

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정관변경 소홀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제2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안, 재산의 평가조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의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15.9.23. 기본재산인 건물(인천 ○○구 **동 ▲▲-▲)에 창고를 증축하면서 기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면적 1,720.632㎡보다 25.11㎡가 증가하였음에도 증축분에 대한 목록과 재산가액이 누락되어 있어 기본재산에 대한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구(○○○○○○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 증감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구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경우, □□□□□□□ 2동(등기부등본 상 건물 명칭)을 2014.3.11. 노인복지시설로 증축하면서 기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면적 2,568.51㎡보다 20.58㎡가 증가한 2,589.09㎡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증축분에 대한 목록과 재산가액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②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 부적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구의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는 감사 2명을 선임하면서 한국●●●● 이사 퇴직 후 무직인 자 1명(2017.3.31~2019.01.09.)과 한국■■■ 제약회사 퇴직 후 무직인 자 1명(2017.12.11~2019.01.09.)으로 선임하였으나 2명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위를 보유하거나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사의 임기를 각각 1년 10개월과 1년 1개월로 관계 법령은 물론 법인의 정관에도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 ○구(○○○○○○○○○)에서는 감사 임면보고 및 지도·점검 시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했으나 감사일 현재(2018.5월)까지 조치한 사항이 없음
- □□구의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감사일 현재(2018. 3월)까지 감사 2명을 선임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1명(2016.8.3~2018.8.2.)과 재활병원장 1명(2017.3.8.~2019.3.7.)으로 선임하여 관련 법령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구(○○○○○○○○○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의 감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41 사회복지시설(법인) 비지정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의 사용 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여비·자산취득비 등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집행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지출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지적사례

- ① ○○구의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담소 및 ○○○○재단 2개소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50%를 초과하여 2,806,250원을 사용하였고, ○○○○재단 등 7개소에서는 간접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 용도로 6,569,3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후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의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 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 용도로 5,931,3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그룹홈에서는 간접비를 980,785원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후원금 사용에 대한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③ △△구의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사회복지법인 ○○○원 등 6개소에서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 용도로 2,671,790원을 집행하였음

42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인천광역시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정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의거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2014년까지는 반기별 1회 이상, 2015년부터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음

■ 지적사례

① 어린이집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미실시

- ○○구의 수감기간 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대비 점검율은 2014년 46.9%, 2015년 63%, 2016년 69.4%이며, ○○어린이집 등 97개소의 어린이집이 감사일 현재 1년 이상 최고 2년 3개월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구의 수감기간 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대비 점검율은 2014년 18%, 2015년 22%, 2016년 23%이며, □□□□□□어린이집 등 293개소의 어린이집이 감사일 현재 1년 이상 최고 5년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② 어린이집 정보공시 업무 관련

- △△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보공시 항목별 공시시기를 참고로 최근자료로 반영하게 하는 등 정보공시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집 등 328개소의 어린이집 정보공시 자료가 누락된 채 관리되었음
- ▽▽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보공시 항목별 공시시기에 맞게 최근 자료로 반영하게 하는 등 정보공시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집 등 163개소의 어린이집 정보공시 자료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음
- ◇◇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보공시항목별 공시시기에 맞게 최근자료로 반영하게 하는 등 정보공시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매년 공시한 정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어린이집 등 70개소의 어린이집 정보공시 자료가 누락된 채 관리되었음

③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구에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현황을철저히 지도·감독 해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할 시 시정조치 하여야 했으나 감사일 현재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하였으며, ○○○○어린이집 등 23개 어린이집의 경우 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2014~2016년 정기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실이 없는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일 현재 ●●구의 △△△어린이집 등 13개소 어린이집에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부모 대표를 2분의 1이상 구성하지 않는 등 운영위원회 설치기준과 다르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 등 35개소 어린이집의 경우 2014~2016년 정기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실이 없는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구의 33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고, ◎◎◎◎집 등 4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지역사회 인사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여 운영위원회 설치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도·점검 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3 장애인복지 업무처리 부적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3개월 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를 통보한 후,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재판정 촉구공문을 통지하고, 재판정 촉구기간 내에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한 후 2주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장애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미반환시 같은 법 제90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을 실시하여, 장애상태의 호전 등으로 장애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부적격 장애인을 걸러 내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장애 재판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에 의거 수급권 소멸 사유(사망, 선정기준액 초과, 경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변경, 국외 이주 등)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달까지는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인연금(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절차에 따라 지급한 장애인연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지적사례

1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 업무 소홀

- ○○구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A 등 15명에 대하여 재판정 안내 및 재판정 촉구 공문 등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A 등 7명은 재판정 촉구기한 내에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구의 2015년~2017년까지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는 등록장애인 1,341명 중 재판정 예고통보 누락, 재판정 미이행 등 확인 한 결과, 재판정을 미이행한 등록장애인 6명에 대하여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이행자 중 **동에 거주하는 B는 재판정 기한일이 2016.*.**.일이었으나 2017.*.**.일에 충남 △△시에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전출지 및 전입지에서 모두 재판정 미이행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장애등록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장애인연금 5,325,920원을 수급받고 있는 등 장애 재판정 미이행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②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 △구에서는 해외체류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40명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수당)으로 17,223,140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C 등 13명에 대한 장애인연금(수당) 3,401,630원의 환수절차를 지연하였으며, 독촉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납부실적이 없는 10명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수대상자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구에서는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D 등 8명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2,079,4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44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 군·구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군·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과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인 남동구 테니스장 외 20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연합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의회 동의,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시설운영 편람 작성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② △구에서는 ㄱ장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의무를 위임하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ㄱ장 관리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관리위탁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재계약을 요청하여야 하고 재계약 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 만료일에 계약 해지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위탁기간 만료일이 0년 0개월 이상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재계약 요청 및 재계약(협약) 체결 없이 관리 위탁을 계속하고 있음
- ③ □□구는 □□○○○○장 시설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 위촉시 체육시설 운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나, ■■■■봉사단 단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비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였음



45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및 징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구 구민운동장 관리 운영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구민운동장 운영 및 사용 개선방안”에서 마련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구 구민운동장의 운영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에서 추진하고, 구민운동장 시설물 관리는 ○○과에서 추진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와 대장 작성 등을 2개 부서 모두 작성하지 않는 등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② □□구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감면은 「인천광역시 □□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액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해당 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나, ‘□□구 ○○○ 클럽’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시 관련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감면 적용을 소홀히 하였음
- ③ 「△△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 하며, 사용료 징수는 군민 이외의 자가 사용할 때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동일 조례 [별표 4]와 [별표 5]의 참고사항에는 △△군민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하고 있음

4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개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 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등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구 □□□□운영”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에 수의 계약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개별 법령이 없는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이는 공개경쟁입찰 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등 공개모집을 통하여 “○○○○ ○○ 화합한마당” 등의 행사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사실이 있음



47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바,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2항에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협약체결 등) 제1항을 따라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고,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인천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0조(협약체결 등)를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며,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장 등의 승인 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협약 체결 후 공증을 하지 않았으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장의 승인 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협약 체결 후 공증을 하지 않았으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8 문화·관광시설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또는 과징금), 시정조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업소의 행정처분 기록대장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호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하거나, 제36조(과징금 부과)에 따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는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청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위법행위를 하여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노래연습장 4개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연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행정처분 기록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위법행위를 하여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 노래방 외 14개소에 대하여 지체없이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고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처분하여야 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119일까지 처분 사전 통지를 지연통보 하였고,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 노래방 외 17개소에 대한 처분이 최대 241일까지 소요되었음



- ③ △△구(○○○○과)에서는 문화시설(노래연습장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준수 사항에 대한 위법행위로 △△경찰서 등으로 부터 통보된 ○○○PC존 외 6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처분하여야 했으나, 처분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미제출 했음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60일~90일 이상 경과된 후에 의견제출 받아 행정처분 하였음

49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따라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체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청소년 및 청소년(만 5세~18세)들에게 스포츠 강좌이용권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정시설 이용시 강좌비를 일정부분 지원(1인당 8만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개별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며, 스포츠 강좌시설 등록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스포츠 시설주가 직접 등록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대상자와 강좌시설 승인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승인처리 하고 있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에는 스포츠 강좌시설은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 등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출석부 보관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스포츠강좌 시설은 출석부를 관리하면서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 일정 등 ‘정당한 사유없이’ 월 출석률의 50% 이상 결석시 2회 이상 연락에도 반복 결석할 경우 군·구에 반드시 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2회 이상 미통보할 시 스포츠강좌시설 선정을 취소(1년)하고, 이용권 대상자는 해당 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스포츠 강좌시설 등록 신청시 신고한 주요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군·구 담당부서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스포츠 강좌시설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여부 및 책임보험가입 여부 등도 점검토록 권장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스포츠강좌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하여 스포츠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의 불이행으로 스포츠강좌 시설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 강좌 시설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나, 스포츠 강좌시설 7개소에 대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미 실시 하는 등 스포츠 강좌시설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에서는 스포츠강좌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하여 스포츠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의 불이행으로 스포츠 강좌 시설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 강좌 시설 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나,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스포츠 강좌시설 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미 실시 하는 등 스포츠 강좌시설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50

여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제35조(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 따르면 여행업등록을 한 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휴·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은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사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여행업을 등록한 14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영업보증금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있다가 감사 사전조사기간 또는 감사종료 후에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여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여행업체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에서는 여행업 보증보험 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의 철저한 확인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누락 업체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공백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했으며,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폐업상태의 여행업체 사실 확인과 관리를 통해 무단 폐업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 여행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여행업 등록업체 68개소에 대하여 휴·폐업 유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예치 사실 확인을 현 감사기간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증보험 기간이 만기된 ●●관광 등 19개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 받았고, ■■■항공 여행사 등 9개소가 폐업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여행업에 대한 적기 관리 소홀로 ○○○○항공 여행사 등 15개소는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 유무 및 보증보험 가입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51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54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경찰서 등에서 통보된 위반 건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 제출기간 등을 통지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 전에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행정 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 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제3항에는 처분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청소년 주류판매)로 ○○경찰서에서 통보된 □□□□ 편의점 등 17개소에 대하여 지체없이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처분하여야 했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의 사법기관 최종 처분 결과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17개소의 편의점 및 마트에 대하여 30일에서 최대 90일 이상 사전처분 통지를 지연 처리하였고, △△ 편의점, □□□□□□, ■■□□24시 편의점 등 3개소는 처분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미제출 했음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일 ~ 30여일이 지난 후 행정처분 하였으며 또한 의견을 제출받거나, 사법기관의 사건 처분 결과가 확정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5개소는 행정처분을 30일 이상 지연처리 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서에서 통보된 △△ ○○○○점 외 6개소에 대하여 지체없이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처분하여야 했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의 사법기관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최대 80일까지 사전처분 통지를 지연처리 하였고, 사법기관의 사건 처분 결과가 확정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을 지연처리 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2

공장설립승인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제조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 업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전자 외 10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등 공장설립 승인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종합감사가 시작되자 ○○전자 외 4개 업체는 공장설립 승인취소(2017. 4.27.)하고 △△정공 외 5개 업체는 공장설립 승인 취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주)○○외 58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등 공장설립 승인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③ △△군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 등 17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등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3

대부중개업 관리업무 소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제1항, 같은 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같은 법 제21조(과태료)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대부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 등은 대부금액,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의 수,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 대부 중개현황, 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6월 30일, 12월 31일 기준)마다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별표3〕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1차 위반시)를 부과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기한내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상당기간 지연하여 처분하였으며, 2016년도 상반기 미제출 업소 중 3개소는 연락두절(1개소), 우편반송(2개소)을 확인하고도 등록취소를 위한 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를 하지 않았고, 자진 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6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대부업 영업자 영업보고서(실태조사서)를 매분기마다 제출받으면서 2015년 상반기 23업체, 하반기에 16개 업체, 2016년 상반기 17개 업체, 하반기에 4개 업체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업체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 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달 말일 이후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에 소홀하였음

54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점검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을 하여야 하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0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4]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 수용가에 대하여 개선명령 통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개선명령을 통보한 이후 개선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선명령을 위반한 부적합 수용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4년 ~ 2017년에 ○○○○○○○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 일반수용가 754가구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통보한 이후 개선하지 아니한 일반수용가 352가구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전기공급 정지요청 등을 하지 않는 등 전기설비 부적합 대상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 수용가에 대하여 개선명령 통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개선명령을 통보한 이후 개선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선명령을 위반한 부적합 수용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 수용가 26가구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통보한 이후 개선하지 아니한 일반수용가 26가구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55

직업소개사업소 지도감독 소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 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에 대해 각각 연간 1시간씩 교육훈련을 하여야 함

■ 지적사례

① 직업소개사업소 지도단속 소홀

- ○○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4회의 단속시 총 20개 업소의 지도단속 점검표를 기재하면서 규정상 표시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항목을 “해당무”, 12개 항목 전체를 “확인”으로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은 기재를 누락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했는지,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점검결과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구에서는 직업소개소 점검을 시행할 시에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24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 4분기 지도점검 시에는 구인구직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적사항이 있어 1차 경고 후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경고, 2차 등록취소를 해야 함에도 지도단속 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공제가입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

- △△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6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관리 소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의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 반납)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3만원, 2차 위반 시 5만원, 3차 위반 시 7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47일을 초과한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催告)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25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3년이 지나도록 반납 촉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催告)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42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반납 촉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감사(사전조사)기간에 인지하여 2019. **.**.이 되어서야 과태료를 부과(사전통지)하는 등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57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 관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를 설치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며, 또한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5m 이내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지적사례

①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설치 소홀

- ○구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 117개소 및 노외 주차장 52개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노상주차장 26개소 43면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ㅎ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개소 6면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구(○○○○과)에서는 공영주차장 108개소 중 24개소에서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50면을 부족하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 ○○○○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84개소 중 24개소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60면을 부족하게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② 주·정차 금지구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 구획 설치 운영

- □구(▷▷과)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중인 26개 55면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구획선(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4개소 4면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차구획선(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구(○○○○과)에서는 공영주차장 7개소에 23개 주차단위구획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9개소에 24개 주차구획(면)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58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1]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로 최저보유 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최소 등)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기준) 제1항 [별표1]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 전부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3항, 같은 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제2항,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환수조치와 별개로 1회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례

①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 ○○구 ○○○○과에서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이 경과된 주○○ 등 16명에게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이를 미이행 시 1차에 사업 전부정지(30일), 전부정지 처분 후에도 차고지 미확보 시 허가 취소 등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차고지 기간 만료 안내문만 발송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구 ○○○○과에서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이 경과된 ○○○ 등 91명에게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이를 미이행 시 1차에 사업 전부정지(30일), 전부정지 처분 후에도 차고지 미확보 시 허가 취소 등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차고지 기간 만료 안내문만 발송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화물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 □□구 ○○○○과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화물운송차량 인천△△자△△△△ 외 11대가 173회에 걸쳐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2,845,640원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부정수급자 12명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에 상응하는 환수조치 및 행정상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구 ○○○○과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화물운송차량 인천**바**** 외 62대가 315회에 걸쳐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6,485,510원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부정수급자 63명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에 상응하는 환수조치 및 행정상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59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에 따라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수출 말소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자나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임시운행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제12호에서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서 정하는 [별표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서는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20일이 경과한 때에는 폐차 또는 매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지적사례

① 자동차 수출이행신고 미신고업체 관리 소홀

- ○구 □□□□과에서는 수출 말소등록 이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 68대가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50만원)이 초과되었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기간 전(2018년 2월, 3월)에 확인하여 과태료를 지연하여 부과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행신고 미신고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구 ○○○○과에서는 수출 말소등록 이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 99대가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50만원)이 초과되었음에도 과태료를 1년이상 지나 부과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행신고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②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관리 소홀

- □구 □□□□과에서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8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감사기간 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구 ○○○○과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요청을 촉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소홀

- ▽▽구 ○○○○과에서는 ' 14. 2월부터 ' 16. 12월까지 무단방치자동차 71대 중에서 강제처리한 17대를 제외한 54대를 인천시 관내 4개 폐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구 ○○○○과에서는 2016년도 무단방치자동차 672대중에서 자진처리한 494대를 제외한 178대를 인천시 관내 6개 폐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60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 행정처분 소홀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주차금지의 장소 위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구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마**** 외 7대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구 견인보관소에 장기 보관하고 있는 □□보 □□□□ 등 5대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61

기존 위생자 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등) 제1항 제6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 및 제3항 제1호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제3항 제2호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의 관련 법령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2016년~19년까지 기존 위생자 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된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법령에 의한 과태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처분이 불가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영업소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2015년~17년까지 10개소의 업소가 기존위생자 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된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법령에 의한 과태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처분이 불가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영업소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2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에 의한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보건소에서는 1.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2.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등 4. 일반의료 폐기물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등이 해당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되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의거 보건소는 의료폐기물을 보관 시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배출량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입력관리를 수집·운반업체에게 맡기는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의료폐기물의 “보관시설 세부기준”에 따라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확인결과 청사 지하 계단 빈 공간에 보관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② □□군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위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입력관리를 수집·운반업체에게 맡기는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의료폐기물의 “보관시설 세부기준”에 따라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확인결과 청사 지하 주차장 일부분에 구획시설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63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횟수 관리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4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종류별 소독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하고, 소독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통해 소독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행정조치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소독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소독 횟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에서는 소독업체로부터 소독 실적을 수시로 받아 정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소독 횟수(연간3~9회)가 부족한 경우가 있음에도 소독실시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6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에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7조(개선기간)에 따라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11조의2(과징금 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의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위반 횟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같은 법 제40조의 건강진단 등 위반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를 미적용(1건)한 사실이 있으며, 과태료 감경사항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 2)호 및 라. 2)호를 미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1/2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홀히 하였음
- ② □□군 □□□에서는 2016. 6월부터 2017. 6월까지 식품접객업소 건강 진단(보건증) 미 실시 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다르게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숙박업소 내 객실·침구 등의 청결상태 위반 5개소, 숙박업 신고증 미게시 1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 처리하면서 경고 처분만 실시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공중위생법 처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5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식품판매기영업 등의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신고업종에 맞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라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 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또한 2016년~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기준에 의하면 시·군·구는 관할 지역내 설치된 모든 자판기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2016년~2018년까지 식품자동판매기 93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 내역 확인 결과 2016년도에는 11개소 점검, 2017년도에는 32개소 점검, 2018년도에는 5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6~2017년도에는 계획수립은 하였으나 점검 결과가 없으며 2018년도에는 점검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과에서도 2016년~2018년까지 식품자동판매기 83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 내역 확인결과 2016년도에는 25개소 점검 2017년도에는 0개소 점검, 2018년도에는 8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7~2018년도에는 점검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2016년~2017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통하여 연1회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6년도에는 185개소 점검을 통하여 50개소, 2017년도에는 199개소 점검을 통하여 41개소의 폐업 또는 멸실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재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보고에 관한 사항

-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의하면 안전상비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항에 의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 등 각 호의 사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을 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 신고 등)에 의한 폐업신고 또한 동일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2016~2019년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15개소의 등록업소 중 4개소에 대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를 누락하는 등 행정처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군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8개소 및 폐업 업소 2개소에 대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미통보(6개소), 지연 통보(4개소) 하는 등 행정처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67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 ◇◇소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구비의무기관 483개소를 관리하면서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중앙응급의료포탈 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83개소 중 40개소에 대해서는 점검기간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있는 등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군 ○○○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49개소를 관리하면서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점검 여부를 중앙응급의료포탈 시스템에서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8개소에 대해서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선박 등 30개소에 대해서 신고서 등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중앙응급의료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68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휴·폐업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휴·폐업 처리를 하여야 함(2017. 6. 21일부터 시행)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및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확인
 2.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환자 전원조치 여부 및 휴·폐업 게시 안내문 여부 등 확인
 - 가. 폐업 또는 휴업 게시 예정일자
 - 나.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다.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라.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의료법」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3조(시정명령 등) 및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하는 경우 위반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지적사례

①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 ○○구(보건소)에서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총 25건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서’를 교부하면서 ‘처분사항’, ‘지시사항’ 중 이행기한과 내용을 명시하였음에도 그 기간 이내에 결과를 제출받지 않았고 이행확인을 지연하여 행정처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② 의료기관 휴·폐업 관리 부적정

- □□구(☉☉☉)에서는 2017. 6. 21일부터 2018. 2. 28까지 총 11개소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면서 3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안내문 전체가 미게시 되었으며 7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안내문 게시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게시되는 등 의료법제40조 제4항 제3호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폐업신고를 처리하는 등 행정처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구(보건소)에서는 2018. 10월부터 2019. 6월까지 총 7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한 휴·폐업신고를 처리하면서 「의료법」 제40조 제4항 제3호에 대한 철저한 확인없이 폐업신고를 처리하는 등 행정처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69 시설공사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예산 절감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지적사례

① 토사 반출 운반거리 설계변경 소홀

- ○구에서는 토사 반출 운반거리 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서에 토사 반출량은 총 5,040㎥으로 사토장은 명기하지 않고 운반거리 10km 반영 하였고, 공사 착공에 따른 토사1,980㎥의 반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승인으로 운반거리 10km 토사를 반출하였으나, 나머지 잔여 반출토사 3,060㎥에 대하여는 운반거리 4km에 위치한 ㉠㉠동 ㉡㉡완충녹지로 감사일 현재 토사 60%를 반출 하고도 운반거리 단축 실정보고를 통한 감액 11,715천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하지 않았음

② 가설방음벽 설치비 과다 설계

- □구 가설방음벽[H3.0 * W2.0 (방진막H1.0 * W2.0)] 설치와 관련하여 일위대가산정시 표준품셈에는(가설방음벽) H형강 지주 설치품은 10m당 기준 [지주간격2m(가설 방음벽 10m당 5개 설치)] 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 가설방음벽설치(100%설치) 감사 결과 지주간격을 표준품셈과 동일하게 2m로 설치하였으나 ●●체육공원 조성공사 가설방음벽 설계내역서에는 H형강 지주(지주간격 1m/가설 방음벽 10m당 10개 설치)가 과다 설계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8,547천 원(제경비 포함)을 실정보고를 통한 감액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음

③ 오탉방지막 원가산정 부적정

- 해상의 오탉물질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오탉 방지막 22span(1span: 20m×1m×20ton) 설치 및 철거 공중에 대하여 설계 내역서에 견적서로 계상하면서 견적서 포함된 제경비 10,610천원(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제외하고 내역서에 계상하여 원가 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견적서에 포함된 제경비를 제외 없이 내역서에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④ 동바리 자재 변경 및 추락방지망 미시공 물량 정산조치 미이행

- 교량공사의 상부 슬라브 하부 버팀 동바리에 대하여 설계상 목재(406공/㎡)를 사용토록 내역서에 계상하였으나, 현장 시공에서 상대적으로 시공단가가 저렴하고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강관(406공/㎡)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교량 주요 구조체인 A1, A2, P1, P2, P3에 대한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강관) 1,858㎡를 계상하였으나 시공 사진 확인 결과 현장 여건상 설치가 필요한 우측만 낙하물 방지망(강관) 1,024㎡를 설치하고 좌측 834㎡(27,380천원)은 미 설치 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동바리 자재 변경 및 추락 방지망 미 시공 물량 정산에 대하여 설계변경(감액 38,370천원)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70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62조(준공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개발행위지침 2-1-2에 따라 개발행위의 목적·종류,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허가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및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도시계획조례 제26조(2016. 9. 25. 이전)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5-1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이전, 원상회복 또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 등)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2014. 1. 1.~2017. 1월까지 총 82건의 개발행위를 허가처리(협의)하였고, 그 중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로 처리된 80건의 경우, 허가기간을 명기하지 않은 채 협의(허가처리)함은 물론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수허가자와 허가권자 모두 허가기간에 대한 인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일(2017. 4월) 현재 미준공된 18건 중 6건의 행위가 기간을 도과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내용안내 및 변경허가(기간연장 등) 등의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발행위 허가 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군(△△△△△△)에서는 2016년 ~ 2018년까지 ◎◎면 ◇◇리 ***-*번지(330㎡) 등 547건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으나 2016년 26건과 2017년 2건 등 총 28건의 허가기간 만료와 1개월 ~ 10개월이상 이행보증서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기간 만료·준공검사 안내, 이행보증증권 연장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71 건설기술자 배치 등 현장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5-4-가(공사현장대리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되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벌칙)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구에서 발주한 총 68건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건설기술자 총 151건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구로부터 건설기술인협회에 제공된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업체에 일정기간 소명 및 의견청취 후 최종 확인한 결과 88명의 건설기술자는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①타 현장과 이중 등록(현장이탈 20건, 미배치 7건)된 사례 총 27건이 확인되는 등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확인되며 그 외 ②건설기술자 경력신고사항에 공사명 미기입 사례 27건 ③건설기술자 경력 과다 신고 등 사례 8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하도급사 건설기술자 중 자격 미달자가 있음에도 원도급사간 계약을 하고 발주처에 통보하였고, 발주처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부적격자인 경우 건설기술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자격조건에 필요한 입증자료(자격증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승인한 사항이 있으며, 감사일 현재 무자격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시도를 달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3개 현장까지는 이중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중배치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일부 시공사는 타현장(현장 이중배치로 확인)과 중복되어 결과적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 발주한 총 154건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건설기술자 250명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협회에 제공된 경력증명서 확인 및 해당 업체에 일정기간 소명 및 의견청취를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117명의 건설기술자는 적정하게 배치 되었으나, ①타 현장과 이중 등록된 사례 35명(이중배치 불가 대상 12명, 발주처 승인없이 이중등록 23명), ②건설기술자 무자격자 배치 2명, ③건설기술자 경력신고사항에 공사명 미기입 77명 ④건설기술자 경력 과다 신고 19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설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관련 법률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시·도를 달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3개 현장까지는 이중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공사는 이중배치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중배치 하였으며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의 시·도 또는 인접 지역인 경우 공사 업체는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하고,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추진 과정상 안전문제 및 건설시공 등 종합적인 검토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의 절차를 거쳐 이중배치할 수 있음에도 발주처의 승인없이 이중배치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음

하도급사 건설기술자 중 자격 미달자가 있음에도 원도급사간 계약을 하고 발주처에 통보하였고, 발주처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부적격자인 경우 건설기술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자격조건에 필요한 입증자료(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승인하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2

공공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미 이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및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변경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함
- 또한, 동법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지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함

지적사례

- 구에서는(○○○○과)에서는 각종 공공사업 준공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사항을 매년 토지의 이동 현황에 대한 소관청 직권 조사계획 수립에 포함하고도 공공사업 준공 현황 내역 조사를 소홀히 하여 2015년 11월 준공한 ○○동 ▲▲로 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 26필지 7,557㎡에 대하여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5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공사의 준공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완료된 7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의 누락으로 변경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여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음
- 구(◆◆과, ■■■과)에서는 “□□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의 2건 60필지 7,616㎡(2,303평)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 되었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해당 지적 소관청 (서구청 ▽▽▽과)에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아 도로노선이 1필지로 합병 관리되어야 하나 여러 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아울러, 변경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이 불일치 하여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어렵게 하였음



73

도로 굴착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도로법시행령」 제7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도로점용료 징수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지방세법」 제28조(세율)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2019년 도로점용허가(차량출입시설 및 지하매설물)에 따른 점용료 정기분에 대하여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2019.*.**. 부과하여 감사일 현재 체납율이 29%로 2018년 체납율 8%의 3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할 ㄴ 점용료 등 10건/51백만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에서 누락하여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지하 매설물 및 차량 진입로·출입로 등)에 따른 점용료 정기분에 대하여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2016년~2018년 도로 점용료(지하 매설물) 정기분을 지연 부과 하였으며, 2017년~2018년 도로 점용료(차량 진입로·출입로) 정기분을 지연 부과함으로써 관리청의 일관성 없는 도로 점용료 부과 행정으로 도로 점용 허가자들의 점용료 부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74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종점, 주요 통과지를 포함하여 구도를 지정·고시 하여야 하고,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관내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권한의 위임) <별표 3>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무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제1항 <별표 1>에 따라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도로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구도 180건 35,591m에 대한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하면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하지 않았고 토지 10필지(면적 24,499.7㎡)의 소유권이 1994년에서 1998년까지 ○구로 이전이 완료되었고, 사실상 도로로 이용·관리되고 있음에도 감사기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이나 도로 지정 등의 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청에서 매년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도 일부 누락되어 있었음
- ② □구의 도로 미결정(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초로 일원 등 6개소(1,962m, B=5~9.5m)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보니,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청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대상에도 누락되어 있는 등 도로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7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①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④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군수,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하여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청장이 시행중인 ‘○○동 ◎◎체육시설 건립공사’와 2건은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경과되도록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 실효된 상태이며, ‘○○동 ***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선 착공한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2015. 12월부터 2016.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 ○○○○시설 설치사업” 등 5건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6 보도정비공사 관련 사항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1.7.26. 시행)」 2-10(유지관리)에 따르면 보도 포장은 10년 이내에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보도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 관리심의회의 설치 등)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도의 포장 상태는 평탄성을 근거로 평가하여 보도 포장의 보수 수준(교체 또는 일상보수)을 결정하고, 보도의 포장 상태 조사는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등 보도가 연속적으로 설치된 구간을 평가대상 구간으로 하고 종 방향 길이를 0.6m 마다 단위구간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2014. 4월부터 2017. 3월까지 총 13건의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잦은 민원발생, 주민건의사항 등의 이유로 지침에 따른 “보도 포장 상태평가”없이 보도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 외 1개소 인도 정비 공사” 등 12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도정비 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과)에서는 2014. 6월부터 2017. 6월까지 총 15건의 보도포장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육안검사에 따른 노후 및 평탄성 불량 등의 사유로 지침에 따른 “보도포장 상태평가”없이 보도교체 사업을 시행하였음



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계상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함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 2015. 4월부터 2018. 3월까지 시행한 ‘◇◇◇◇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9건의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국세청에 미 신고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정산 준공하여 총 53,238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2014. 6. 19.부터 2016. 12. 30.까지 ‘□□구 청사·의회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을 준공하면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정산 준공하여 34,555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③ △△구에서는 4건의 사업준공시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정산하면서 도급자가 과다 청구한 사용실적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12,372천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음
- ④ ▽▽구에서 2015. **월부터 2017. **월까지 시행한 ‘○○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의 7건의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국세청에 미 신고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정산 준공하여 총 50,568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78 소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소하천관리청은 소하천 등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관리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하천정비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관리청은 소하천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소하천 등 정비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소하천정비 중기계획과 소하천(소하천 시설을 포함)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군에 설치된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과)에서는 2013년 소하천정비(스천, ㄷ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추진하지 않았으며 스천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소하천 중기계획과 소하천정비시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같이 2016년 소하천(스천) 및 스교 정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음
- ② □□군(○○○)에서는 관내 52개소(L=65.53km)에 대한 중기계획수립 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소하천정비 중기계획(변경)과 2017년 소하천 중기계획 수립(2019년~2023년)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고 시 수질환경과에 제출하였으며.◆◆면 ○○천 정비공사 등 6건은 인·허가의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면 ■■천 정비공사 등 3건은 준공 시 준공 협의 및 완료고시를 하지 않았음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따라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② 연도별 활성화 계획, ③ 사업비 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의 기능은 활성화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 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지적사례

- ① ○○구(○○과)에서는 20**.*.20. 활성화 계획(* 15 ~ * 17)을 수립한 이후 예산 미확보, 경제청 환원사무, 지방물예 따른 사업 불가 등의 사유로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변경 시행하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2013.9.11. 최종 구성한 위원회의 임기가 2015.9.10.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20**.*.21. 제*회 위원회〔안건: 0000 선출 및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안) 보고〕를 개최하였고, 20**.*.30. 제*회 위원회를 개최(안건: ○○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추진계획)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2년~2017년 현재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였음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특히 이번 수감기간(2014년~2017년 현재)에도 자전거도로 및 이용활성화 관련 각종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심의·의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 ③ △△구(○○과)에서는 법 시행일인 2009.12.29.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과 조례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없이 최근 3년간 총 6건(504,934천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80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제1항에 따라 준공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자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제7호 및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7]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7]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례

① 지하수 허가연장 안내 소홀

- ○구 ◆◆과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수 이용 허가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안내를 하고, 미 연장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허가시설 5건 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4건의 연장신청 안내와 미 연장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대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군(○○○)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수 이용허가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안내를 하여야 하며, 미 연장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5년~2019년 2월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67건 대한 연장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지하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② 지하수 허가·신고시설 이행보증금 예치 관리 소홀

- □구 ◇◇과에서는 지하수 허가·신고시설 이행보증금 미 예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이행보증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총 45건의 지하수 이용허가·신고건 중 이행보증금을 미 예치한 28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군(○○○)에서는 지하수 허가·신고시설 이행보증금 미 예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이행보증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2015년 ~ 2019년 2월까지 미납된 이행보증금 57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구(㉠과, ㉡과)에서는 지하수 이용허가·신고 4,629개소 중 이행보증금이 미 예치된 2,753개소에 대한 이행보증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③ 지하수 허가·신고시설 정기수질검사 미 실시자에 대한 조치 미 이행

- □구에서는 관내 수질검사 관리대상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지하수가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총 45건 중 수질검사 제외대상 13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군(○○○)에서는 2015년 10월~2019년 2월 동안 34개소가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미부과 등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구(㉠과, ㉡과)에서는 수질검사 제외대상 594개소 이외의 정기 수질검사 대상 44,035개소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136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81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 시설임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하수관거 설계 시에는 시공이나 사업 준공 시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CCTV조사 등을 설계 내역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음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 성과의 심사) 제3호에 따르면 도로 기반시설물(지하구조물)에 대한 공공측량 실시 후 성과심사 성과물(준공도면)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스 정비공사”의 2건을 시행하면서 관로 접합 및 경사 등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이므로 관로 내부시공 품질관리를 위하여 CCTV 검사비를 설계내역에 계상하여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설계내역에 CCTV 검사비를 계상하지 않아 검사 기록 영상을 남기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다른 도로 점용허가(지하매설물) 사업자가 도로 굴착 시 하수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설치공사할 때는 관로 상단에 경고테이프를 설치하고 되메우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스 정비공사”의 2건에 대하여 하수관로 보호 경고테이프 설치 없이 준공하였고 “ㅎ 설치공사”의 2건에 대하여 도로기반시설물(하수관로)을 설치하면서 공공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하였음
- ② □구(□□과)에서는 ㄱ 도로개선구간 외 1건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에 CCTV 검사비를 계상 하지 않아 검사기록 영상을 남기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ㄱ 도로 개선구간 외 1건에 대하여 하수관로 보호 경고테이프 설치 없이 준공하였고 ㄴ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하여 도로기반 시설물(하수관로)을 설치하면서 공공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하였음



82 건축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9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공사 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1 ○○군 000 조성공사(토목) 시공자인 (주)○○○○○○○은 '16.11.17. 설계에 누락된 수목 별개제근 및 이로 인한 임목폐기물 처리비 증가, 수목 조달 곤란에 따른 식재계획 변경(측백나무 500주 삭제) 등에 대한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며, ○○군은 '16.11.24. 이를 승인하였는데 시공자가 실정보고한 별목대상 수목은 직경 20~50cm의 양호한 형상의 수목으로서 000 조성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16.*월, 000)시 기존 수목(교목)들의 훼손을 전체 배제하고 수목들 사이의 빈 공간에 야영데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하였음에도 민원해소 및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제거하고, 뿌리와 줄기부를 제외한 원줄기(수간부)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51-20폐목재류)에 의하면 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비 절감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하여 직접공사비 약 450만원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 □□군은 당초 조성사업 도급계약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온천공(**면**리 ***번지)으로부터 온천체험시설에 이르는 온천수 이송 관로 약 3km〔재질 :수도용 PEM관 D75(90)〕를 설치토록 '15.4.17. 시공자와의 협의를 거쳐 '15.4.30. 설계변경 하였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양수하는 시설(펌프), 제수변·중계 펌프 등을 이용한 온천수 이송 관로의 구간별 조닝, 이송 관로의 세부 접합방법 및 연결부 시공 적정성 시험방법 등이 설계도면·시방서 등에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전구간을 수도용 PEM관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내역서만을 작성하였음

83 가설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알려주어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함
- 또한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건축물이 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과)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동 ○○○-○○번지 상 가설건축물(임시창고)등 4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사항 및 시정내용 등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 △△과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 124번지 상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등 225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가설건축물의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 등을 기록하지 않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③ △△구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 되어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동 ***-*번지 상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창고) 등 9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가설건축물의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의 기록 누락 등 가설건축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판매 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 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그 시설물 내부나 그 부지에 설치되지 않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4(부기등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방법설비 설치·관리 대상인 건축물(업무시설) 등 4개소에 대하여 2018년도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2019년에는 상기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축물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한 22개 건축물과 부설 주차장 토지에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인근지 부설주차장 소유주 등에게 부기등기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거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구(○○과)에서는 방법설비 설치·관리대상인 □□구 □□동 ○○○-○번지 상 건축물 (업무시설) 등 6개소의 부설주차장 방법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주차장 범죄예방 등 주차장 안전을 위한 방법설비 설치·관리 여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 △△△-△△번지 건축물 등 건축물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한 4개 건축물과 부설주차장 토지의 소유권 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인근지 부설주차장 소유주 등에게 부기등기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거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85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에 규정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아울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면 **리 ****-*번지(**로 ***)등 21개소의 축조신고 미이행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조례 제3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약 19,204천원이 부당하게 적게 부과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위반 부분의 시정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② □구 ㉠㉠과에서는 19개소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기 개정되어 삭제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45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 산정·부과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징수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86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 인증을 받은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검사(유효기간 3년) 및 정기검사(유효기간 2년)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규정에 의해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검사 유효기간 : 2015.5.21.)등 16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기계식 주차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관리인이 미 배치 되어 있는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과)에서는 검사유효 기간이 지난 **동 ○○○번지 기계식주차장(검사 유효기간:2016.1.9.)등 18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없이 방치한 후, 2017.8.4. 정기검사를 이행토록 시정지시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③ △△구 ○○○○과는 관내 ○○동 ○○○-○○번지 다단식 기계식주차장 등 47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최대 4년 8개월에서 최소 3개월이 경과되도록 정기검사(안전도인증)를 받지않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종합 감사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87

다중이용건축물 등 안전점검 관리업무 소홀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전까지 미리 알려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파)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동 ○○○-○번지 등 5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을 알 수 없었으며,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동 △△△-△번지 상 건축물 등 8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아무런 행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2017.1.31. 정기점검 대상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동 □□□-□번지 등 13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② □구 △△파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 290-* 번지 등 14개 건축물에 대한 점검유효기간을 알 수 없었으며,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아무런 행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2017.1.10. 정기점검 대상임을 안내하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 292-*번지 등 21개 건축물(불임)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88

장기 미사용승인 및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관련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착공신고)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 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80조(이행 강제금)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허가 52건에 대하여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착공 신고일로부터 최대 13년이 경과되도록 착공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허가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착공연장기간이 경과한 13건의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하여 종합감사가 도래된 2017. 5. 2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는 등 건축 허가권자의 의무사항과 합리적 관리감독 업무이행을 소홀히 하였음
- ② □구에서는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건축물 착공 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전 사용한 2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지 않았음

89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는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가공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⑤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에는 구청장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등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및 제8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에는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시설 및 업종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에는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무상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는 [별표1]에 따라 시설 및 업종에 따라 분기, 반기, 년간으로 구분하여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는 2016, 2017, 2018, 2019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② □구(◎◎과)는 2016, 2017, 2018년도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계획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0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가로수 조성·관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청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노선별·수종별로 매년 11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매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하도록 함
- 같은 법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자가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74조(벌칙)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는 고발조치를 함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함에 병해충 발생, 물주기, 가로수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신원불상의 교통사고 등 감소요인이 있었음에도 관리대장에 미기재되어 있는 등 가로수 관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행위자가 가로수를 고의로 제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원상복구(훼손자부담금 징수)로 인해 미 고발한 사실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는 원인불명 고사목을 제거(○○○로 등 7개 노선, 단풍나무 등 5종 41주)한 후 보식이 되지 않았음에도 가로수 관리대장 현행화를 소홀히 하였음

9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제35조(건물 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에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69조(보고·검사)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2015년 오수처리시설 점검대상 2,328개소 중 2,278개소, 정화조 78개소 중 7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 오수처리시설 1,964개소 중 1,904개소, 정화조 14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에는 오수처리시설 2,652개소 중 2,620개소, 정화조 7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2016. 4.부터 2019. 11.감사일 현재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후 적합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준공 검사 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항 또는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4조(점용료)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구(○○○○과) 공원·녹지 점용허가 대장에는 1995년 개청 후 설치된 개폐기 및 변압기 등에 대하여만 허가 등재 되어 있고, 개청 전에 공원·녹지 지하에 매설된 전력구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대장에서 누락되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감사기간 동안 개청 전 공원·녹지 지하에 매설된 전력공급시설 현황을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검색 결과 관내 전기공급시설 점용면적이 1,205㎡(도시공원 20㎡ 및 녹지 1,185㎡)로 파악되었고, 이와 관련 2018년 ○○○○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공원·녹지 점용료 납부를 위하여 구에 신고한 전기공급 시설 점용면적은 142㎡(도시공원 11㎡ 및 녹지131㎡)으로 이를 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장과 비교하면 1,063㎡(도시공원 9㎡ 및 녹지 1,054㎡)부족하게 신고 되었는데도○○○○과에서는 지하에 매설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점용허가대상 시설을 GIS에 입력된 자료 확인 없이 전기공급 사업자가 축소 신고한 점용 면적과 점용 허가대장 허가 면적을 관례적 그대로 적용 공원·녹지 점용료를 부과하여 변상금 징수 소멸시효 5년 및 2018년 점용료 등 175,550천원(변상금 145,199천원, 2018년 점용료 30,351천원)을 부과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음
- ② □구(□□□□과)에서는 공원·녹지 지하에 매설된 점용허가 시설을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된 자료 검토 없이 전기공급 사업자 한국◇◇◇◇인천지역본부 및 □인천지사(161㎡/누락), 통신 공급 사업자 ●●●□인천지사(36㎡/누락) 등에서 누락(부족)하여 신고한 점용 면적을 관례적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산출에 적용하여 40,000천원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청 청라지역 공원·녹지를 관리이전 받으면서 지하 점용허가 사항(대장)까지 더불어 인계받아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원·녹지 지하에 매설된 점용허가 시설을 GIS 입력된 자료 검토 없이 관리이전에서 인계받은 누락된 점용허가 대장으로 지하에 매설된 전력구(338㎡/누락), 통신공급 시설(156㎡/누락), 가스공급시설(172㎡/누락) 등을 공원·녹지 점용료 산출에 적용하여 113,000천원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였음

93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자, 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 2014년 ~ 2016년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을 살펴 보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점검 횟수를 준수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미준수하고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2015년 폐기물(지정, 의료, 세탁, 건설, 사업장 등) 배출자 점검 대상 1,887개소 중 1,689개소, 2016년 폐기물(지정, 의료, 세탁, 건설, 사업장 등) 배출자 점검대상 1,933개소 중 1,819개소, 2017년 폐기물(지정, 의료, 세탁, 건설, 사업장 등) 배출자 점검대상 2,063개소 중 1,6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94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인천광역시 □□구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만료 후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② □□구에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6건을 살펴보면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2개월 ~ 4개월 넘게 지연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A 외 2건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95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검수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III. 세부시행지침, 1.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시스템 도입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금지, 종량제 봉투의 검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계약된 종량제 봉투(생활, 음식물)의 전량이 제작 완료되어 인수·입고시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나, 2015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총 **회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서 시험분석 기간이 수일 요구된다는 사유로 제작기간(제작기간 약 40~50일 소요) 중 검체를 채취하여 분석의뢰 하였으며, 제작완료를 통보 받은 후 계약된 물품 전량을 인수하여 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구에 보관창고가 없다는 사유로 제작업체인 ○○산업창고에 생활폐기물 봉투 3,536,800매, 음식물 봉투 280,000매를 임의 보관하면서 필요시에 제작업체에 요청하여 분할 입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음
- ② □구 ■■■■■과(2015년) 및 △△△△과(2016년 ~ 2018년 4월)에서는 계약된 종량제 봉투(생활, 음식물)를 23회에 걸쳐 제작하면서, 종량제봉투 전량이 제작 완료되어 인수·입고시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나,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회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납품 전 시험분석을 의뢰하였고, 2015년에는 4회에 걸쳐 납품된 쓰레기 봉투에 대하여 검수를 하지 않았고, 시험분석이 완료되기 전 10회에 걸쳐 검수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96

수목 부적기 식재 및 하자검사 관련

- 국토해양부 조정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수목 “식재”란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시방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준시방서 제4장 표4-1(식재 적기판단기준)에 따르면 중북부지역(경기북부)은 3월 20일부터 5월 25일과 9월 25일부터 11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정표준시방서에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하며,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2015년~2017년 조정(수목) 식재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하여야 함에도 수목 식재 부적기에 13건(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4건)을 시행 하였고, 예산편성 기준일부터 6~11개월 지연하여 11월~12월 착공·준공한 사업도 6건 등으로 조정표준시방서 식재 적기판단기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목 활착에 지장을 주는 등 하자검사 실시결과 13건 중 9건의 고사목(하자) 발견하였으나 이 중 1건만 하자(고사목) 통보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상없음으로 결과 통보하는 등 수목의 부적기 식재 및 수목 사후관리(하자검사)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② □□구(○○○○과)에서는 2015년~2017년 조정(수목) 식재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를 하여야 함에도 부적기에 수목 식재사업 8건(2016년 4건, 2017년 4건)을 시행하여 2017년 6월~12월 착·준공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수목 식재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최저기온이 영하 11.1℃인 2017.11.19.~12.16.까지 교목 91주(소나무, 이팝나무 등) 및 관목 4,820주(피라칸사스, 조팝나무 등)를 식재하였고, 2017년 11월~12월 착·준공한 ○○동 쉼터 조성공사 수목 식재는 최저기온이 영하 3.4℃인 2017.12.6. 교목·관목 1,407주를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식재 한 사실이 있음

97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의무사용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및 예상 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권고 및 시정조치)에 의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같은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건의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를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ㄱ 하수관로 개·보수공사(2017.6.13. 착공)'와 'ㅇ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2018.5.19. 착공)'의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40% 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과에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 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를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98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하수도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규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준공검사 적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0일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방류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방류수 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과에서는 준공검사 적합 통보된 2개소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오수 처리시설 준공 후 사용지연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이행치 아니함
- ② □□군에서는 2017년 707개의 오수처리시설 준공처리를 하면서, 제작제품 또는 일일 처리용량 50㎥ 이상 43개소에 대하여 기한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5개소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38개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9 지하수 개발·이용자 시설 관리 부적정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신고한 자로서 음용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를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용수는 2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 290개의 지하수 중에서 수질검사 비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226개에 대한 수질 검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음용수, 생활용수 등 29개가 수질검사 대상으로 확인 되는 등 수질검사 대상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음
- ② □□구 ○○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 99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 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허가시설 2개소, 신고시설 105개소 등 총 107개소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0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조(지도·점검대상사업장)에는 점검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같은 규정 [별표1]과 같으며, 같은 규정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에는 점검기관은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①우수관리: 최근 2년간의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②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③중점관리: 최근 2년 이내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장 및 시설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 따라 업종별, 규모별, 점검 횟수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년 1~2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에 있어서 자체 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 행정처분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하여야 하며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군에서는 폐기물 배출자 분야(○○○○○)에서는 2015년 점검율 2.9%(대상 339개소), 2016년 2.2%(대상 412개소), 2017년 4.9%(대상 387개소), 2018년도 1.0%(대상 369개소)이고, 수질 및 대기분야(○○○○○)에서는 2015년 점검율 37.1%(대상 70개소), 2016년 50.7%(대상 69개소), 2017년 47.3%(대상 57개소), 2018년도 53.2%(대상 77개소)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분야(□□□□□□)에서는 2015년 점검율 1.9%(대상 2,723개소), 2016년 2.0%(대상 2,897개소), 2017년 0.8%(대상 3,003개소), 2018년 0.8%(대상 3,329개소)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② □□구(○○○○과)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4건에 대하여 3일에서 최대 9일을 지연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음

101 어업면허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르면 어업(복합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어장이용개발 계획 등)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워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등)에 따라서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그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해야 하고,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같은 규칙 제47조(어업관리실태의 기록·관리)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관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어업권 관리대장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

지적사례

- ① ○○군수(○○○)는 **호와 **호의 어업면허 처분시 어업권자에게 인천시에서 승인한 승인조건(양식재해보험 가입) 없이 어업면허 처분한 사실이 있어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어업권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지해야 하는데 33건에 대해 도과하여 통지하였고, 어업면허를 받은 자 중 36건은 어업면허 연장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으며, 또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한 경우에도 연장처리 하는 등 어업면허 연장허가 처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음
- ③ △△군에서는 2015년 61건, 2016년 62건을 어업권자로부터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제출 받은 후 2월말까지 어장관리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전자적 방법(새울행정정보시스템)으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는 등 어업권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④ ▽▽군은 어업면허 처분 시 「수산업법」 제69조에 의한 어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처분 하였는 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른 어장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어업면허번호 **호, **~**호, **호 및 **호에 대하여는 어업권자가 제출한 어장관리 실태조사서에 어장의 표지시설 설치표시가되어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어장표시 설치 및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0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소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에 의하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의거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구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2015년도에 49회, 2016년도에 53회 실시하였으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단속건수는 2015년도에 농산물 1건, 수산물 18건이며 2016년도에 농산물 0건, 수산물은 27건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거짓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2015년에 농산물 2건, 수산물은 0건이며 2016년도에는 농산물 0건, 수산물 5건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였음
- ② □□군은 2017~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03 어항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법」 제36조(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 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34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어항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군·구는 군·구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각 「어항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지적사례

- ①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어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어항 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어항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구 ▶▶과에서는 관리중인 7개 어항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어항시설 점검부 및 관리부 기록·유지에도 소홀히 하였음



104 축산물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의하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1항 제4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위생교육기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 지적사례

① 축산물 위생검사 및 지도·점검 소홀

- ○○구 ○○과에서는 연간 위생검사 대상업소 중 33개소에 대한 위생검사와, 지도·점검 대상 업소 중 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구 □□과에서는 연간 위생검사 대상업소 309개소 중 55개소를 점검하고 259개소를 누락하였으며, 지도·점검 대상업소 33개소 중 12개소를 검사하고 21개소를 누락하는 등 위생검사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② 축산물 위생교육 관리 및 행정처분 소홀

- ○○구 ○○과에서는 위생교육 이수 및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음
- □구 □□과에서는 위생교육 이수 및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음

II

직속기관·사업소(17개 기관)



105 기간제 근무자 채용업무 소홀

-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절차)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업무의 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되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 제11조(채용 구비서류와 인사기록)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하여야 함

■ 지적사례

①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 ○○○○○에서는 2017년, 2018년 채용공고에서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의 채용 공고기간(7일)을 준수하지 않았음
- □□□□□□에서는 20○○년 채용공고에서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의 채용 공고기간(7일)을 준수하지 않았음
- ◇◇◇◇◇◇에서는 2015년 1회, 2016년 7회, 2017년 6회, 2018년 4회 등 총 18회 모집공고 중 시·사업소 홈페이지에 다른 날 3회 공고를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초일을 공고기간에 산입하여 7일이 부족하게 공고하였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사업소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전송 및 유선통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5. 1회, 2016. 2회를 합격자 공고 없이 유선 통보만 하였음

② 서류 및 면접심사 배점관련

- ●●●●●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장소에서 근무하는 유사한 업무내용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고 채용하여야 함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 및 근무장소에(자료실, 열람실 등 운영보조)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내부기준을 균등하게 정하지 않고 각 분관 도서관별 또는 시기별로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의 배분 등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소홀히 하였음
- ■■■■■에서는 기간제 채용시 양묘생산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2017년 6회차, 2018년 1·2회차에 실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 ~2018년도 기간 중 매년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배점을 달리하면서 서류심사 항목 중 근무경력 15점 → 30점 → 10점으로, 저소득층 배점은 2017년도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양묘생산, 공원관리 분야의 작업 내용, 난이도, 업무 특성 등이 유사하나 서로 다른 배점 기준을 적용하였음



106

사회교육 강사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은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한 강사확보를 위하여 강사 위·해촉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인천광역시 ○○○○○ 강사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류심사는 강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채점결과 점수 합계가 해당 과목별 최상위 3명을 면접대상으로 선발하고, 과목별 3명 이하일 경우나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1명일 경우에는 강사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모두 면접 대상으로 하고 면접결과 평균점수 8점(만점 12점) 이상인 사람 중 최상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수준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우수강사 확보방안으로 「▽▽▽▽▽ 강사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20**년 사회교육 강사 채용 서류심사’시 ‘ㄱ 자격증’ 과정의 A 강사는 ‘중등 정교사 교원 자격증(정보·컴퓨터)’을 강사지원 신청서에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였으나 개인별 서류 심사표에는 ‘미제출’로 표시하고 자격증에 대한 평가 시 B 및 C 팀장은 “0점”으로 평가하고 D 팀장은 만점인 “6점”으로 평가하였고, 기타(수상경력 등) 교원자격증 이외 아무런 수상경력이 없음에도 기타항목에 E 는 “5점”, F 팀장은 “4점”, G 팀장은 “5점”을 부여 하는 등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음
- ② □□□□는 강사에 대한 서류심사 시 서류 심사표 강의경력(25점), 자격증(10점)의 평가기준 및 입상(5점)에 대하여 각각의 경력 또는 입상 내역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동일한 경력이나 보유 자격증에 대하여 평가자(관장, 실무자) 별로 각각 다른 점수로 평가하였고, 평가기준별로 각각의 배점을 부여 하지 않고 ‘ㄱ’의 경우 강의경력 중 도서관, 방과 후 학교, 대학부설 문화센터 강의 경력 등에 대하여 배점이 20점임에도 관장은 10점, 담당자는 15점을 부여하였고, ‘ㄴ’ 중 A 강사의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사항 배점 10점에 대하여 관장은 10점, 실무자는 9점을 부여하였으며, 입상분야의 경우 총 배점이 5점으로 저서출판 및 장관 이상 수상경력에 대하여 배점이 5점, 논문 또는 자치단체장 이상 수상경력, 5년 이내 전문(보수)교육 또는 봉사활동 3점에 대하여 각각 3점과 2점을 부여하는 등 배점과 상이하게 평가하였음

10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보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내지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파기 또는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영상 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6개 부서에서 190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안내판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이외로 이용·제3자에게 제공·파기 또는 열람한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소홀, 제3자에게 위탁한 개인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 정보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② □□□□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개인영상정보 총 6건을 제공하였으며, 제공한 자료 중 2건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을 누락하였고, 1건은 문서가 아닌 형태로 신청하였는데도 제공하였으며, 또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자료를 기록관리 하여야 함에도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108 부가가치세 납세 업무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사용료) 및 제9조(사용료의 반환)규정에 의하면, 이용자가 소관 시설 중 체육관·생활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전 또는 사용허가일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정일로부터 1일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납부액의 90%만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용료 등의반환)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취소에 대하여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생활체육시설 이용 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1 □□□□에서는 시설물 이용 신청인이 사용취소 후 사용료 반환시 납부한 10% 공제 수입액에 대해 시설사용료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격의 세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세입처리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세액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2016.12.30. 테니스장 출입문 보수 등 14건에 대해 해당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법령에 맞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부가가치세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음
- 2 □□□□는 2014.1.1~2017.5.31.까지 개인사정으로 시설이용 취소한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이용취소 반환 수입금(이용금액의 10%)이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입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681,450원의 부가가치세를 정상납부액 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음

109 금고(계좌) 운영에 관하여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제2항에는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징수결정 통지) 및 제41조(출납원의 수납)에 따라 수입금 출납원은 수납 사실을 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징수관은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결정하고 수입금 출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한 세입 징수결정은 이자발생(통보) 즉시 세입 징수결정 하여야 함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 보관) 제2항에 따르면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에 따라 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세입세출외에 발생하는 현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지연하여 세입조치하거나, 계좌개설 이후 한번도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각 사업별·용도별로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결과 총 2,957,440원의 잔액을 보유하게 되었음
- ② □□□□는 카드 결제계좌, 사회교육 및 체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명의 일반통장(보통예금 통장)을 개설·운영하면서 공공예금계좌 검사 결과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불착오 등으로 인한 카드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에 대한 확인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금액 발생시점부터 4년이 지난 2017.5.18.에 사회교육 및 체육시설 수강료 세입조치를 하였고, 기타 스포츠 시설업(헬스장이용료 등)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년도별 확정 후 남은 부가가치세 보관금을 지체없이 세입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부당하게 장기관 보관하다가 2017.5.23.에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음



110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소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11]에서는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 설정토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시 집행방법을 고려하여 세출 과목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적사례

- 1 □□□□는 2016년, 2018년 ○○○○ 장비구입예산 20,954천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성질별 예산과목을 정확히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재료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설정을 소홀히 하였고 공용차량 ○○○○장치를 2019.6.21. 설치하면서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차량선택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재료비(재료비)로 잘못 지출하였음
- 2 □□□□는 일반보상금(단무운영비)을 지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ㄱ 공연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로 단원 19명의 식비(4식)와 숙박비 등 총 1,266,160원을 채주 A에 카드결제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단원 보상금(단무운영비)에서 동일 날짜에 식비 10만원을 중복하여 지출하였음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및 사무단원들의 공연당일 급식제공 대신 현금으로 개인별 계좌이체를 하였음

11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문별 해설을 보면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성격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적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지적사례

① 연간계획 미수립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에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내역을 미공개하였음
-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2014년, 2015년, 2017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한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8건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113건을 미공개 한 사실이 있음

② 집행 부적정

- ○○○○는 2014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축·부의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하면서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대상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강사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에서는 1건 500천원에 대하여 격려물품 구입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였고 총 3건의 354천원에 대하여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총 11건의 702천원에 대하여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112

행사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업무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되 단,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 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그 외에 외국어 통역비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및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은 일반수용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는 국외경상이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지적사례

- 1 □□□□□ 3개 부서에서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체결 요구 및 계약 체결없이 업체로부터 사업비 교부 청구를 받아 용역 대금을 집행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납부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과 수입인지, 수익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체의 각서, 지역개발채권 등도 첨부하지 않았고, 용역의 착수(산출내역서, 투입인력, 공정표 등)와 완료에 대한 확인 절차와 완료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중국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해외 출장시 중국어 통역 비용 및 홍보기념품 구입비, 시의원 현장 방문에 따른 다과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품목도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목적에 맞지않게 예산을 집행하였음

- ② □□□□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아름다운 관계증진을 위한 000가족 캠프 행사를 진행 하면서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하여 행사운영비 과목에서 집행 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000가족 캠프 행사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행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113 회계·지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에 따라 예산 편성시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예산의 집행도 해당연도의 개시 전과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이월 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음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5장 제5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지출원이지급 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라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2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시 대금청구 금액의 2/100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2018년 3월에 정수기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전년도 2017년 10월분~12월분 정수기 임대료 180천원을 지연하여 2018년도 당해 예산으로 포함하여품의하고 지출부서에서는 지출서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한 사실이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지출한 사항임
- ② □□□□ ##1팀에서는 “ㄱ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부대비에서 예산편성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여 **팀으로 원인행위 확정 및 지출하는 과정에서 품의한 예산과목과 다르게 사업부서 담당자가 e-호조시스템 품의등록 시 예산과목을 착오입력하여 승인하고 지출원인행위 확정 지출 시에도 예산과목 정정 및 반려없이 그대로 승인 지출하여 품의한 예산과목과 다르게 최종 지출하였음
- ③ ■■■■에서는 물품 등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업체에게 계약대금을 지출하였음

11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특히 4)항의 경우 ①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에 한하여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제6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69조(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제2항을 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1)설계변경, 2)공법의 변경 3)기술적 문제의 해결 4)기성고의 사정 5)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

지적사례

- 1 □□□□에서는 「A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8. **. **. (주)□□대표 A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8. **. **. (주)□□으로 부터 실정보고를받아 2018. **. **.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2018. **.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음
2018. **. **. ~ **. **.까지 고사목 제거 수량 변경 외 18개 공종에(29,299천원 증액)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2018. **. **. 준공계를 제출받아 2018. **. **. 준공검사 후 공사준공 처리 되었으나 공사감독일지 및 현장작업일지 확인 결과 잠자리습지 전기 인입 및 판넬 설치, 휠체어 경사로 반입 및 설치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설계변경 공종은 실정보고 승인 전에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설계변경 처리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음



- ② □□□□에서는 “ㄴ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로 설계서에 공사용 휀스 1,170m(EGI 2.4m + 분진망 1.6m)가 계상되어 있어 시공사에서 착공과 더불어 2017년 7월 비산먼지 발생사업 주요 억제시설 설치에 대하여 구청에 신고하였는데, 2018년 3월 시공사에서 00청에 변경 신고한 주요 억제시설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A, B지역 일부 구간에 경사면 및 전방에 보강토 옹벽 4m가 설치되어 있어 공사용 휀스를 설치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 계약 물량 1,170m 보다 적게 707m로 축소하여(감 463m) 설치하였으므로 □□□□에서는 시공사로부터 축소 설치에 대한 실정보고를 제출 받아 검토·승인 후 22,604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액 설계 변경을 했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5-473호)」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 지적사례

- 에서는 ‘ㄱ 건설공사’ 시공자인 □□건설 외 2개사에 1,102,507천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 지급하면서 증빙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여 13,166,6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ㄴ 건설공사’ 시공자인 **기업 외 2개사에 1,044,373천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 지급하면서 사용금액 집계오류와 증빙자료 확인 소홀로 인하여 2,048,232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2건의 사업에서 총 15,214,922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에서는 ‘ㄷ(2단계)전기공사’의 건설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시설물 구입비로 1,716천원을, ‘ㄹ(2단계)정보통신공사’의 건설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개인보호 장비류 중복 지급으로 992천원을, ‘a 전기공사’의 건설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개인보호장비류 과다지급 및 부가가치세 중복 정산으로 1,478천원으로 총 4,186천원을 과다지급된 사실이 있음



116 계약목적물 하자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의 도급계약을 체결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관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고,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따라 보증금액을 정하므로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 지출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례

① 하자담보기간 초일 적용 시점 부적정

- □□□□에서는 2018년도 “ㄱ” 등 2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면서 하자보증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시점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초일 적용하여야 하나 준공계 제출한 날을 초일로 부적정하게 정하였음
- ▽▽▽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면서 하자보증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시점을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이나 제출한 날 또는 그 다음날로 하여 부적정하게 정한 사실이 있음

②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대한 하자(정기, 최종) 검사 미실시

- □□□□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하자 검사’를 ○○건 미실시 하였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해 ‘하자만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6건 중 3건에 대하여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계약목적물에 대한 결함이나 불안전 요소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실시되지 않았고 발견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art
1

시종형감사 유사반독 지적사례



117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일반지침에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출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특히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에서도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종합계약 등)에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 등의 계약을 한 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ㄱ 설치공사’외 2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급자재 콘크리트기초를 2016. 7월, 8월, 9월 3회에 걸쳐 구매하였는 바, 발주시기 등을 조정하고, 관급자재(콘크리트기초)를 통합발주하여 사업별, 시기별 분할납품을 받았다면 다수공급자물품(MAS) 2단계 경쟁을 통해 최대 10%(12,868천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 ○○과는 ●●●과 등 4개과의 2018년도 자산취득비 예산에 편성된 실시간 유전자 진단장비 및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최적화제품,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기 등이 모두 동일 장비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장비 4대의 추정가격 합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시 계약담당부서에 계약 요청하지 않았고, 각각 자체 발주하여 구입하였음

118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검토 소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설계서,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000000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프로세서제어반(기초금액 271백만원)을 구매하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의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2015.6.16. 계약 의뢰, 2015.7.23. ○○○○과 00000-000000(물품식별번호 00000000)의 구매계약을 하였음
그러나 □□□□□○○○ 폐수종말처리장 프로세서제어반 구매 시방서에 특정모델명인 *****-*****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조달우수제품인증제*****호를 받은 업체에서 제작 시공하도록 특정업체인 ○○○○을 사전에 지정한 후 해당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요청하였고 수의계약을 의뢰한 2015. 6월에 우수조달제품으로 프로세서제어반을 등록한 업체는 2개 업체로 ○○○○에서는 조달우수제품인 ○○○○의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의 물품을 비교하여 폐수종말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물품을 선정한 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 물품을 설계에 사전에 반영한 후 해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였음
- ② □□□□에서는 전기공사 관급자재(조명기구)를 구매하면서 시방서에는 제품사양에 대한 설명을 적시하고 도면에서는 규격만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사양 및 설계도면 없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제품의 사진을 기입하여 발주하였고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에 반영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 등록되어 있음에도, 제품에 대한 비교 검토없이 특정업체의 물품을 선정·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조사를 생략하여 20,504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119 공유재산 시설물 사용허가 등 관리·운영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재산을 말하고,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용·수익허가”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같은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허가할 수 있고, 제22조(사용료)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

■ 지적사례

① 시설물 사용허가 관련 사용료 부가처리 부적정

- □□□□□ 각 000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각 통신사가 설치하는 시설물이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①통신장애 문제로 박물관에서 요청한 사항, ②공유재산 사용료 검토 시 바닥면적이 아닌 벽면이라는 이유(경미한 사항)로 각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최초 설치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기료 외의 사용료를 미 부과한 사실이 있음
- ○○○○○○○○ ‘00체험관’의 경우 금년도 사용 개시일이 2018.3.31.이었기에 최소 2018.3.1.경에는 사용자에게 부과고지를 하여 사용개시일인 3.31. 이전에는 납부가 되어야 함에도, 2018.3.30.이 되어서야 결재를 득하고 납부고지 함으로써 사용개시일 5일을 경과한 2018.4.5. 수납하였고, ‘00 매점’과 ‘0000 매점’의 경우에도 각각 사용개시일 7일 전, 5일 전 부과하였고, 0000 매점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일을 경과하여 수납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소홀히하였음

② 시설물 대관 관리·운영 소홀

- □□□□에서는 시설물에 대해 기관 또는 개인이 사용을 신청함에 별도 신청서 없이 사용함은 물론 대관을 위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가 검토되어야 함에도 별도 검토 없이 사용여부에 대해 승인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대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없으나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함에 3건 10,800원의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고, &&&박물관의 경우 면제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사용신청이 접수된 2건에 대하여 508,200원의 사용료를 면제한 사실이 있음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우선계약 순위를 규정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수급자이며 장애등급이 1,2급인 자를 1순위로, 수급자이며 장애등급이 3,4급인 자를 2순위로 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2015.12.8. 분관도서관 3개소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실시하면서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반인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자의적 판단, 공고문에 우선허가 신청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표기하였고, 자격확인서류에도 장애인증명서만을 기재함으로써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2명을 우선계약대상자로 접수하였으며, 그 중 A(장애2급)는 2,51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고 입찰보증금 125,500원을 완납하는 등 입찰과정에 끝까지 참여하였음



120 물품관리 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와 제25조(장부의 작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물품카드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되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하며 이를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고 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에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함

■ 지적사례

- ① □□□□의 물품관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되 특히 물품을 신규 취득할 때에는 취득과 동시에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취득일, 취득가격 등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나 자산취득비 목록으로 구입한 초저온 냉동고 등 6종 86건 31,816,140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대장 등재를 누락하여 관리함
- ② □□□□에서는 물품을 구입·사용하면서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작성하거나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물품을 신규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과 동시에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취득일, 취득가격 등을 누락없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냉장고 등 12종 147점 90,726,130원의 물품구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재 누락시킴

121 석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라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1항에 의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하고,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석면 건축물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다 2019. *. *.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현재의 담당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석면 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규정 또한 인지하지 못하여 2018.**.*. 조사를 마지막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석면건축물 관리에 소홀하였음
- ② □□□□에서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업무추진은 하였으나,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매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향후 교육생 등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석면조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음

III

공공기관(13개 기관)



122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공개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지적사례

① 채용 자격기준 위반

- 「□□□□□□ 인사규정」에서는 1급에서 5급 직원 채용기준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관련 경력 2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력 제한 및 차별이 있는 실정으로 ㄱ 리모델링을 위한 한시직원 채용과 ㄴ 및 ㄷ 구축을 위한 한시직원 채용 시 자격 요건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제한하여 채용한 사실이 있음
- 「○○○○○○ 인사규정」은 일반직 채용자격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학재단에서 근무한 자, 법령에 의한 설립 또는 지원단체(법인)로서 장학, 교육,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 일반직(1급 ~ 5급) 채용 자격으로 채용 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 일반직 5급 채용시에 채용자격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장학재단에서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한 설립 또는 지원단체(법인)로서 장학, 교육,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여 채용모집을 한 사실이 있음



② 채용 절차 관련

- □□□□에서는 2015년 위촉직 업무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류·면접전형을 거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실에서는 연간운영계획수립 및 위촉직 전형방법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고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공고를 미 실시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을 거치지 않고 위촉직 업무보조원으로 임용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채용된 사실이 있음
- ◇◇◇◇◇에서는 「◇◇◇◇◇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채용절차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2017년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에 대하여도 공고문에 공고를 하여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공고절차 없이 합격자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123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 A공사 「인사규정」 제14조(보직) 및 제17조(전보제한)에 따르면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보직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승진된 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기구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직된 자, 기타 고충 처리 등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 B재단은 같은 직급내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1조에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등 각 호의 대상자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C재단의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1.인사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직원의 신규임용(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3.직원의 승진 및 전직에 관한 사항, 4.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D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1조에서 1.직원에 대한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3.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포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52조에서는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명예·조기·희망퇴직자 선정,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심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적사례

① 전보제한 미준수

- □□□□□에서는 직원의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려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전보 제한자 명부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14명을 전보조치 하였음
- ○○○○○○○○은 2019. 8월 현재까지 직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 *급 A 등0명의 직원에 대하여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수시로 인사조치 하였음



②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에서는 직원의 신규채용 및 직원의 승진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직원채용계획 시에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채용 면접 후 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채용 및 직원 승진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함에도 서면심사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에서는 급속승진의 건과 연도별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함에도 서면심사로 심사·의결 하였음

124 예정가격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아니할 수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예외가 아님에도 임의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액 확인 결과 사업부서 계약요구액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이 평균 98%를 초과하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찰로 추진하였을 때 용역의 낙찰하한을 72.995~87.745%와 비교하면 각 사업별로 1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 ② □□□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유찰(2회)된 3건의 용역사업은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계약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에도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도 없이 업체의 금액에 의존해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③ △△△△ □□사업소에서는 『ㄱ 공사』 설계 시 신기술특허사용료를 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하였고 (주)△△는 신기술특허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769,900원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설계에 미 반영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설계 원가계산 시 비목별 산출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원가를 계산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특허사용료를 경비 비목에서 제외하여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원가계산을 하였음



125 선금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2017년 ‘ㄷ 용역’ 선금 지급시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 보증서 종료일이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계약기간과 선금 보증기간의 종료기간이 같게 제출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선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② ○○○○에서는 선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및 선금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 잔여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총계약기간이 20일인 용역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대가 지급업무를 처리하였음

126

입찰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ㄱ 용역”을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면서 민간자격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경력확인서를 취득한 직원을 보유한 업체로서 상주 기술인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소속회사에 근무한 직원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하면서 상주 기술인력의 경력을 2014년에는 4년 이상, 2015년에는 5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중복제한 하였음
- ② ◇◇◇◇에서는 ‘2, 3공구 ㄴ 정비공사’시행 시 ‘최근 5년 이내 저온수 ㄴ(단일 ㄴ 700usRT 이상)을 유지보수 및 서비스 실적과 서비스 팀을 보유한 업체’, ‘지정서비스 등록업체’로 제한하였고, ‘1공구 ㄴ 정비공사’는 공사 필요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제한하지 않고 동일실적, 서비스 실적,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하는 등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님에도 2항목 이상 과도하게 중복으로 제한하여 9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업체의 투찰 기회를 박탈하였음



127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제안서 평가요령에서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에 따라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 ◇처에서는 업무분장(조정) 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와 맞지 않게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의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아닌 △처 ▽팀에서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함에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공사 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추첨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법령에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② ▽▽▽▽에서는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25점 중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의 배점을 15점으로 정해 한개 항목의 배점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하였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함에도 내부 직원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고, 다른 시도 위원은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128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징구) 제3호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되,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나 분할 청구시 200만원 미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연간계약 체결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전액을 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면서 ㄱ 등 3건에서 매입기준액보다 총 100,000원을 과소징구 하였으며, ㄴ 등 8건에서 총 1,080,000원을 미징구 하였음
- ② ○○○○에서는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매입기준인 2/100를 준수하지 않고 과다 또는 과소하게 매입필증을 징구하거나, 징구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였음



129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증권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하자 검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실시하는 최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 ② □□□□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자만료 최종검사를 실시한 물품 구입이나 공사 등 1,039건 중 각 사업소 하자만료 최종검사 현황을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하자만료일 관련 규정 미숙지 및 착오로 인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120일까지 28건을 지연하여 처리하였거나 하자만료 검사기간이 도래하기전 1일부터 최대 16일까지 16건을 조기에 검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3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계상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감독자는 공사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사용항목과 사용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ㄱ 전기공사」 등 8건의 건설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 노무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됨은 물론 일부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사용내역과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지급내역의 차이가 나타남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총 13,366천원(부가세 포함)이 과다 지출되었음
- ② ■■■■는 “ㄴ 설치공사(2-2차)”외 2건의 사업에서 일부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되었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9건의 관련 서류를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비를 지출하여 9건 총 12,671,345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음



131 건설사업 설계변경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제8항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규정에 따라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위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적사례

- ㄱ 택지 개발 *- *공구에서는 ○○대로 하부에 토출관로 매설시 통행 차량으로부터 작업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 PE방호벽에 대하여 설계서에 산출근거 없이 14,603개(개당 L=1,200mm) 계상되어 있으나 토출관로 시공계획에 맞추어 PE방호벽 설치 수량을 산출하면 토출관로 B라인 연장 3.455km에 대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2회로 분할 시공하면 교통안전시설물 PE방호벽 2,500개(1.5km×2열)가 필요하며, 토출관로(차집관로) A라인 연장 4.275km에 대한 현장 여건을 감안 3회로 분할하여 시공하면 추가로 2,500개(1.5km×2열)가 필요하고 또한, 기타 오수중계펌프장 신축현장 주변 통행 도로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PE방호벽 3,526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현장 설치에 필요한 PE방호벽은 개략 총 8,526개로 현장 시공계획 수량보다 과다하게 설계된 6,077개에 대하여 설계변경(감액)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까지 검토 소홀로 사업비 400백만원(재경비 포함)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에서 감사대상기간 내에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의 조정을 한 사업” 중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이상 증·감의 설계변경을 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등을 전수조사 토대로 점검한 결과 건설공사 4건은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이 확인됨

- ③ ○○○○에서는 ○ 구축공사를 위해 2017.6.26. ■■■과 139,439,930원에 실내건축 계약, ■■■과 52,151,070원에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 시행 중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변경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공종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변경 금액을 시공사에 지급하였으며 ㄱ 환경개선을 위해 2017.12.22. 주식회사①①와 85,908,8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철거대상 천장재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여 석면텍스 철거비를 5,947,172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현장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반 텍스로 조사되어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감액 및 공종 변경 후 공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석고보드 시공 등 공종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에 공사비를 맞춰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132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평가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고,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의 한 방법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한 3건의 용역 사업에 대하여 유찰(2회)로 인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시, 제안서 평가기준상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전문성, 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수의계약 체결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음
- ② ◇◇◇◇에서는 ○○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 하면서 당초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평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13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을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지적사례

- ① ○○○○에서는 동일공종 단일공사인 ‘ㄴ 공사’를 20**.**.**,~20**.**.**, 사이에 ○건으로 나누어 1인 견적 수의계약 하여 그 결과 동일공종 단일사업으로서 통합하여 발주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1인 견적에 따른 낙찰률보다 낮은 금액(차액 비교 : ○,○○○천원)으로 계약할 수 있음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② ◇◇◇◇ ○사업소에서는 2016.8.10. 하수처리시설의 설비를 운전·제어 및 감시하는 분산제어시스템(DCS)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 부속설비의 교체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ㄷ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2016.9.8.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를 시행, 유찰이 되자 2차 안내공고를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새로운 공고를 시행하였고 개찰 결과 141개 업체 중 1순위 업체 (주)□□가 선정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에 ‘공사 낙찰포기 각서’를 제출하자, ○사업소에서는 사업기간, 견적을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차순위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134 관리·감독업무 수행관리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공기업과 2016. 12.) 제3장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 1.지방공기업의 보수운영기준 5.기타수당 등 운영에는 임원 및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의 2018년도 팀장 이상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임원인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어 수당 지급이 중복되지 않으나, 처장, 실장을 포함한 팀장(P/L포함) 이상의 직책을 받은 직원 중에서 2급 처장·실장, 3급 처장은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행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고, 3급·4급 팀장에게는 직책수행비만 지급되고 있어 직급과 보직에 따라 수당 대상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② ○○○○의 감사일 현재 년도별 팀장 이상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임원인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어 수당 지급이 중복되지 않으나, 실장, 단장을 포함한 팀장 이상의 직책을 받은 직원 중에서는 수당 지급 대상 범위가 직급과 보직 여부에 따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판단 등 수당지급 목적에 부합되는지 판단이 어렵고 2급 실장, 단장인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과 직무수행비를 모두 지급되어 보직에 따라 수당 지급 취지 및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함

135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공기업 표준예산과목에 맞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및 자체 규정 등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예산 목적에 따라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하지 않고 단일예산 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단일예산 과목에서 물품취득비, 회의비, 행사운영비, 행사용역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편성과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
- ① ◇◇◇는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정액급식비(49건, 11,022천원)를 직원이 식사한 식당으로 입금하였으며, 특근매식비(78건, 29,473천원)를 집행함에 있어 시간외 근무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26건, 7,378천원) 사용시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였음
- ② ●●●에서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원할 경우 각 해당 사업별로 관련 예산과목에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2011. 1. 26. 육상선수 A 등 27명을 시청 운동 경기부 선수로, 2011. 10. 2. 요트선수 B 등 11명을 시체육회운동경기부 선수로 유치하면서 총 1,143,000천원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없이 타 예산과목으로 지출하였음



136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하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고, 심야시간(23시 이후) 및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 업종 등)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3건은 23시 이후와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주점에서 집행하였으며 특히 관외 및 심야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나, 별도 소명자료가 없으며 집행내역 3건은 집행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자택근처 마트로 통상적인 업무추진과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추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또한 없음
- ② ◇◇◇◇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생일기념품 구입비와 부서운영업무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환송연회 비용을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
- ③ ■■■■에서는 경조사비 지급대상이 아닌 ○○○ 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조사비(돌, 고회, 승진 등)로 총 69건 4,780,000원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137

여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2항에 따르면 국내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단, 국외 항공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내식 또는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식비를 감액하여 식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숙박비는 [표2] 국외 여비 지급표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도 할인정액이 아닌 상한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지 않고 지급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별도로 식비를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 여비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출장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마친 후 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식비의 1/2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에서는 서울, 경기 등 당일에 용무를 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는 국내 출장에 대해서도 식비를 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여 3,810,000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 ② ●●●● ○국 및 □원에서는 공용차량 이용 및 공용차량에 준하는 임차차량이 제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하지 않고 일비를 전액 지급하였음



138

유급 휴가일 운영에 관하여(공사공단 창립기념일)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II. 조직및 인력 운영 기준 5. 상생차원의 신노사문화 정착에서도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부정책의 적극 준수하여 법령·정부정책에 위반되는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는 관련 내부 「취업규정」 제25조(휴일) 제3호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추가하여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음
- ② □□□□은 관련 내부 「취업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휴일)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휴일, 법정 공휴일에 추가하여 공단 창립기념일(2.12.)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로 공단 창립기념일 주민편의시설에서 근무하는 ㉠사업소 및 ㉡사업소의 소속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음

139 회의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 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서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 회의비(행사 등 잡비)는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무추진비와 구분되며,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지적사례

- ① △△△△ **팀에서는 사용한 회의비는 대부분 언론사 기자 및 간부와의 간담회비로 집행하여 예산과목 해소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② ○○○○○는 업무추진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3건에 대하여 회의비로 편성 사용하였고, 회의비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과 또는 음식물 제공(회의직전 또는 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에 국한되어야 하나 공사에서는 회의 후 주점 등에서 주류 등을 제공한 적이 있으며, 회의참석을 위한 출장시 사용된 제반비용을 관외출장여비가 아닌 회의비로 비용처리 한 사례가 있음

140 **공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 A재단 「업무용차량 관리지침」 제4조(관리책임자 등) 제1항에서 차량관리책임자는 본점은 기획총무부장, 지점(출장소)은 지점장(출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책임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을 관리할 직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기록) 제2항에 따르면 관리원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6조(검사 및 정비) 제1항에 따르면 관리원은 차량의 운행 및 유지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음

■ **지적사례**

- ① ○○재단에서는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관리와 관련, 몇몇 지점의 경우 담당자간 인계·인수 미흡 및 관리 부주의로 차량운행일지를 일부 분실하는 등 기록물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구년도에서 신년도로 전환 시 누적 운행거리 오류기재 등 부정확한 차량관리를 해왔으며 또한 지침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부방침으로 차량운행일지를 2015년 3월부터 전산 관리해 오고 있으나 **구**** 차량의 경우만 현재까지 수기기록하고 있어 공용차량 관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음
- ② ■■■■는 43대의 차량을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부에서 관리중인 22대의 차량은 배차신청 없이 차량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유차량의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이력부조차 비치하지 않아 정기정검 정비사항의 기록 등 체계적인 차량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 ○부에서 관리중인 모든 차량들이 각 차량별 운행목적 및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의 수불량을 기록하지 않아 차량별 실제 주유량과 운행거리에 따른 주유량을 알 수가 없어 공무 외의 사용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도 관리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차량운행일지에는 운행목적(경유지 및 목적지 포함)과 차량의 입·출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목적지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부의 경우는 목적지 기재 없이 ‘훈련’으로만 기재하였으며, 담당과 팀장의 결재도 없이 차량키의 입·출고를 경비원이 확인하여 운영하고 있음

14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 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은 소유권에 따른 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인 재단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허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보험료또는 공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 A재단은 「시설물관리 운영규정」과 「시설물관리 운영규칙」을 적용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20조와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 시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대부계약)를 준용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적사례

- ① ○○○○은 수영장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체결(안)을 통해 임차인 (주) ●●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였음
 - ○○○○과 (주)●●가 체결한 공유재산 임대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가 이용회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주)●●는 2018. *.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부터 이용요금을 인상하였고, ○○○○은 3개월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 *. **. 감사 중 이용회비 인상 근거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요금인상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
- ② ○○○○은 ○○ 건물 전체에 대한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하였으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별로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복 가입이 되었으며, 사용허가 면적에 대하여 재단에서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재단과 사용자가 각각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었음



142 물품관리 소홀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4(물품관리)에 의하면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A공사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물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B재단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적사례

① 물품관리계획 미수립

- □□□□은 2017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수립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에서는 2015년 9월 공사창립 이후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한 적이 없고 물품수급관리계획도 수립한 적이 없음

②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 ●●●●●는 규정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물품관리담당이 작성 시달한 공사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재물조사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지만 2015년 12월 재물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8년 7월 현재까지 실시한 적이 없으며 물품업무담당자가 연말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물품현황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임
- ◇◇◇◇◇은 2015. 2.부터 7.까지 물품확인 후 라벨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물품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5.10. 물품전수조사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 2018.5.14. 현재까지 정기재물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기관의 보유물품 중 손망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143 기록물 관리 소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주요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등의 기록물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서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4조(기록물의 관리)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한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도록 규정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책임자는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보존기간)에서는 기록물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별표1〕에 의하며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함



■ 지적사례

① 비전자기록물 정리 소홀

- ○○○○○은 관계 법령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하고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문서고에 이관해야 함에도 문서이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의 회의록, 연도별 업무계획,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한 정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하고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문서고에 이관해야 함에도 문서이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인사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회의록,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및 연도별 업무계획,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하여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문서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정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② 기록물관리책임자 미지정

- △△△△은 감사기간 현재까지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기록물의 생산·등록, 기록물의 정리, 기록물의 이관, 기록물의 보관, 기록물의 폐기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업무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은 감사기간 현재까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기록물의 생산·등록, 기록물의 정리, 기록물의 이관, 기록물의 보관, 기록물의 폐기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업무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③ 기록물 이관업무 소홀

- ◇◇◇◇은 처리과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등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이관년도가 도래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적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생산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설정없이 사무실 캐비닛에 방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은 처리과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등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이관년도가 도래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적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생산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설정없이 부서단위로 창고 또는 캐비닛 등에 자체보관 또는 일부기록물에 대해서는 문서고에 방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144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소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과 각종 시찰, 견학 또는 자료수집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A공사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에 따라 여행계획서 작성(신청 부서) ⇒ 공무국외여행심사(국외여행심사부서) ⇒ 심사 ⇒ 심사결과 보고 ⇒ 허가 여부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B공사는 2018.12.28.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79명의 직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였음
- ② ▽▽▽(◇팀)의 2015년 9월부터 감사일까지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은 총 180회 322명으로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거쳐 해외출장을 실시한 횟수는 총 9회에 불과함



14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1조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례

- ① □□□□에서는 입주자 사고예방과 시설보안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5개 부서, 10개 건물에서 578대를 운영하고 있어 시설별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외 2개소는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은 운영·관리 지침 미수립외 기록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는 운영·관리 지침, 기록관리, 안내판 등의 설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② ○○○○에서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점검하고 화상정보 보유기간 설정 및 삭제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체점검 및 화상정보 보호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PART 2

보조금감사 주요지적사례

CONTENTS

I. 일반행정 분야

| | |
|--------------------------------------|-----|
|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소홀 | 193 |
| 2.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관련 | 195 |
| 3.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196 |
| 4. 보조금 정산 부적정 | 197 |
| 5. ○○시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 198 |
| 6. 전통시장 명절 등 이벤트 지원사업 정산 소홀 | 199 |
| 7.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 | 200 |
| 8. 민간보조사업 회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202 |
| 9. 자치구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정산 부적정 | 203 |
| 10. ○○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204 |
| 11. 보조금 정산심사 부적정 | 205 |

II. 보건복지 분야

| | |
|--------------------------------------|-----|
| 12. ○○협의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 206 |
| 13.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 부적정 | 208 |
| 14.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적정 | 209 |
| 15. 사회복지법인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변경승인 부적정 | 210 |
| 16. ○○센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심사 부적정 | 211 |
| 17.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 212 |
| 18.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부적정 | 213 |
| 19.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 214 |
| 20. 노인대학 운영비 관리 및 정산 부적정 | 215 |
| 21.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정산(반환) 소홀 | 216 |



Ⅲ. 농림·축산·수산 분야

| | |
|-----------------------------------|-----|
| 22.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217 |
| 23.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 218 |
| 24. 발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 219 |
| 25.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금 편취 | 220 |
| 26. ○○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221 |
| 27. 농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222 |
| 28. 양봉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 223 |
| 29. 수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24 |
| 30. ○○○○교체사업 정산업무 등 관리 부적정 | 226 |
| 31. 조림사업 추진 부적정 | 228 |

Ⅳ. 문화·관광·체육 분야

| | |
|--------------------------------|-----|
| 32. ○○체육회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 230 |
| 33.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도·감독 소홀 | 232 |
| 34. 행사·축제분야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 234 |
| 35. ○○○전람회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 235 |
| 36. ○○○축제 수익금 관리·감독 소홀 | 236 |
| 37. ○○음악제 보조금 관리 소홀 | 237 |
| 38.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 239 |
| 39.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 241 |
| 40.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한 사항 | 243 |

Ⅴ. 국토·교통 분야

| | |
|--------------------------------------|-----|
| 41.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 244 |
| 4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소홀 | 245 |
| 4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 246 |
| 44.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부적정 | 247 |
| 4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미이행 | 248 |
| 46. ○○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 부적정 | 249 |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OO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부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군에서는 2015. 5월 위원회 최초 구성 시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3명이므로 최소 12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고, 2108. 11월 위원 위·해촉 시에도 총 12명이 아닌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장만을 정하고 있어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공석임
- 또한 ‘2018년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2018년 제2차 OO군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에 따르면 OO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10인이 심의 의원으로 되어 있으며, ‘2018년 제*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OO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위원 10인 중 6인 의결로 원안가결이 심의 결과로 되어 있으나 OO군에서는 2015년 위촉된 7명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3년 임기가 만료된 이후 연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위원장(민간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공석(미지정, 민간위원)이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은 물론, 총 10건, 381,000천원에 대해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의 참여를 통해 2018. 8월 서면으로 심의하여 원안가결한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였음
- 아울러 2015년 지방보조금심위원회 최초 구성 후 감사일 현재까지 개최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음

2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관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며,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개설해야하나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그리고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함

Part 2

보조금감사 주요지적사례

■ 지적사항

- OO광역시 각 군·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A시장 상인회는 2018년 OO시장 OO축제 진행 시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 없이 500천원을 사전 지출한 후 이를 보조금에 포함하여 정산하였으며 B시장 상인회는 2018년 OO축제 관련한 8건/4,500천원의 지출을 행사가 종료된 후 13일이 지나서 집행하였으며 정산보고 시 물품구입세부내역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고 업체별로 총괄하여 카드 명세표만 제출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에도 OO구는 정산 심사 과정에서 정산보고서의 적합여부를 판단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요구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정산을 확정하였음
- 또한 2017년 C시장 상인회의 경우 잔고를 비우지 않은 기존 통장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는 이를 확인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D상인회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출결의서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여 보조금 집행과정을 미흡하게 처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처리 완료 함



3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구는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보조금을 교부를 통해 사업을 지원중임. 이와 관련해 2015년~2017년 보조사업자가 지출부와 지출결의서를 제외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 따라 방문 점검 등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 후 정산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으며 2016년~2017년 정산 검사 시 지적된 6개교의 10,165천원에 대한 환수 건도 추후 환수조치 없이 시정·경고 조치만으로 정산을 완료하였음
- 또한 ○○교육원에서 2017년 3월에 제출한 2016년 정산보고서를 OO구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12개월여 지난 2018년 2월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간이영수증(입학식 수반 구입 등) 첨부 및 일부 강사근무 일지 첨부 누락 등 집행서류가 미비함에도 보조금 정산이 적정한 것으로 검사 및 보고 하였고 2017년 정산 보고서에는 컴퓨터 구입과 같은 자산성 경비를 지출하고, 구입한 컴퓨터를 OO구와 협의없이 OO교대에 귀속시키는 등 보조금 교부 조건 대로 미이행 하였음에도 별도의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보조금 정산 부정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지적사항

- 민간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가 전체 사업비의 60% ~ 70%의 자부담을 집행 계획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보조금 집행실적만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감사기간에 신문사의 자부담 집행 실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계획된 자부담 집행액 대비 실 집행액이 50% 미만으로 대폭 감액된 채로 집행된 사실과 그에 따른 총 사업비가 신문사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매우 다르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실제 집행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는 방식으로 3년간 총 42,213천원의 보조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자부담 항목으로 사용하였고 해당부서에서는 정산검사 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당초 보조사업자 자부담 집행항목이었던 경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변경사항이 000도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검사를 하는 등 보조금 담당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00시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00시 00단체에서는 참가자격을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로 하는 00시 00가요제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00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00시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법규 및 교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명시하였음
-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실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초청장을 특정단체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발송하여 참가를 제한하였고, 보조금으로 마련된 경품과 시상식도 특정 단체 근로자에게만 배부하는 등 보조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였으며 가요제 진행에 대한 부분을 대행시키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의 증빙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행사 개최일 이전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음에도 00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산처리 함으로써 동일 보조사업이 3년 연속 부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6 전통시장 명절 등 이벤트 지원사업 정산 소홀

- 「OO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침」에 따르면 사례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금지급 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등 경품 증정 시에는 반드시 지급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며, 경품(상품권) 지급 대장 양식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8조(대사의 지급)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며,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상인회에서는 2015년도 추석이벤트 사업 추진 시 교통정리 및 통제 인건비를 ○○○ 외 3명에게 지급하면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누락하고 수령증만 받고 인건비 200천원을 ○○○에게 일괄 교부하였고, 2017년 고객참여 이벤트 행사(☆☆기획)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벤트 행사(2017. 2. 7.) 이전인 2017. 2. 3.에 용역대금 7,300천원을 지급함
- ■■■ 상인회에서는 2016년 설 명절 이벤트로 ‘사랑의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산 증빙서류인 쌀 지급대장을 누락하였으며, 2017년 설 명절 이벤트 행사시 □□시에서 정한 경품(상품권) 지급대상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 ‘2017년 전통시장 다시 찾기’ 정월 대보름축제 고객감사 판촉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상품권 지급대장, 경품(지갑·벨트, 생활용품) 지급대장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고 하나의 대장에 서명을 받은 후 경품 수령자 총 80명에게 지급하여 경품 수령자가 상품권을 지급받았는지 경품(지갑·벨트, 생활용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 할 수 없는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완료하여 OO시에 보고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등 부정적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2014. 4월 해당 관서는 2013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4. 4월 지방세 업무추진 지원(고급오락장 조사업무 피복비, 관내출장 여비) 및 공무원 사기진작(시 주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에 따른 인센티브제공용 연수복 지급)을 목적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을 OO광역시로 제출하여 2014. 5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승인받았음
- 하지만 2014. 8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 되지 않은 행사운영비(전 직원 화합의 날 행사) 10,000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2014. 12월 보조용도 외로 집행하였고 2015. 3월 보조목적 외 집행한 정산서를 OO광역시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OO구청 전 공무원에게 체납액 징수할당제를 실시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징수효과를 거두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당시 구청장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직원 화합의 날 행사에 10,000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입부서의 특성상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 그러나 OO구청에서는 다른 보조사업인 전 직원 한마음 연수가 취소 예정되어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에 따른 연수복 구입이 필요 없게 되자 2014. 8월 사업목적은 직원 해외 선진 벤치마킹으로 하는 변경요청을 OO광역시에 제출하여 같은 날 변경 승인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세입부서의 특성상 경험부족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그 결과 지방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인 시비보조금 사업 목적을 훼손하였음

- 또한 OO광역시에서는 2015. 3월 제출한 OO구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여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함에도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 내용이 변경 승인되지 않고 보조용도 외로 집행한 행사운영비(직원화합의 날 행사) 10,000천원을 그대로 정산처리 하였음



8

민간보조사업 회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보조단체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며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회수 등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장부,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액 중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이 포함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 지적사항

- OO구에서는 보조단체인 OO구 OO협회가 보조금 교부결정(2000.1.13.)이전에 자체기금으로 기념품구입비 120만원을 지출하고(2000.1.5.) 추후에 보조금을 수령한 후 동일금액을 보조금통장에서 자체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유공자회 OOOO지회는 기념품 구입비로 지출한 보조금 중 30만원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영수증 등 적법한 지출증빙이 없었고 거래내역이 포함된 보조금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OO구 OO협회는 국악인 출연료로 1인당 40만원씩 총 200만원을 5명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행사복 세탁비 60만원을 지출하면서 세탁업과 무관한 침구류 판매업소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지출증빙이 미흡하였음에도, OO구는 보조금 정산검사 자체를 하지도 않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입증이 미흡한 지출금액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9 자치구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정산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결과를 심사하고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 지방보조금 이자의 산정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이며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고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도서관은 'A'구 'B'동 어린이도서관 등 총 11건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정산을 완료 하였고, 17년 시민참여예산 총 20건, 1,779,650천 원을 17. 2. 21.자로 교부하여 시민참여예산(시비보조금) 사업결과보고에 의거 'C'구 'D'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19건 1,729,650천 원을 정산완료 보고하였으나 완공된 'B'동 어린이도서관 등 총 11건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시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OO도서관은 집행 잔액 10,662천 원에 대해서만 정산 및 반환 요청하고 시비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한 이후 자치구의 공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159,805천 원에 대하여 정산 및 반환요청하지 않았음
- 또한 '17년 시민참여예산 총 19건 1,729,650천 원을 정산하면서 'E'구 정보화도서관 옥상 '00'하우스 개선 등 18개 사업의 집행 잔액 65,061천 원에 대해서만 정산 및 반환요청하고 발생한 이자 17,931천 원에 대해서는 정산 및 반환요청하지 않았으며, 'F'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3,219천 원 및 이자 205천 원에 대해 정산 및 반환 요청 하였으나, 'H'구청장의 공금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를 새로 정산한 결과 최종 'H'구 발생이자 812천 원으로 결과적으로 606천원이 과소 정산되었음



10

OO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OO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적심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2. 민간이전(307목)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은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을 허용하되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OO 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시 교부 목적과는 다르게 식비로 집행된 총 \$\$\$천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지 않았으며, 집행내역 사업비 대부분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는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단순히 계도 조치하였으며, 승인번호가 없어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정산검사 보고하였고,
- 그 결과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일부 집행되고 교부 목적에 맞는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사항 없이 ‘계도 및 향후 추후 보조금 지원 시 보완조치’ 의견만을 제출한 채로 정산검사가 완료 되었음

11 보조금 정산심사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함

■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인 ○○○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자부담금 23,928,000원보다 적은 21,697,339원을 포함하여 81,697,339원을 집행하였고, 따라서 잔액 2,230,661원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보조금 비율(1,586,403원)만큼 반환해야 했음에도
- ○○과는 위 ○○○가 1,586,403원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12 OO협의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 비용도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함. 「OO시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식비는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OO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각종 수당(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지급 시 관련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시는 OO협의회에 운영보조금 및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금의 보조금통장 예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였음
- 또한 OO협회의 법정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면서 여비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와 산출기준 없이 2017년도에는 월정액(200천원/월)으로 2,400천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근무상황부와 불일치하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2,447천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으며, OO협회의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자체회의 후 회의계획 및 참석자 명단도 없이 2017년도 3회 44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2회 474천원을 지출하였으나 감사일 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리고 2017년부터 2년간 OO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행복금혼식’ 사업보조금 중 사회자수고비 외 3건 각 200천원에 대한 소득세 등 44,000원, ‘양성평등주간행사’ 퍼포먼스 및 인건비 1,300천원에 대한 소득세 등 57,200원, ‘OO협의회 위크숍’ 강사료

400천원에 대한 소득세 등 26,400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소득세 등 약 127,60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중 버스임차료 등 6건 8,210천원의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서 등 증빙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산검사 처리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는 사회복지 법인회계, 시설 회계, 수익사업회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고,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 비로 사용하되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에서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센터 운영비에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시설 대표자(설립자)의 건강보험료 7,230천원(2017~2019년9월)을 시설 후원금 계좌에서 지출하였고, OO시 OO과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 후원금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정산을 승인 함

14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적정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따르면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개소 당 1명의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지원 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과 지원 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또한 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적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선정시점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 ○○시 및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 대상 선정 시점에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제외 대상인 ●●시, △△시에 소재한 2개 어린이집에서는 지원 제외 기준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관할 시에서는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4개월간 해당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였음
- 또한 △△시, ▲▲군, ◇◇군에 소재하는 6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 6명이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였음에도 근무일수에 따른 계산 없이 해당 월에 한 달 근무한 것으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관할 시·군에서는 확인 없이 해당 월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한대로 지원하였음



15

사회복지법인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변경승인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OO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관련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는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광역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OO운영을 OOO에 위탁하고 2018년 보조금으로 지원한 후 집행 적정여부를 심사하였음
- OO광역시는 2018. 2. 23. OO운영 보조사업자인 OOO으로부터 2018년 제1차 추경예산 보조금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면서 세출예산 편성목 내에서 사업변경의 타당성 및 보조금 사용 용도의 적합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당초 사업계획에 미 반영된 차량구입비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그대로 변경 승인(2018. 2. 26.)하였음

※ 차량구입은 자본형성경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지원

16 OO센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심사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OO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집행 한 경우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례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OO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해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광역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인 OO센터에 운영비 725,228천원과 “2000년 여성 취·창업 박람회” 사업비 80,000천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2000. 2. 21.과 1. 4. 위 센터로부터 운영비와 “여성 취·창업 박람회”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00. 6. 25.과 2. 19. 보조금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심사를 완료함
- 그러나 운영비 심사의 적정여부 점검결과 세부사업인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 및 “여성창업지원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자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없는 성과급 74,570원을 위 센터 종사자 ○○○에게 지급하는 등 종사자 3명에게 454,970원을 집행하였고
- “2000년 여성 취·창업 박람회”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하나되는 아주 특별한 여성취업박람회” 소요비용으로 부스설치비1,780,000원 등 6건 계 5,525,910원을 사전 변경승인 없이 집행하였음



17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OO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법규 또는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3호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고,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종사자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지적사항

- OO구 OO재활원과 OO재활관은 OO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설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퇴직한 종사자 중 1년 미만 근무한 6명에 대하여 기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퇴직적립금 5,391,820원을 반납하지 않았음
- △△구 △△동포회관 등 4개소는 OO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설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퇴직한 종사자 중 1년 미만 근무한 7명의 퇴직적립금 4,424,391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통장에 보관하였음
- ◇◇군 ◇◇노인복지관은 OO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설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6년 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3명에게 퇴직적립금 3,073,830원을 반납하지 않았고 담당부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18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음
- 「OO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의 설계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적사항

- OO구 OO 장애인거주시설, OO장애인종합복지관, OO장애인체육관은 「OO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개보수공사 및 장비보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 OO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전자제품 57,359천원을 구매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동일공정, 동일품목에 대하여는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동일품목을 5건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OO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보조금 154,812,000원, 자부담5,000,000원으로 특수체육 프로그램실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과정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로 설계가 변경(자부담 3,791,000원 추가)되었음에도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고
- OO장애인체육관에서는 보조금58,300,000원으로 이용자휴게실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과정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로 설계가 변경(자부담 6,000,000원 추가) 되었음에도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음



19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OO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풀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같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비 낙찰 차액 등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비의 경우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경우 동일 편성목 내의 부대공사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이 제한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예산의 변경사용도 제한되므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편성목이 변경되는 예산의 변경사용을 제한함

■ 지적사항

- OO시는 「2019년 ■■■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를 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보조금 집행 관계규정을 따르도록 함
- 그러나 ■■■에서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당초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설계용역(계약금액 : 13,684천원)을 2019. 8. 1. 계약한 후 2019. 8. 25. 완료하였고 ■■■에서는 해당 사실을 2019. 9. 3. 위 판서에 보고 하여 설계용역이 사전승인 없이 계약 및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9., 2019. 9. 25. ‘냉난방기 구입 설치 공사(2층, 3층)’, ‘냉난방(1층) 및 보일러실 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으로부터 2019. 9. 25. 기 완료된 실시설계 용역비에 해당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내용의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2019. 9. 30. 그대로 승인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였음
- 또한 ■■■에서 공사 낙찰차액으로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2019. 9.26. 공기 청정기 8대, 텔레비전 3대, 빔프로젝터 2대, 대형냉장고 1대 등 30,840천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사용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30. 아무런 조치없이 원안 그대로 승인하는 등 기능보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20 노인대학 운영비 관리 및 정산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OO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실적보고), 제2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함

■ 지적사항

- OO시 OO과에서는 2000년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해야함에도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종료 후 수시로(2000년 1월~3월) 정산서류를 접수 받은 후 감사일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노인대학에서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농협상품권 3,930천원을 임의로 구입하고 수불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다수의 지출사항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노인대학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금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일괄 인출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 노인대학에서는 3,300천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도 갖추지 않은 등 다수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되었음에도 OO시 OO과는 적기에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한 시정 및 보조금 잔액과 이자 반납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



21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정산(반환)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OO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교부조건) 및 제22조(정산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또한,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정산)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함

■ 지적사항

- OO시 OO과에서는 OO시 △△센터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근거로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감사일까지 2018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정산보고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OO시△△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이용료 수익발생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해 수익금 사용계획을 별도로 세우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수익금의 사용 또는 반환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예산서 상에 수익금을 자부담이라 기재하고 수익금 일부를 규정에 없는 하계휴가비, 명절선물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예산서 검토 시나 정산 시에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2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2016~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의하면,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 업체)등으로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2018년 3년내로 변경)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 선정은 시군구에서는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적사항

- 그러나 OO시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2018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함에 있어, 최근 5년내(18년도 3년내)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사업을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하여야 함에도, 2017년 영농조합법인 000 OO와 2018년 농업회사법인 OO의 경우 2016년 액비유통센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하였음에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 2017년에 사업신청 공고와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영농 조합법인 000 OO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8년에는 사업신청 공고를 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OO를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23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2.31. 전부개정)」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쌀 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규정에 따르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며, 다만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 지자체가 쌀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농지를 전용하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국·공유지를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 ☐ OO시 등 자치단체는 2015년 ~ 2017년 쌀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전용 농지에 1,020건 112,586,679원, 1,000㎡ 미만 농지에 102건 7,963,740원, 국공유지 미계약 농지에 133건 19,783,350원 등 총 1,225건 140,333,769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24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규정에 따르면 밭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며 다만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밭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농업인이 밭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밭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이용여부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 재배농지의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으로 확인된 현장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OO시 등 자치단체는 전송된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행 및 불일치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대상자 지급 제외요건 중 농지 전용자와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년 ~ 2017년까지 밭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가에게 총 2,349건 51,096,982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25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금 편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되어 있으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음
- 같은 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와 제42조(벌칙)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을 받아야 하지만 2018. 12월 보조사업자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첨부)을 제출 받고도 위 통장에 200천 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반납 받지 않고 정산하였음
- 한편, 보조사업자 OOO은 2017. 12월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업체와 스틱자동포장기, 수위조절 및 배관을 18,000천원에 계약하였고, ☆☆☆은 2018. 4월 기계 장비를 납품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2회에 걸쳐 기계·장비 구입대금 17,800천원을 송금한 후 2018. 6월 위 업체로부터 8,000천원의 사업비를 되돌려 받았고 보조사업자는 2018. 12월 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8,000천원 입금내역을 편집(삭제)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 구입 업체로부터 사업비의 일부인 8,000천원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편취하였음

26 OO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해양수산부의 「어촌자원 복잡자원화 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규모(면적 등), 사업비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공사종류별 또는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자부담 전액을 우선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구에서는 OO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2016년도 해양수산 사업으로 OO광역시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720㎡(지하 1층, 지상3층)로 지하 1층에 냉동·냉장시설, 지상 1층 ~ 2층에 수산물 직매장, 지상 3층에 사무실,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OO구는 보조사업자가 OO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의 규모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검토를 거쳐 OO광역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보조사업자가 2016. 10월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계획서 상 사업규모인 건축 연면적이 720㎡에서 540㎡로 축소되고 층별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자체 검토나 OO광역시의 승인 절차 없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또한 OO구는 보조사업자가 기 확보한 자부담 350백만원 중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지 구입(OO구 소유)을 위해 311백만원의 집행을 승인 한 후, 사업부지 구입비로 지출한 311백만원의 자부담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2017. 1월 자부담 확보)에서 22,500천원을 교부하여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보조금을 먼저 집행 되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 [별표11]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2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전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증빙서류와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지적사항

- OO시 농업지원센터에서는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주체 육성, 후계 농업인 지도자 육성, 농업인 조직 육성 등을 위해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매년 동일한 내용과 금액으로 예산비목과 구체적인 산출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음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 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내용과 금액을 그대로 적정으로 판단하여 교부하였으며, 농업인 단체가 사업완료 후 제출한 사업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계획과 일부 다르게 집행된 사실 등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였음

28

양봉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별표5]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탈봉기('16. 2월 시행)를 구입 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민 등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시 OO과에서는 2016년 ~ 2019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중 탈봉기 24대에 대한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환급대상인 탈봉기 15대의 부가가치세 총 1,364,000원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2016년 ~ 2019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중 총 681,900원(탈봉기 15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50%)이 감액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교부되었음



29 수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OO광역시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어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어선, 해당 연도 조업 실적이 없는 어선, 해난사고 및 재해(재난)사고의 원인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포함) 및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선박안전조업 규칙」 제29조에 따른 연근해어선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는 부적격자로 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①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②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③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④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로 규정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Ⅶ.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②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에 따르면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반환토록 명시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군에서는 지구별 수협에서 제출한 사업 대상자를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했으나, 2016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수산물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정지 처분 받는 부적격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68,000원을 지급 하였고,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20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업 시행 완료 후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 2,099,6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음



30

OOOO교체사업 정산업무 등 관리 부적정

- 「OO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함
- 「OO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업대상자 선정시 안내사항 및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사업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지적사항

- OO군 OO과는 2015~ 2016년에 302,16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3농가에 1,259 두의 OOOO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2015년의 경우 2015. 2. 24. 2015년 OOOO교체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2. 27. OO협회 OO군지부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OO조합법인 등 5개 농가에서는 대상자 선정전에 62두를 미리 교체하였으며, 2016년의 경우에도 2016. 2. 16.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날 OO협회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OOO 등 2개 농가에서 대상자 선정 전에 11두를 교체하였고, 특히 2016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사업을 포기한 2개 농가의 52두를 기존에 선정된 농가 중 11개 농가에 2016. 11. 24. 추가 배정하였으나, 농가에서 사업완료 후 제출한 정산자료를 보면 11개 농가 모두 추가 배정 전에 이미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년 동안 125두를 사업대상 선정 전에 구입한 것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실제로는 개별 농가의 자율적 경영상황에 따라 스스로 교체한 모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결과로 나타나는 등 사업대상 선정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또한 OO과에서 시비(30%)와 군비(30%), 농가(40%)가 부담하는 OOOO교체사업 중, 2015년에는 2015. 2. 24. 19개 농가, 664두를 대상으로 2015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해 3. 16. 보조사업비(시비, 군비 부담분)의 70%인 111,552천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해 농가 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보조사업비의 30%)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정산서류를 보면 농가별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아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15. 5. 4. 구제역으로 사업을 취소한 2개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회수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처리한 내용이 없었으며, 2016년에는 2016. 2. 16. 24개 농장의 595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같은 해 3. 28. 보조사업비의 70%인 99,960천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농가별로 사업완료에 따라 정산하여 보조금 잔액을 교부하였으나, 사업을 취소한 2개 농가를 제외한 22개 농가 중 20개 농가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00면에 소재한 ○○○의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중 선금을 지급한 2016. 3. 31. 선금(7,056천 원) 전액을 인출하였다가 같은 해 8. 5. 모돈 구입 대금 지급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업을 포기한 2개 농가의 경우에는 예금에 따른 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교부액의 1%로 이자를 산정하여 회수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등 보조사업비 전용계좌 사용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31 조립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OO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보조사업자가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정산 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관리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에 따르면 조립지의 활착 조사는 조립 당해 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고, 활착률 80% 미만일 경우 당초 조립수종 또는 적지 적수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여 보식하고, 활착률 50% 미만일 경우는 재조림을 실시하되 적지적수 범위 내에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음

지적사항

- OO군에서 추진한 2014 ~ 2015 조림 보조사업 중 ○○○의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서 확인결과 105,968천원에 대한 입금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이 금액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여부를 알 수가 없고,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되어 있으며, 2014년 조림사업의 경우 산림재해 방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특용수 등 정산보고서의 사업완료 사진이 사업기간이 아닌 2009. 5월에 찍은 과거 사진이 첨부되었음에도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게 된 것으로 정산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전에 보조사업자가 이미 집행한 7건 6,520천원을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18개 사업 18명)가 생활비, 사업비 등 용도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보조사업 계좌로 사용하고, 한 계좌를 여러 보조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보조사업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OO군에서는 2015년 ○○리 산○○번지 3.1ha에 스트로브잣나무(3,150본) 2.1ha, 상수리(용기묘 900본) 0.3ha, 백합나무(1,200본) 0.6ha를 춘기 조림사업으로 추진한 후, 이 조림지에 대한 활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림목이 모두 고사했다는 산주의 말만 듣고 상수리(용기묘 6,600본) 2.2ha의 춘기 조림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3.1ha의 산지에 총 5.2ha의 조림을 실시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결과 2.1ha의 스트로브 잣나무는 95% 이상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ha에 춘기 조림사업 상수리(용기묘 6,600본)을 무리하게 식재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32 OO체육회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OO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 「OO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광역시에서는 2017년 보조사업자인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체육회로부터 2017년 사업보조금(1~2분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지만 정산검사를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이 원칙임에도 계좌이체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필수 증빙서류를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정상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하였음
- 이에 감사 기간 중 해당 미첨부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및 사유를 요구하였고 실무담당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한 사유로 업체가 타 지역에 소재하여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고 OO광역시 소재 업체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업무 편의성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지만 이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또한 예외적 허용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보조금 집행으로 지적하였어야 함
- 또한 보완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 3월 본회 사격팀 사격복 구입건과 2017. 5월 임원 단복 구입건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업체가 작성한 서류로써 해당 서류가 당시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정상적인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증빙할 수 없었으며 이후 실무담당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홈텍스 상에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총금액과 기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총액이 일치한다는 자료였음

- 하지만 이 보완자료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총액만을 확인해줄 뿐 정작 (종이) 세금계산서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매출처별 명세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는 아니었으며 사업담당자가 보완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조회한 결과 감사기간 중 보완 요청을 한 후 발급받아 제출한 것임
- 그 중 2017. 6월 OO산업에 지급한 근대5중 훈련장비 구입건의 경우 구매당시에는 42만원으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감사기간 중 보완 요청을 한 후 2018. 3월에 420만원과 42만원의 차액인 3,780천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한 것이며 감사기간 중인 2018. 3월에 새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각각 2017. 6. 8.과 2017. 6. 16.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이게끔 허위로 작성되어 있고 보완서류 제출 시에 해당 전자 세금계산서가 미첨부된 사유를 실수로 첨부를 누락한 것이라고 하는 등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새로 작성·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해당 내용을 지적한 후에야 새로 작성·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 담당자는 추후 작성·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서류 보완요구로 인해 확인하던 중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잘못하거나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새로 작성·발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당시 물품 구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구매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카드결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해당 구매의 증빙서류를 정산보고 당시 누락한 점, 증빙서류를 위조가 쉬운 (종이)세금계산서로 제출하거나 당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를 밝히지 않고 당시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물품 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는 증빙서류의 보완 및 소명 없이 정상 집행되었다고 부적정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음



33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도·감독 소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16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의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업체 선정 지양, 공사비 과다 계상 및 사찰 자부담액의 공사업체 부담 등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 계약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지적사항

- ○○○○과에서는 전통사찰 보수사업 보조사업자인 ‘●●’과 ‘◆◆’가 사업계획서, 자부담 협약서만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음에도 통장사본 등을 통한 자부담 예치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행하는 ‘●●보수정비 사업’, ‘◆◆ 보수 정비사업’에 대하여 위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대행을 의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여, 그 결과 민간 보조사업자들은 당해 사업을 설계가 대비 낙찰률 100%로 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 90,565천원(추산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은 2016년 전통사찰 보수사업을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금을 지급하면서 선금 지급과 관련한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선금 전액사용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확인 하지 않는 등 선금지급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과에서는 '●● 보수정비 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 시 위 구비서류가 누락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서류보완 요구 없이 걱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승인하였음



34

행사·축제분야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적사항

- OO시는 ‘바다그리기 대회’의 보조사업자가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사 용역비 24백만원을 계약 추진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20백만원과 4백만원으로 분할하면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행사축제분야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대회 시상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집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정산을 승인하였음
- 또한 보조사업 추진시 전시회 등 4개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 OO시의 사전승인도 없이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담당 부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35

OOO전람회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OO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보조금의 교부조건)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같은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지방보조금관리기준, OO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OOO전람회 교부조건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이 끝난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OOO전람회 정산서류를 각각 499일, 105일 지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관리·감독청은 총 26회에 걸쳐 이메일로 정산서 제출을 촉구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OOO전람회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고서야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5억원을 OOO전람회 보조사업자에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또한 보조사업자는 수익금 계좌에서 지출증빙서류 없이 인건비 등 8건 14,100천원을 지출, 미술작품 29,228천원 구입,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성과금 11,000천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계좌에서 OOO회장에게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16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법인명의로 아닌 개인통장으로 티켓수입, 인건비, 성과금,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정산서 제출을 지연한 점, 보조사업으로 많은 수익금이 발생함에도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수익금에 대한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해 OOO전람회 보조사업자로 부적정하게 또 다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해당부서 담당자들은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법령상 위법·부당함을 알고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36

OOO축제 수익금 관리·감독 소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OO광역시 OO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구에서는 보조사업을 통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 이외의 부분에 수익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수익금 집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여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방만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 OO구는 2016년~2018년까지 OO축제를 3회 개최하면서 체험행사 등으로 인해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수익금의 사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토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교부조건에 수익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 또한 붙이지 않아 보조사업자가 해당부서의 승인 없이 매년 발생금액 편차가 있는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전액 임의 집행하게 하고 정산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7 OO음악제 보조금 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7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에서는 수익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내역과 정산서의 지출내역이 매 지출건마다 일치되도록 관리하는 등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있음

■ 지적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OO군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2인 또는 1인 견적을 제출받아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하도록 하고, 통장사본을 제출 받아 정산서 지출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정산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명하여야 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해야 했음



- 그러나 OO군은 2016. 11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도 OO음악제 정산보고서에 대해 내부 공람으로 종결지었으며, 2017년도 OO음악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문서 접수나 내부 검토과정 없이 종결처리 하였으며 2018년도 OO음악제는 사업종료(2018. 9월)일로부터 77일 지난 2018. 12월 OO회계법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사업비정산 위탁 용역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없이 추진하여 2019. 3월에서야 성과품을 납품 받았으며, 2018. 정산보고서에 대한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나 정산결과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또한 2017년 ~ 2018년 정산보고서에는 통장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산서의 내역과 일치하게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6년 ~ 2018년 정산보고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출과정에서 대표자의 날인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OO군은 보조사업의 장부, 서류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결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 보조금 교부와 정산서 접수 및 상급기관 전달 등 역할만 수행하여 OO음악제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38 OO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2016.11.29.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 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고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도 여성기업 혹은 장애인 기업 등 1인 견적 제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광역시 4개 군·구에서는 제O회 OO전국대회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으로 행사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 했어야 하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혹은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어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행사 경비를 집행하면서 총 11건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해당 관서들은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정산 검사 시 아무런 지적 없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승인하였음
- 또한 OO구와 OO군에서는 OO회에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OO회는 행사에서 사용할 수상부교의 설치 및 운영을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교부 받은 보조금 중 8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계약금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용역으로 볼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또는 그 밖의 공사로 보더라도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 게다가 수상부교 설치 및 운영 업체로 선정된 000은 한 번도 수상부교를 설치한 실적이 없는 업체였고 000은 수상부교 설치, 경비 및 안전요원 용역, 조명 및 발전기 설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각각의 공사·용역을 모두 타 업체로 외주를 줌에 따라 88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업체에 65백만원을 지급하여 23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직접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 해당 실무담당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낭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감사기간 중 000이 외주를 준 내역에 대해 세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000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외주를 준 금액만을 000로부터 받아 적어 제출하였는바, 000이 외주업체에 준 금액이 실제 65백만원이었는지도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지 못한 상태임
- 해당 관서들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부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000으로 보조금이 지출된 내역만 있을 뿐 000이 실제 집행한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 요구를 통해 추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없이 정상 집행되었다고 정산검사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9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는 민간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자부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고 정산결과를 확정해야 하며, 비전자 기록물인 실적보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함

■ 지적사항

- OO구는 2014년도 “■■■■ 대축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보조사업자인 OO구 0000회에 76,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OO구 0000회는 보조금 중 49,500,000을 행사용역 경비로 집행하면서 공고 및 입찰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OO구에서는 보조금 교부전에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집행과 정산과정에서도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또한 OO구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2015년과 2016년 “■■■■ 대축제” 행사에서는 참가한 시민들에게 참가비를 징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였음. 당초 보조사업자는 참가비를 자부담 재원으로 하여 행사용품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행사 참가비는 징수 권한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수납하고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본 행사에서는 영리업체인 △△△가 참가비를 수납하였고 보조사업 정산서에도 참가비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OO구에서는 참가비 수입과 지출 총액 및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결과를 확정 하였음



- 그리고 2016년도 “■■■■ 대축제” 행사에서는 참가 기념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단가 2만원짜리 운동용 썬글라스 1,000개를 보조금 2천만원으로 구입하였으나 행사 참가자는 710명이었기 때문에 290개의 물량(금액 580만원)이 남았으므로 보조금 반환 또는 물량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구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정산결과를 확정 하였으며, “■■■■ 대축제”의 주요 물품 및 용역 거래는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끼리의 내부거래가 발생하여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정산과정에서 거래금액과 채주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주의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별도의 처분 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함으로써 동일한 내부 거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40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한 사항

- 「OO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교부조건)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OO구에서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정하여 교부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교부조건이 정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OO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평가대상)부터 제23조(평가결과 인센티브·패널티 적용)를 보면 「OO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사항, 참가자 반응 등, 2. 운영·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패널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구는 총 2016~2018년까지 4건의 축제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이 정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 30%를 준수하지 않고, 23~27%만 부담하였음에도 보조금 환수 또는 감액 조치 없이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Part
2보조금감사
주요지적사례



41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 목적인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광역시 OO구에서는 2016. 4월 (주)OOO와 6개소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총 6개소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총 용역부기금액 43,641,100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4월 착공하여 같은 해 6월 완료하였음
-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6개소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 하면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방하천인 OOO 구간의 고보수문 정밀점검을 위 용역에 포함하여 2016. 6월 완료함으로써 지방하천인 OOO 구간의 고보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소요된 비용 6,625,000원 상당이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가하천 이외의 지방하천 등에 위치한 4개 배수문의 정밀점검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로 집행하는 등 총 26,500,000원 상당이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OO군에서 매년 공고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량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라고 공고하고 있음

■ 지적사항

- OO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했음
- 그런데 OO군에서는 환경행정시스템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2018. 10월 전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25,240원을 수납하지 않아 체납차량으로 관리 되고 있는데도 조기폐차 지원신청 할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3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1,220천원을 지급하였음



4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채정지원)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유가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의 일정요건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2015.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OO협회 소속 (주)OO기업의 000이 음주 교통사고로 2015. 7월 운전면허취소 예정임을 통보받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입력하는 등 조치하여 000에게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5. 7월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000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2016. 9월 이전까지 총 15회 총 9,234,494원을 잘못 지급하였음
- 이를 비롯하여 5개 구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2015. 1월부터 2018. 3월까지 운전면허 취소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자 총 57명에게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총 284,460,305원을 잘못 지급하였음

44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부적정

- 「OO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신청,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OO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OO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재정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광역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으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재정보조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교부결정을 하였고,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즉시 반납하도록 교부조건을 붙여 통지하고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집행잔액을 즉시 반납하지 않고 넘겨 사용하였는데도 시정·보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출결의서 사본 등 지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일까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음



4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미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3항, 제8조(운행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제2항,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환수조치와 별개로 1회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항

- OO구 OO과에서는 관할청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하고 운행하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화물운송차량 63대가 157회에 걸쳐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5,684,57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감사기간 중에 확인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상응하는 환수조치 및 행정상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구 △△과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화물자동차 3대가 5회에 걸쳐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402,6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1년 이상 경과한 2019.6.28.이 되어서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하는 등 유가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46 OO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OO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적사항

- OO구 OO과는 OO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OO광역시 ■■■■ 관리사업 시행계획 및 2013.12.16. OO광역시 OO과로부터 2013년 ■■■■ 관리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세부사업 내용에 따르면 OO구역 주거환경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공부방, 체력단련실), 주민쉼터,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구역내 CCTV 및 보안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OO광역시장에게 보조사업 내용 변경보고 또는 변경승인 없이 OO구 OO과 임의로 순환형임대주택(3층, 257.58㎡ 사업비 529백만원) 건립하고 폐고가 34개동을 매입 및 철거공사(사업비 2,863백만원)를 시행하였음

PART 3

적극행정 면책사례

- ※ 본 사례집은 면책 검토·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면책 인정·불인정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별 구체적인 상황 및 업무처리 방식·과정 등에 따라 면책검토 결과가 달리 도출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면책 인정사례의 지적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본 사례집을 일선 행정 현장의 업무매뉴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처 :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발췌」

CONTENTS

I. 인정사례

[공공의 이익 분야]

1.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허용 257
2. 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의매각 추진 258
3. 투자유치를 위해 공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행사 시 시가로 하도록 계약 259
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60
5. 장기간 중단된 여객선 운항재개를 위해 평가기준 등을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 261

[적극적인 업무처리 분야]

6.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자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대학시설 확충 262
7. 재난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관청 협의 전에 공유수면매립 추진 263
8.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염병 자가격리 대상을 선정 264
9.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사 실시 265
10.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입찰참가업체에 보완자료 요청 266
11. 위탁개발한 종합청사의 낮은 임대율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면제 등 추진 267
12. 자체 친인척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장 안전 업무 위탁업체 인력 직접 채용 추진 268
13. 채점위원 변경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성 확보 후 위원 위촉 269

[고의·중과실 분야]

14. 평가점수를 사후에 조정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70
15. 지원금 지급대상 검토를 잘못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71
16. 수요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사업 추진 272
17.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수의계약 체결 273
18. 감리단 검토 및 결재권자 보고 후 설계 변경을 승인 274



- 19. 세관장 협의 없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을 입주시켰으나 관세는 부과 ... 275
- 20.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 ... 276
- 21.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지 대신 대금 감액조정 방법 제시 277

[계약·용역 분야]

- 22. 차질없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공사일정·순서 및 설계 변경 실시 ... 278
- 23.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다른 사업에 변압기용량 증설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 279
- 24.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운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 280
- 25. 농공단지 조기준공을 위해 별도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실시 ... 281
- 26. 하자분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공사 추진 ... 282
- 27.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 천장 전기공사 분할 계약 283
- 28.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체결 ... 284
- 29.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 체결 285
- 30.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286
- 31. 신설 고등학교에 조속한 급식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287

[시설·재산관리 분야]

- 32.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의매각 288
- 33.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 289
- 34. 국민임대산업용지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 290
- 35.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미임대 상가를 주민 탁구장으로 조성하여 무상임대 ... 291
- 36. 생태·환경자원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 292
- 37. 감정평가자 추가 선정으로 수수료 증가하였지만 교환 차액 예산 절감 ... 293
- 38. 공영주차장의 지속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 294

[예산집행 분야]

- 39.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 ... 295
- 40.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 296
- 41.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 건립 ... 297
- 42.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 298
- 43.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299
- 44.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따른 기부과정에서 기탁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 300
- 45. 예산편성 없이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예산 사용 301

[교육·복지 분야]

- 46. 공적자료가 아닌 해촉증명서 등을 근거로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 ... 302
- 47. 재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 303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우리시 사례)]

- 48. 사업물량 반영 없이 사업비만 증액한 설계변경 304
- 49. 일부 행정절차 이행 없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착공 305
- 50. 관급자재 선 구매 후 잔여물량 관리 소홀 306
- 51.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 건축허가 307

II. 불인정사례

[공공의 이익 분야]

- 52.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 308
- 53.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 309
- 54. 사유재산 보호 등을 사유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허가 ... 310
- 55. 주민 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 311
- 56. 사권이 설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 매입 312
- 57. 예산조기집행을 사유로 기존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 증가를 야기 ... 313
- 58. 불필요한 배수로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추진 314

[적극적인 업무처리 분야]

- 59.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정산처리 315
- 60. 단순 검토 미흡으로 인해 허가대상이 아닌 부지에 개발행위 초래 316
- 61.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평가 제외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317
- 62. 법령 질의 회신 및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 318
- 63. 법령상 매수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매입 319
- 64. 이용 가능한 콘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320

**[고의·중과실 분야]**

| | |
|--|-----|
| 65.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321 |
| 66.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에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요구 | 322 |
| 67.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 | 323 |
| 68. 승인 절차 없이 내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여 | 324 |
| 69. 지출 관련 서류 확인을 태만히 하여 횡령 사건 발생 | 325 |
| 70. 제안서 검토·평가를 생략한 채 사업자 선정 및 수익성 분석없이 운영기간 산정 ... | 326 |
| 71. 개발 미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 327 |
| 72. 공고된 심사기준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임의 변경 | 328 |
| 73.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329 |
| 74. 면허관청 협의 없이 준공 인가 조건을 변경 | 330 |
| 75.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용역 의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지연 ... | 331 |
| 76. 계약서 작성 전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회계·계약 절차 위반 | 332 |
| 77. 확인절차 누락으로 인해 ○○급여 부적정 지급 | 333 |
| 78. 공공시설 건축공사 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334 |
| 79. ○○복합센터 부지 토지매매 변경계약 부적정 | 335 |

별첨. 적극행정 면책 신청방법 안내 / 336

1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허용

사실 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산지 전용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A군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납 요청에 따라 분납을 허용

신청 취지

-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레저시설 등)로 이용객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득이 분납을 허용

심의 결과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낙후지역에 이용객 등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 계획 시설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한 것으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2 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의매각 추진

사실관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매각하고, 준주거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
- A군에서는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시행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가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다시 계약금액을 감정가액 이하로 감액하고 4차례 분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사업수익 악화 초래

신청취지

- 이 건 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 보상한 후 산업용지 분양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선행조건으로 분양률 25%를 달성할 것을 요구받아 상당 토지를 수의매각 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으며, 이후 수의계약 상대방이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을 요청,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동의하였음

심의결과

-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될 경우 공장 등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대출받기 위해 수의매각과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에 동의한 것으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되어 감경 (“징계요구” ⇒ “주의요구”)

3 투자유치를 위해 공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행사 시 시가로 하도록 계약

사실 관계

-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공업용지 매각 이후 업체가 직접 공장 설립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 「민법」 제59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
- A도는 기업 입지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첨단우량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공업용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환매권 행사가격을 공인감정 평가기관이 산출한 시세 가격으로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결과 B업체가 직접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초래

신청 취지

- 낙후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유치를 추진했으나 대상 부지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공장입지에 불리하여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 환매가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함

심의 결과

- 부지 매각을 통해 공장이 유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상 부지의 입지가 불리하여 매각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되어 감경 (“징계요구” ⇒ “주의요구”)



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실관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 또는 LPG를 구매·사용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A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카드사가 '경유구매카드 결제 내역은 실제 구매 유종과 관계없이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유종을 추정'하는 등 실제 주유 유종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
 - 그 결과 실제 주유한 유종에 상관없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유류구매카드의 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LPG충전소에서 경유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견

신청취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내역을 전산화하고 유가보조금 산정·지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로 인해 사후 적발이 가능하게 되어 부정수급 차단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 편의가 개선되는 공익적 효과를 얻음

심의결과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방지업무 편의가 개선되고 사후 적발을 위한 자료 검증이 가능해져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감경("징계요구" ⇒ "주의요구")

5

장기간 중단된 여객선 운항재개를 위해 평가기준 등을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

사실 관계

- A청에서 2018년 인천~제주항로 정기 여객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면서
 - 참가 업체 중 B업체 제안서(인력투입계획)에 “선원17명 확보”로 기재하고는 이를 입증할 고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 제안서 평가 시점에 17명 중 14명만 확보한 상태였는데도
 - A청은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여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됨

신청 취지

- 운항 중단 장기화로 여객 및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제주 사이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고
- 2016년의 참가 자격과 평가기준으로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신설법인의 신용도 최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

심의 결과

- 제안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인력투입계획 항목의 평가대상인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여부가 ‘선원’ 또는 ‘선원 예비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호했던 부분이 있고
- 장기간 중단된 여객선의 운항 재개를 위해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을 인정(“징계요구” ⇒ “주의요구”)



6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자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대학시설 확충

사실 관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교지 내에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 A대학교에서 학교 부지 내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해당 시설에 대규모 판매시설(전체 연면적 54,379㎡ 중 34,003㎡에 쇼핑센터를 설치)을 배치·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신청 취지

- 대학 내 문화·복지·체육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로 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국고 지원과 대학 자체재원만으로는 시설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전체 대학 중 최초로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대학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하였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판매시설을 포함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없이 교육 연구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음

심의 결과

- 대학 내 시설 확충은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문화·복지·체육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로 시설 확충이 시급하였으며 국고 지원과 대학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라는 그간 대학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해결방안을 도입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업무처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7 재난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관청 협의 전에 공유수면매립 추진

사 실 관 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관청과의 매립협의 등 매립 절차를 거쳐야 함
- A군은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고, 미등기 상태에서 위 도로를 사용

신 청 취 지

- 강풍 및 파도로 인해 노상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등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였음

심 의 결 과

- 주민들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고 어렵고,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8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염병 자가격리 대상을 선정

사실 관계

- A시는 관내 보건소로부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였던 메르스 의심 환자의 확진 사실을 보고받고 감염병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메르스가 전파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후 총회장소의 CCTV확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지 않은 채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 하겠다”고 발표하여 시민불편을 초래

신청 취지

- 당시 총회 장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혼잡하였고 투표로 인한 자리 이동이 있어 참석자 간 접촉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메르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음
- 이에 참석자 중 밀접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 회의 및 역학조사관 자문을 거쳐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조치 하기로 함

심의 결과

-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A시 역학조사관이 1명에 불과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전문가 회의 및 역학조사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불문”)

9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사 실시

사실 관계

-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시설의 연결통로에 결로가 발생하여 철도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 이용객 안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기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

신청 취지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미끄럼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결로 해소 공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 입찰 등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적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철도이용객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어 결재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기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결로 해소 공사를 진행함

심의 결과

-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공사의 시급성과 입찰에 부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보고한 후 내부 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결로 해소 공사를 추진하는 등 철도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징계·주의요구” ⇒ “불문”)



10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입찰참가업체에 보완자료 요청

사실관계

- A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3차) 사업자 선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B업체와 C업체에만 보증 수질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였고 B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B업체의 3개 항목 점수를 “0”점 처리하여 C업체가 시행사로 최종 낙찰됨

신청취지

- B업체가 제안한 공법으로는 보증 수질 달성 가능 여부가 담보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준공 지연, 손해배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 시공사는 입찰 시 제시한 보증 수질을 달성하여야 준공 처리가 가능하며, B업체와 동일한 공법을 제안한 C업체의 경우 B업체와 달리 3차 처리를 거처도 3개 항목의 농도(목표 방류 수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안서를 제출
- 보증수질 달성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그대로 평가·선정하는 것은 향후 가동 중단, 재정 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

심의결과

- 보완자료 요청은 제안업체의 시공능력과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목표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해당(“징계요구” ⇒ “불문”)

11

위탁개발한 종합청사의 낮은 임대율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면제 등 추진

사 실 관 계

- A구는 B공사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A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
 - ※ B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한 후 위탁기간(22년) 동안 청사를 임대·관리하고, A구는 발생한 임대수익 등으로 B공사에 개발원리금(약 302억 원)을 상환하는 방식
- 청사 임대율을 높이기 위하여 B공사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인 C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 기존 입점업체 명도·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선 지급한 후 임대료 등을 활용해 충당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25억 원의 재정부담을 결정

신 청 취 지

- 상가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탁개발비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임대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 상가 에스컬레이터 및 주차장 개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심 의 결 과

-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저조한 임대율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징계요구” ⇒ “주의요구”)

Part
3

정기평가인용
포인팅 사례



12

자체 친인척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장 안전업무 위탁업체 인력 직접 채용 추진

사실 관계

- A공사는 00억 사고 수습대책에 따라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5개 분야의 용역 위탁업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하고 제6회 이사회에서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을 배제하기로 의결
 - 이후 위탁업체 친인척 실태를 조사하여 21명이 위탁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합리적인 친인척 배제 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지원자 본인으로부터 채용 경로(공채/특채)를 파악하여 특채로 응답한 인원만 배제하기로 결정한 후 면접위원에게 배제대상자 명단을 제공
 - 그 결과 총 15명의 친인척이 위탁업체 채용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그 중 14명이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

신청 취지

- 위탁업체 직원을 신속하게 직접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7회 이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평등권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거쳐 채용 계획을 마련하였고
- 전환대상자들의 채용 경로는 위탁업체의 비협조로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 회의를 통해 특채로 조사된 10명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짧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였음

심의 결과

- 당시 신속한 직영체제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에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친인척 관련자 21명을 파악한 후 나름대로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중징계요구” ⇒ “경징계요구”)

13 채점위원 변경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성 확보 후 위원 위촉

사 실 관 계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채점 업무 실행계획」 등에 따르면 본인 또는 그 형제자매 등이 해당 연도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는 채점위원 추천 시 배제하도록 규정
- A원은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채점위원단 구성 업무를 추진하면서 B청으로부터 채점위원으로 추천받은 교사 중 6명이 본인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 교원 임용시험에 원서접수를 하여 위 실행계획에 따른 채점위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본인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 임용시험에 결시하겠다는 구두 확인 및 서약서를 징구 받은 후 채점위원으로 그대로 위촉

신 청 취 지

- 배제사유가 해당하는 교사가 채점위원으로 추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의 교체를 검토하였으나
- 교사의 대부분이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추천교사를 교체할 경우 수업 결손 등 운영상 어려움과 학부모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 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형제자매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하여 서약서 등을 징구 받고 그대로 채점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해당 교원의 형제자매 등은 실제 교원시험에 결시하였음

심 의 결 과

- 추천교사를 교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업 결손 및 학부모 민원발생 소지를 방지하면서도 그대로 채점위원으로 위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교원 임용시험 채점위원 선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한 적극성이 인정됨



14 평가점수를 사후에 조정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 A공사 팀장은 유럽국가에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한 배당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 업체선정 절차 진행 도중 B업체에 3일을 기한(국가계약법령 상 10일 기한)으로 정량평가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구한 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
 - 또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뒤에 당초 자신의 정성평가점수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점수를 조정하여 당초 1위였던 B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였던 C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

신청취지

-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유럽국가에 대한 배당세액 환급신청을 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배당세액 환급신청 업무를 새롭게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
-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협력 인력이 없어 원활한 세금환급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심의결과

- 배당세액 환급신청 업무는 국내 국가자금 운용기관 중 A공사가 처음 시도하면서 국가와 공사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 해당 업체와의 사적인 친분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은 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징계요구” ⇒ “주의요구”)

15 지원금 지급대상 검토를 잘못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 실 관 계

-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설선 및 선별기를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증빙자료(건설기계등록원부, 중기매매 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A청 국장은 수중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업무를 총괄하면서
 - 선별기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B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부하 직원에게 B업체가 선별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재검토하도록 지시
 - 이후 부하 직원이 선별기 최초 매입일(2009년)보다 양수일(2007년)이 빠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진위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B업체가 선별기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구조조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한 결과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B업체에 지원금 지급 초래

신 청 취 지

- 담당국장은 실무자와 중간관리자가 검토하여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B업체가 구조조정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행정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구조조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것으로 B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음

심 의 결 과

- 부하직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과정에 부당한 업무지시나 알선·청탁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업체와의 사적인 친분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은 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이 인정됨

※ 관련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실무자들은 면책기준 중 '정보의 충분한 검토'기준을 미충족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16 수요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사업 추진

사실 관계

- A시에서는 B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4개 업체에 무상 공급해오다 B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유상 공급을 추진하면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자에게만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위 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수처리수의 수질에 문제가 없고,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수를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 시의회로부터 하수처리수 무상 공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업체들에게 재처리수를 유상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10억여 원의 사용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

신청 취지

- B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은 시의회 업무보고시 하수처리수 무상 공급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하였고
- 기존 수요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자 회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재처리수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음

심의 결과

- 재처리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여 사용 동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재처리수의 공급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 공중위생성과 수질환경 관리의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처리수를 우선 공급하려고 하였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

17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수의계약 체결

사실관계

- A공단은 B회관의 승객용 승강기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 위 공사는 주요 구성품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신규 승강기 제작·설치와 다름이 없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도
 - ‘부품 호환성’을 사유로 들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인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신청취지

- 해당 건물은 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이나 1일 상주 인원 및 내방객이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로,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우려되어 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음
- 해당 공사를 성능개선공사로 판단하여 승강기 주요 구성품 중 상태가 양호한 주요 부품은 재사용하고 작동, 기능 및 상태가 불량한 부품 위주로 교체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조달청 유사 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함

심의결과

- 다수의 시민이 해당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구성품의 재사용 가능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18 감리단 검토 및 결재권자 보고 후 설계 변경을 승인

사실 관계

- A공단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계약상대자인 B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 위 공사의 입찰안내서 등에 따르면 1일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이 300톤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 B업체가 1일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을 270톤으로 줄이는 대신 기존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 탈수기로 교체하여 탈수 효율을 높여 이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신청하자
 - 책임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결재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설계 변경을 승인한 결과 당초 설계 처리용량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탈수기 운영비가 7.6 ~ 39.3%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한 후 감리단의 검토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설계 변경을 승인하였음

심의 결과

- 담당자가 책임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결재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한 후 설계 변경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19 세관장 협의 없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을 입주시켰으나 관세는 부과

사 실 관 계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입주 허가 시 '양허물품 취급업종'은 관할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 ※ 양허물품 : 「관세법」 등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이만큼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약속(양허)한 농·임·축산물
- A시는 B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를 선정하면서 관할 세관장과 협의 절차 없이 양허물품 취급업종을 영위하는 D조합법인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가하여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 기준 임대료의 26%) 및 세제 혜택(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부여

신 청 취 지

- D조합법인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E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시 사업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고
- 투자유치가 부진하였던 B항 배후단지에 신규 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다만, 양허물품 취급업종의 경우 입주 허가 시 세관장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세관장 협의를 거치지 못했음

심 의 결 과

- 장기간 미분양 상태이던 항만 배후단지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관할 세관장의 업무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관할 세관에 수차례 문의하였고 입주기업 심사 시 세관 관계자도 참여하였음
- 해당 업체에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할 세관장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취지(관세의 부당 감면·면제 방지)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회복 가능한 하자라고 판단됨



20

개발제한구역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

사실관계

- 공무원 A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약 1,200㎡를 절토 후 정지 작업을 하였고,
 - 이 과정에서 토석 및 일부 콘크리트 폐기물 약 1,260㎡를 개발제한구역 부지인 ○○일대에 매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토석 매립)을 하였음

신청취지

- 해당 구역이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라 대지로서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있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민원 편의 등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심의결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공사가 전적으로 민원인 편의 등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법률자문 등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허가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면 허가를 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21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지 대신 대금 감액조정 방법 제시

사 실 관 계

- A기관은 침수 경고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용역” 개발과정에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가 관련 시스템 개발로 유명한 C업체와 기술지원 확약이 체결되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에 B업체와의 기술협상 성립을 통보하였고 조달청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
 - 이후 A기관은 자체조사 결과 B업체가 C업체로부터 받는 기술지원이 미약하여 용역을 완벽히 완료하기 어렵고,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조달청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

신 청 취 지

-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스템 개발 필요, A기관이 제기한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려워 추가 조사 등으로 B업체로부터 충분한 기술지원을 받고 있음을 직접 확인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

심 의 결 과

- 계약 해지 후 재계약 추진 시 개발 및 시험운행 일정이 지연되어 우기 전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이 명백한 점 등 공익 목적으로 판단됨
- 수차례 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률 자문을 거쳐 A기관이 제기한 사유만으로 계약 해지가 어렵고 법적 소송 발생 시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을 감안한 점, 추가 조사를 통해 B업체가 C업체로부터 충분한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직접 확인하여 이 사실을 A기관에 통보한 점, 대금 감액 조정이라는 중재방법을 제시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2 차질 없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공사일정·순서 및 설계 변경 실시

사실 관계

- A공사에서 B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함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재배치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한 후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 공간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 계획 수립 후 4차례나 공사일정·순서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 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물량(전체공사 물량의 20%)을 신규 발주하는 공사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 중인 공사에 포함하도록 설계 변경

신청 취지

- 체크인카운터 공사일정 및 순서 등을 변경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여객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개선공사 중에도 여객편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임
- 환경개선공사의 계약 변경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공항운영 효율 및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었음

심의 결과

- 급증하는 여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내외 공항 운영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1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편의를 위해 시설개선 계획 및 공사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업무처리의 공익성 및 적극성이 인정되며
- 추가공사는 진행 중인 공사에 반영하는 것이 신규 발주 공사에 포함하는 것보다 간접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고, 계약 변경에 필요한 내부 방침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주의요구” ⇒ “불문”)

23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다른 사업에 변압기용량 증설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사 실 관 계

- A공단에서 B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종·내역 등을 추가할 수 없는데도
 - B건설사업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C전기실 수전용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1,000kVA → 2,000kVA)를 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신 청 취 지

- B건설사업구간인 D역사 증축으로 인해 전기 사용 설비가 증가되어 D역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C전기실 수전용 변압기의 용량을 증설함으로써 D역사 운영에 필수적인 동력설비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 E전기실 장애 발생시 전원 이중화로 급전계통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심 의 결 과

- D역사 증축으로 전기 사용 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B건설사업에 포함시켜 수전용 변압기 용량을 증설한 사항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이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24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운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사실 관계

- A공사는 “B구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 장비 고장 등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지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배관 운반을 위한 특수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 그런데 위 차량의 개발과정에서 배관지지대 결합방식 등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입증시험 중 배관에 거동현상(움직임)이 일어나 추가적인 보강 공사비가 발생

신청 취지

- 특수 운반 차량 개발과정에서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설계부서 및 설계사와 함께 검토·확인하였고, 공사기간 단축 방안 선정 시 내부결재 및 보고 절차를 거쳤음
- 또한 특수 운반 차량 개발로 공정을 총 5.5개월 단축하는 등 계획한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심의 결과

- 지지대 결합방식 검토 등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적기 가스공급을 위하여 기존에 없던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였고,
- 그 결과 최초 계획한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및 적기 가스공급 등 공익을 도모한 점이 인정됨
 (“견책” ⇒ “경고” / “감봉” ⇒ “견책”)

25

농공단지 조기준공을 위해 별도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공사 실시

사 실 관 계

- A군에서 B특화농공단지 내 오·폐수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B특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사업 목적이 달라 별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별도로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기 공사 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한 후 공사를 실시

신 청 취 지

- 오·폐수연계처리 중계펌프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별도 공사로 발주할 경우 설계 및 입찰에 최대 64일이 소요됨
- 농공단지 입주가 예정된 선분양 업체의 공장가동이 늦어질 경우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 농공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추진하였음

심 의 결 과

- 중계펌프장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없었으나 환경보전을 위해 오·폐수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C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게 된 시설로
- 분리 발주하였을 경우보다 공사기간을 34일 단축하여 농공단지 조기 준공 및 분양실적 향상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경징계” ⇒ “기관주의”)

Part
3전기·열·에너지
환경·사
례



26

하자분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공사 추진

사실 관계

- A양수발전소에서 부품 손상으로 발전이 정지되자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 위 회사 「공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긴급공사 발생 시 즉시 공사업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착공 후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 담당 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위 발전소는 우선 착공할 것을 지시한 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 의뢰일로부터 3일 후에 준공처리

신청 취지

- 양수발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사 관련 전문가들과 원인을 파악하였으나 제작사와 하자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
- 이에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한 후 공사 범위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준공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

심의 결과

- 고장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발전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므로 공익 목적 행위임이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27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 천장 전기공사 분할 계약

사실 관계

- A교육청은 석면시설 교체를 위한 학교 천장 전기공사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고
 - 추정가격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 A교육청은 B중학교 등 3개 학교의 천장 전기공사 3건에 대하여 건별로 업체를 각각 지정하여 1인 수의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합계약 대비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였음

신청 취지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야 하나, 위 3개 학교를 통합하여 계약할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져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공사업체들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음

심의 결과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계약업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등 면책기준을 충족함(“주의요구” ⇒ “불문”)



28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체결

사 실 관 계

- A공사는 B국제공항에 폭설 장기화로 항공기 결항사태가 발생하자 “제설제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 위 공사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자체취득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 기존 계약업체가 ‘납품지연’을 통보해오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설제를 구매

신 청 취 지

- 지역 내 폭설로 인한 제설제 구매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설제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긴급히 선정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 결항으로 인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 및 여객수송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심 의 결 과

- 계약 추진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 및 보고절차를 거쳤으며
- 폭설에 따른 결항사태를 해소하고, 신속한 제설제 확보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원활한 여객수송을 지원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29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터 등 구매 계약 체결

사 실 관 계

- A공사는 “B시스템”구축에 따른 “컬러프린터·컬러복합기 신규 설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 사업추진 도중 위 시스템을 회사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이 보류되었는데도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의 취소 또는 납품 일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구매를 추진
 - 그 결과 컬러프린터 등 신규 구매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 지출이 발생함

신 청 취 지

- B시스템의 확대계획 보류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계약 내용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 변경된 계획에 부합하도록 향후 추진 일정 및 컬러프린터 등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음

심 의 결 과

- 소속 부서장의 결재 및 일상감사 이행 등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컬러프린터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규격 검토를 충실히 거쳤음
- 또한 예측하지 못한 계획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선제적으로 컬러프린터 등의 추가적인 활용방안 등을 검토·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주의요구” ⇒ “불문”)



30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사실 관계

- A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비용역을 시행하면서
 - 계약상대자가 이물질 제거에 실패하자 원인분석을 통해 용역 실패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2차 추가 이물질 제거 역무를 지시한 후 1차 용역 대가와 2차 추가용역 대가를 모두 지급

신청 취지

- 비파괴검사로 확인된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용역사와 제거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하였음
- 또한 이물질 제거 역무의 특성상 성공 가능성을 100% 보장할 수 없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이 있고, 1차 제거에 실패한 후 법률 질의를 통해 용역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심의 결과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1차 제거 실패 후 추가용역을 시행하였고
- 계약상대자에게 1차 이물질 제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감액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31 신설 고등학교에 조속한 급식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사실 관계

- A고등학교에서 위탁 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데도
 -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위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신청 취지

- 당초 B중학교만 운영하다가 행정인력의 추가 증원 없이 A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신학기 업무까지 병행하게 되어 행정실 업무가 과중 하였으며
- 급식 인원이 120여 명에 불과하고 학교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학교 개교 시기에 맞추어 급식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심의 결과

- 위 급식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당시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 120여 명의 적은 급식 인원수로는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개교 시기에 맞추어 급식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경징계” ⇒ “경고”)



32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의매각

사실 관계

- A공사 「부동산관리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해당 부동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불용 결정된 1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수의매각할 경우에도 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A공사에서는 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사 소유의 토지가 수의 매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유 등으로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B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신청 취지

- 해당 토지를 공매할 경우 알박기, 투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컸고 B 아파트 건설 시행사 이외에 입찰에 응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
- 해당 토지는 면적이 작아 향후 A공사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공사가 계속 보유·관리하는 데에 실익이 없는 반면, B아파트 단지에는 꼭 편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매각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심의 결과

-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경우 이를 악용할 이유가 아니라면 매수자 이외에 입찰에 응할 사람이 없었고 해당 토지는 향후 아파트 진입 및 외곽도로로 조성되어 C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며
- 매각대금을 감정평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하여 결정하는 등 업무 절차상 합당한 결재와 문서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불문”)

33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 적용

사 실 관 계

-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A공단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 A공단은 공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사용료수입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을 결정하면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시행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낭비

신 청 취 지

- 건물의 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이 건물의 실제 재산 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사용료 수입을 산출하였고
- 실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의 15%에 불과하였음

심 의 결 과

- 재산가액 산정 업무 절차상 부분적 하자는 있으나 국유 건물의 사용료 수익을 높이하고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34

국민임대산업용지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사실관계

- A공사에서는 국민임대산업용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위 공사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전환 방침」 등에 따르면 국민임대산업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의 신청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 임차업체가 자체 소유토지와 A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걸친 건물(부속동)을 신축하기 위해 A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하자
 - 해당 건물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도록 최초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불가 등을 우려하여 ‘사용승낙’ 대신 ‘분양전환’을 승인함

신청취지

- 임차업체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도로 출입구 유지를 위해 A공사가 임대한 토지에 걸친 부속동 신축이 필요하였고
- 분양전환 조건(최소임대기간 5년)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전매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입주기업의 사용토지와 소유자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분양이 불가피하였음

심의결과

- 조선소 폐쇄 등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임대 산업단지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사의 재무개선에도 기여함
-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는 등 면책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35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미임대 상가를 주민 탁구장으로 조성하여 무상임대

사 실 관 계

- A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장기미임대 상가를 관리사무소에 무상임대하면서
- 「제7차 장기 미임대 상가 사회적 기업 등 유치방안」 및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등에 따르면 무상임대 시에도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상가 내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 A공사는 상가 내부 일부를 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공사 예산을 사용하여 탁구장을 조성하고 탁구대 등 비품을 구입

신 청 취 지

- 해당 단지는 B동 기초생활수급자의 70%가 거주하는 단지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음
- 이에 관리소에서 주민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C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주민 건강프로그램(탁구교실)이 선정되었으나, 해당 사업 규정상 보조금은 수선비,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A공사에 탁구장 조성을 요청
- A공사는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상가 환경정비로 인한 신규입점 증가 효과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년 단위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였음

심 의 결 과

- 입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상가 활성화를 통한 유상임대 확대 등 적극적으로 공사 자산의 가치상승을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Part
3

전기·통신·정보·민원·사례



36 생태·환경자원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

사실 관계

-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3장 제3절에 따르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은 다른 방법으로 재산 취득이 곤란할 경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음
- A시는 'B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면서 사업구역 중심지역에 포함되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 등 활용가치가 낮은 사유지 16필지와 시유지 8필지를 교환하였음

신청 취지

- 시유지와 토지교환을 한 사유지는 'B골 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중심지구에 해당하지만 불법 상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어, 토지를 확보하여 생태·환경 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 A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음

심의 결과

- B골 지역의 생태·환경자원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고 A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혼계" ⇒ "주의요구")

37 감정평가자 추가 선정으로 수수료 증가하였지만 교환 차액 예산 절감

사실 관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위 공단 「재산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르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두 개 감정평가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음
- A공단은 국유재산을 B공사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면서 교환 상대방인 B공사와 감정평가 시행방법 및 비용부담 주체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C·D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B공사에서 감정평가 의사를 물어 E감정평가법인에 추가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신청 취지

- 감정평가 시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 상대방인 B공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결과적으로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공단에서 B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교환차액을 절감할 수 있었음

심의 결과

- E감정평가법인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결과적으로 공단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임이 인정됨(“주의요구” ⇒ “개선요구”)



38 공영주차장의 지속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

사실 관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료는 사용·수익 개시일 전까지 선납토록 하여야 하고, 분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허가자가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A청은 B공영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허가자로부터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사용·수익 발생 후부터 4회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함

신청 취지

- 수허가자가 자금난 등으로 사용·수익 개시일 이전 사용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공영주차장의 개시일이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음
- 이에 계획된 사용·수익 개시일을 준수하기 위해 신속히 분할 납부하도록 결정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심의 결과

- 해당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지속·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이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39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

사실 관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 보상 시 변상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사 「취득경비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3억 원 미만의 취득경비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A공사는 B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B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17명에 대한 변상금을 공사가 지급한 후 보상금을 지급

신청 취지

- B지구는 주민 대다수가 국·공유지 및 공동묘지 위 무허가 불량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등 거주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였고
- 개별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변상금 부담 증가와 과소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협의보상 유인방안으로 변상금을 공사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심의 결과

-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 대한 적기 보상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취지가 공익에 부합하고
- 변상금 금액이 소액인 반면 보상협의 대상(17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한 후 변상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주의요구” ⇒ “불문”)

Part
3

정기「예산집행」사례



40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사실 관계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A군은 B시장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B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창업골목 조성공사가 중지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B시장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

신청 취지

- 창업골목 조성공사 추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로 공사가 중지되어 예비창업자의 창업이 지연되는 등 생계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

심의 결과

-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현재 청년창업 23개 점포가 성황리에 영업 중으로 B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혼계” ⇒ “불문”)

41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하여 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 건립

사 실 관 계

- A공사는 B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소방기본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서 등 공공청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여야 하는데도
 - C사업단은 D도와 E시의 요청에 따라 119안전센터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신 청 취 지

- B지구(2,500세대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로 소방서는 2021년 이후에 건립이 가능한 상황 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음
- 이에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장래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를 제공하였으며, 임시청사는 향후 정식 청사 건립 이후에는 홍보 시설로 활용 가능함

심 의 결 과

-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에 119안전센터를 조기에 마련하여 소방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였고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등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함(“주의요구” ⇒ “불문”)



42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

사실 관계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데도
- A군은 B종합장묘센터 진입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여 C마을 주민협의회에 지원하면서 당초 지원한 보조금 예산으로 구입 가능한 염화칼슘 살포기를 예비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지원

신청 취지

- 제설지역 대상인 B종합장묘센터 진입도로는 동절기 결빙이 심한 지역으로 기존 염화칼슘 살포기를 사용하던 중 폭설로 인해 기계 고장이 발생하여 긴급히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였음
- 이에 예비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장묘센터 이용객 등 다수의 불편과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

심의 결과

- 겨울철 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군도 등의 제설작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훈계” ⇒ “주의요구”)

43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사실관계

- B시 「재무회계규칙」 제23조 및 A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은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
- A진흥원은 B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제조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입주기업의 제조공간 시설 구축 예산이 부족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 및 B시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

신청취지

-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입주기업의 민원 및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B시와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였음

심의결과

- 사업일정 지연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결과였고,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면책기준을 충족함(“훈계” ⇒ “주의요구”)



44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따른 기부과정에서 기탁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사 실 관 계

- A구에서는 매년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을 추진하면서
 - 지방세 미환급금 중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1만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소액환급금 기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186건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공

신 청 취 지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일환으로 환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연계를 추진한 사항으로 소액 환급금 기부는 선의의 행정을 펼치고자 한 취지이며,
-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추진한 공익목적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면책 신청함

심 의 결 과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환급대상자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 186건, 71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급통지, 인·허가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로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인정보 미유출 및 폐기처분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여 면책(“경징계” ⇒ 면책)

45 예산편성 없이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예산 사용

사실 관계

- 공무원 A는 어항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 세출예산 편성과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없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B섬 차도선 접안시설 신규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사용

신청 취지

- 태풍 복구 중인 타 어항시설의 사업비 감액분 및 잔액분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편성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 태풍 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한 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태풍 피해 보고가 누락됨에 따라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책 심사를 신청

심의 결과

- 복구계획 수립 당시 B섬 차도선 접안시설의 하부 피복석 유실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피해복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균열과 침하가 진행되어 피해발생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피해부분이 확장되어 우도마을 30세대 51명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차도선 접안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의 기본 생활 곤란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됨(“경징계” 면책)



46

공적자료가 아닌 해촉증명서 등을 근거로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 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

사 실 관 계

- A공단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 예외제도를 운영하면서
 - 위 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중인 지역가입자가 휴·폐업, 실직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 자료 또는 건강·고용보험 자료 등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소급 납부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 공적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발급한 해촉증명서 등을 근거로 소급 납부 예외를 인정

신 청 취 지

- 공적자료 보유자에게만 소급 납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공적자료 이외의 자료로 납부 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최근 해촉증명서 등으로도 소급 납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개정되었음

심 의 결 과

-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적자료 보유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 공적자료 외에 해촉증명서 등으로도 소급 납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주의요구” ⇒ “불문”)

47 재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실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
- A공단은 ‘흉터 장해’ 및 ‘왼쪽 팔 기능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데 대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화상으로 인한 ‘흉터장해’ (9급)와 그로 인해 파생된 ‘왼쪽 팔 기능장해’ (12급)가 발생한 위 급여청구 건은 그 중 높은 ‘흉터장해’ 9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2가지 장해등급을 산정한 후 이를 조정하여 8급으로 결정

신청 취지

- 재해자의 흉터가 전체 체표면적의 약 50%에 해당된다는 장해통합심사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왼쪽 팔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는 흉터(9%)를 제외 하더라도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 흉터가 남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위 사례와 유사한 심사 결정 취소 사례를 찾아 두 개의 장해원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밝혀내 장해등급을 9급에서 8급으로 조정하였음

심의 결과

- 장해통합심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흉터 장해’와 ‘왼쪽팔 기능장해’의 원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등 산재 노동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됨 (“불문”)



48 사업물량 반영 없이 사업비만 증액한 설계변경

사실 관계

- A구에서는 ○○역 환승센터 조성공사를 추진
 - (사업내용) 환승센터(8,000㎡) 조성, 접속도로(221m) 개설('18.12.21. ~ '19.12.20. 약 16억원)
- 사업예산 불용 시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집행잔액 220백만 원을 사업물량 반영 없이 사업비만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음

신청 취지

- 담당자는 구 자체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을 상급기관 환승센터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 사업비 확보
 - 해당 사업은 ○○역 환승거리 과다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및 대중교통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공익사업임
 - * 무단횡단 사고, 버스정류장 정차시설 부족, 접속도로 급커브구간 버스 교행 불가 등
 -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방문 협의(7회) 및 현장 설명(10회) 진행
 - * (10개 기관) 0000공사, 00철도(주), 0000경찰청, ○○경찰서, 00시 00정책과, 00화물과, 00정책과, 00건설본부, 000사업본부, 0000공사

심의 결과

- 해당 사업은 ○○역 환승거리 과다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및 대중교통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공익사업으로 담당자와 사업시행자 간 사적 이해관계 없음
- 부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한 하자가 있으나, 이는 공사비 증가 사유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었으며
- 현재도 불가피한 각종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등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훈계” 면책)

49 일부 행정절차 이행 없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착공

사실 관계

-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 완료 없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착공하였음
- (사업내용) 저류시설 2개소, 펌프 3대 등 설치('18.12.24. ~ '20.6.15. 약 120억원)

신청 취지

- 국지성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구역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임
- ※ '07년, '10년, '12년, '17년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등 침수 피해 발생
- 신속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착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보다 준공 시기를 1년 앞당김
- ※ 적극행정 결과: '18.12.24. ~ '20.6.15.(우기 1회)/행정절차 완료 시: '19.12 ~ '21.6(우기 2회)

심의 결과

-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착공한 과실은 있으나, 사적 이해 관계는 없음
- 침수피해 예방 시설을 1년 앞당겨 설치하고 공사착공 후 실시계획 인가는 받고 계획 변경은 심의 중에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훈계" 면책)



50

관급자재 선 구매 후 잔여물량 관리 소홀

사실 관계

-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관급자재를 공정에 맞춰 구입하지 않고 공정 도래 전 관급자재를 선 구매한 후 공사현장 야적장에 보관·사용하여, 현장 여건 변화에도 잔여 물량을 반납할 수 없는 등 비효율적인 공사 관리 실시
- (사업내용) 소하천 1.5km, 교량 4개소 등 정비('15.4.9. ~ '17.12.20. 약 25억원)

신청 취지

- 해당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협소한 하천 단면을 정비하고 인명·재산 보호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익 목적 사업으로서
- 중앙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한 사항으로 공정 도래 전 관급자재를 선 구매한 후 공사현장 야적장에 보관·사용하고
- 공사 중 교량 형식과 호안블럭 시공방법 변경으로 기 구입한 관급자재를 활용 또는 반납할 수 없었으나, 남은 자재는 인근 다른 소하천 정비 공사에 사용하였음
- * (잔여물량 내역) 철근 65t, 호안블럭 486개 / 총 84백만원 상당

심의 결과

- 사적 이해관계는 없고, 비효율적으로 자재 관리를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에 따른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훈계” 면책)

51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 건축허가

사실관계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1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대상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A구에서 건축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녹지지역 내 건축물 연면적 302㎡ 공장신축(주방용품 생산공장)건에 대하여 건축신고로 처리

신청취지

- 착오 처리된 사항 발견 후 적법하게 허가사항으로 변경하고 감리자를 지정하였으며 주방용품 공장을 녹지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식품공장으로 변경 후 준공 처리
- 준공 이후에도 무단 용도변경(식품공장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여 사용한 위법사항을 조기에 해소

심의결과

- 최초 착오에 의해 신고 처리한 점과 감리자 없이 공사가 추진된 문제점이 있으나 건축주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 착오 신고 수리사실을 발견한 후 건축물 준공 전 행정 오류를 치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 준공처리 전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완성한 점, 사전조사 기간 지적된 위법사항(무단용도 변경)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인정(“훈계” 면책)



52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사실 관계

- A공사의 매입공고 등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주거·지역여건, 준공기간 등을 감안, 위 공사에서 산정한 등급별 협의 매입률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직상위등급의 협의매입률 이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 협의 기한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가 결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A공사에서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 A공사는 6개 업체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여 2개 업체는 협의를 완료하고 4개 업체와는 협의가 결렬되었는데도
 - 협의가 결렬된 4개 업체 중 B업체에 대해서만 협의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고 연장된 협의 기한까지도 협의가 안되자 재협의를 진행한 후 매입가격을 직상위등급의 협의매입률 보다도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매입

신청 취지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심의 결과

- 이 건 사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상 결렬 후 재협상을 하고 매입 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특혜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익목적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53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

사 실 관 계

- A공사의 「기부금품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는 기부금품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기부자와 이해관계(허가, 공사, 용역, 임대)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영업수익 이외의 수익은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도
- A공사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단 보조사업 자금 수탁은행인 B은행으로부터 사무실 이전비용을 지원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하였고 위 비용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음

신 청 취 지

- 소상공인에 대한 쾌적한 상담환경 조성, 원활한 금융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였고 금융기관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심 의 결 과

- 기부금품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공단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Part
3정기평가보고서
편찬
사례



54 사유재산 보호 등을 사유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허가

사실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 열거된 경우에만 건축물 신축이 가능
- A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전(田)과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함

신청 취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주택 등 신축을 허용하지 않아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었고, 이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한시 허용규정이 제정됨
- 허가신청 토지는 한시 허용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만료 전 조급하게 소규모 가설형태로 허가를 받다 보니 분양이 어렵고 도시미관 저해 및 불법 방치의 우려가 있어 기존 소규모 가설형태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큰 규모의 건축물로 다시 허가하는 것이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건축을 허가함

심의 결과

- 도시의 미관 저해 및 사유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추구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상의 공익(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과 그 법률 제정 취지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55

주민 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

사실 관계

-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을 기존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A시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B지역 및 C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 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 처리하였음

신청 취지

-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여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였고
- 사업시행 전까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심의 결과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음

Part
3정기평가대상
민원권 사례



56 사권이 설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 매입

사실 관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 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A교육청은 B고등학교 증축 및 주차장 확보용 학교부지를 매입하면서
 - B고 행정실장은 해당 부지에 송유관 매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행정재산으로 사용 불가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작성
 - 또한, 이후 A교육청 재무과 세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과(재산팀)에서 지상권 설정사유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지 않자 지상권을 일시 해지한 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 토지매입에 개입
 - 그 결과 매입 부지를 교실 증축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산책로 등으로 이용

신청 취지

-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족한 주차장 및 야외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주변 토지 소유자는 매도 의사가 없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매입 협의가 가능한 토지주의 매각 의사를 확인 후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제출함

심의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상권을 일시 말소 후 재설정하는 등 법령을 위반, 지상권이 설정되어 매입이 불가능한 송유관 매설토지를 취득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
- 토지 취득 후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향후 송유관 이설 비용부담까지 발생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함

57 예산조기집행을 사유로 기존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 증가를 야기

사실 관계

- A부는 항로 준설공사 계획 수립 및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 투기장보다 가까운 인근 산업단지에 준설토를 공급함으로써 준설토의 운송비용과 산업단지의 조성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항로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일정에 맞추어 항로준설공사의 계약(계약금액 149억 원)을 체결하고도
 -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고 연내 준공이 어려워 예산 이월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공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 그 결과 항로 준설공사비가 13억 원 증액되고, 57억 원 상당의 준설물량이 축소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비로 39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기존 방식보다 공사비가 총 109억 원 증가하였음

신청 취지

-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예산 이월을 방지하였으며 항로 준설을 통해 낮은 수심으로 인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항만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

심의 결과

- 항로 준설공사비 예산 149억 원을 조기집행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이 109억 원의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저하되는 공익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행위를 공익목적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58 불필요한 배수로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추진

사실관계

- A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사업비 58억 원)을 추진하면서
 - B면사무소에서 ‘前 부군수의 별장 진입로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우천 시 우수가 많이 흐르지 않는 등 배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주민숙원사업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도
 - A군은 위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우천 시 농경지 관리 곤란’을 사유로 前 부군수의 별장 진입로 배수로 설치 공사(사업비 3천 만원)를 주민숙원사업 목록에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

신청취지

- 주민숙원사업은 소수의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며, 前 부군수 별장은 지리 상 마을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위 공사를 통해 폭우 시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하는 등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심의결과

- 해당 공사는 前 부군수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B면사무소에서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 주민숙원사업 추천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공익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려움

59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정산처리

사실 관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자는 지급한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취소 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이로 인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무원 A는 보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사업자의 거짓 신청으로 가축 분뇨에너지화 사업 중 발전기 등 기계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 처리함

신청 취지

-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서 당초 반대하던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합작법인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고용창출을 추구하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처리함

심의 결과

-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의 추진과정은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처리한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정하기 어려움

Part
3정기평가
면접
사례



60

단순 검토 미흡으로 인해 허가대상이 아닌 부지에 개발행위 초래

사실 관계

-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대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대표단면)에서 단면이 등고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A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B업체가 제출한 ‘경사도 조사서’에는 최대경사도의 측정 단면이 등고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정되지 않았고 최대경사도(14.92도)가 평균 경사도(16.4도)보다도 낮게 명시되어 있는 등 조례에 따라 경사도가 측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

신청 취지

- 최대경사도 산정 시 복수의 단면 중 최적 단면을 담당자가 판단하여 대표단면으로 선정하여 측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단면 및 최대경사도를 검토하는 등 맡은 바 업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음

심의 결과

- 신청인이 조례에서 정한 방식과 달리 최대경사도가 과소 산정된 ‘경사도 조사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허가한 것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 단순히 ‘경사도 조사서’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처리의 적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61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평가 제외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실 관계

- A시는 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낙찰자 선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 위 사업의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등에 업체명기 및 유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안 신청을 무효로 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도
 - 사업제안서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B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업체명이 명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신청 취지

-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하고 10일간 검토하였으나 업체별로 그 분량이 500여 쪽에 달해 부속서류에 기재된 업체명 표기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심의 결과

-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업체명을 명기한 경우 제안 신청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이상 제출서류에 업체명이 명기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책은 불인정되었으나 소명이 일부 인정되어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62

법령 질의 회신 및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사실 관계

- A시가 행정재산인 농산물도매시장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 주무부처로부터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고,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고도
 - 도매시장관리사무소만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할 경우 도매시장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도매시장을 민간에 매각

신청 취지

-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심의 결과

- 주무부처 질의 회신 및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63

법령상 매수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매입

사실관계

- A구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B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 6필지를 매입하면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당초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사권이 설정된 C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낮은 D부지를 소유자의 매도희망 가격대로 추가 매입
 - 게다가 A구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차장 건립 여건에 더욱 적합한 인근 부지의 소유자들이 비슷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매매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음
 - 그 결과 당초 계획과 비슷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주차면수는 40면에서 28면으로 줄어들고, 사권이 설정된 부지로 인해 주차장 건립이 지연됨

신청취지

- 주차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부지 매입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매매협상으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전통시장 발전과 이용객의 편의, 인근 주민의 이익 등 공익에 기여함

심의결과

- 공유재산법령상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취득할 수 없는 부지를 매입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대체부지가 있었음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를 매입한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정하기 어려움

Part
3전통시장
주차장
사례



64 이용 가능한 콘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사실 관계

- A군에서 B개발의 C콘도 건축을 허가하면서
 - A군은 이미 D콘도 회원권 등 연간 240일의 숙박이 가능한 콘도회원권(8구좌)을 보유하고 있고, 구입 후 연평균 이용률이 27% 정도에 불과함에도
 - 이미 구입한 D콘도 회원권의 활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C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매(22구좌, 연간 642일 숙박 가능)
 - 그 결과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 상대방인 B개발에 사실상 자금지원의 특혜를 제공

신청 취지

-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회원권 구입비는 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예산 낭비가 아님

심의 결과

- 이용 가능한 콘도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회원권 구입 금액만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65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사실관계

- A군 계약담당자는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 평소 알고 지내던 양수기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의 명의로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한 후
 - 위 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6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자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신청취지

- A군은 도서로만 형성되어 있어 재해에 취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양수기 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고의성이나 금품수수 정황이 없으며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잘못되었음

심의결과

- 계약과정에 금품수수 정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나, 지인으로부터 계약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66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에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요구

사실 관계

- A부 과장 B는 A부의 직무상 감독 대상인 C협회에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이 직위에 특정인을 선임하도록 요구
- 또한 B는 A부 선배였던 D로부터 자신을 C협회의 사무국장직으로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협회를 담당하는 A부 팀장에게 채용을 부탁

신청 취지

- 상근부회장으로 특정인을 추천한 것은 B협회의 추천 요청에 따라 A부 내부에서 적임자를 선발 과정을 거쳐 추천한 것으로서 B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음
- B는 D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특정인 추천은 협회 임원 등 선임 관련 업무의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소개 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음

심의 결과

-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로 하여금 지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7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

사실관계

- A기술원 책임연구원 B 등 3명은 연구비 집행·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 실제 구매하지 않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한 후, 업체에 지급된 돈을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
 - 또한 연구재료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

신청취지

- 과제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정부과제의 사업비 불인정 반납 비용, 연구원 명절격려금 등 공통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선처 요망

심의결과

- 연구비를 횡령하고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Part
3연구비횡령·
부당인정 사례



68

승인 절차 없이 내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여

사 실 관 계

-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이 지명한 운용관리자 외에 권한 없는 자가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A청 전산 담당자는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 인증서를 감사담당관의 지명을 받지 않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등 보안 업무를 태만히 함

신 청 취 지

-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계약조건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음

심 의 결 과

- 계약조건에는 외부 인력이 상주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 관리자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69

지출 관련 서류 확인을 대만히 하여 횡령 사건 발생

사실 관계

- 「A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지급 시 계좌입금·전자자금이체를 하고, 집행 후 채권자의 영수증서를 구비하도록 규정
- B초등학교 행정실장 C는 소득세 납부 등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실 소속 D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계좌이체 하도록 결재한 지출결의서와 달리 현금 인출하는 것으로 작성한 출금전표에 출납원으로서 날인을 하였고 집행 후 영수증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대만히 하여 D의 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출납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D가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하여 담당자 의견을 존중하였고, D가 치밀한 의도를 갖고 본인을 속여 횡령하였으므로 사전에 횡령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음
- 또한 횡령 사실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 즉시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고 하였고, 횡령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려하여 변제하도록 하였음

심의 결과

- 현금 출금전표에 직접 출납원 날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납부영수증이 붙은 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A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Part
3정기평가보고서
「불인정」 사례



70

제안서 검토·평가를 생략한 채 사업자 선정 및 수익성 분석없이 운영기간 산정

사 실 관 계

- A군은 B업체와 '짚라인 조성사업 세부실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간 투자방식(BTO)으로 짚라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제3자 제안 공고 후 최초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 절차를 생략한 채 B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 또한 위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르면 BTO방식은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용·수익 기간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운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 A군은 B업체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기로 하였고 별도의 검토 없이 20년의 운영기간을 산정하였으며,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부여

신 청 취 지

-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오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 채납이행각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 보완하였음

심 의 결 과

- 소유권이전 의무면제 및 20년 운영기간 보장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평가, 제3자 제안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71 개발 미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사 실 관 계

- A시 팀장 B 등 2명은 이동형 계측기의 준공검사를 수행하면서
 - GPS 기능이 무선으로 실현되지 않는 등 2가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 납품업체로부터 케이스 금형 제작이 늦어져 준공검사 이후 케이스를 만들어 장착하여 납품하겠다는 설명을 들어 이동형 계측기가 준공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결재권자인 과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준공처리하였고 준공 처리 후 8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체에서 납품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신 청 취 지

- 처리단계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음

심 의 결 과

- 결재권자에게 이동형 계측기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결재를 받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72

공고된 심사기준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임의 변경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공고를 한 후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도록 규정
- A시 팀장 B 등 2명은 ‘노면 하부 동공탐사 용역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 용역계약 공고문에 따르면 기술지식 항목(배점 25점)은 3가지 세부항목(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10점, 탐사자료 분석계획 8점, 동공관리방안 수립 계획 7점)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는 탐사 실적 1개소는 5점, 2개소는 10점을 부여하고, 탐사자료 분석계획과 동공관리방안 수립 계획은 정성평가하는 것으로 규정
 - 그런데 B 등 2명은 제안서 평가 중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지식 항목을 발주기관이 제시한 동공 위치와 각 참여업체가 제시한 동공 위치의 정확성 정도를 비교하여 그 순위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를 받자
 -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공고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한 후 공고 기준과 달리 평가함으로써 낙찰자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

신청취지

- 타당성 심사, 건설기술 심의·일상감사,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계약, 준공 처리 등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음

심의결과

- 공고된 심사기준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재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였는 바, 법령상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73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실 관계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보존·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A도는 산하 시·군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 보존·생산관리지역 24개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B환경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음
 - 그런데 A도는 19개 구역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 5개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이에 대해 B환경청장에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신청 취지

- 산하 시·군 공무원들이 B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B환경청에서 이견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내오지 않아 협이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심의 결과

- 협의 주체인 신청인들이 B환경청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하 시·군 담당자가 B환경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B환경청으로부터 추가 협의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회신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Part
3

전거·행위·포진·사례



74 면허관청 협의 없이 준공 인가 조건을 변경

사실 관계

- A시는 B도가 준공 인가한 C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준공 인가 조건 변경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당초 7개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준공인가 조건을 면허관청인 B도와 협의없이 1개 도로만 설치하도록 변경
 - A시는 D업체가 위 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홍수량 산정 후 설계 반영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가하였고 위 업체가 공사 완료 후 우수관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사준공을 신청하자 우수관 20m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
 - A시는 D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C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했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기반시설 설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

신청 취지

- 전체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 조성계획에 맞게 다시 설치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1개 도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 실시계획변경인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않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지 않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미지정함

심의 결과

- 침수 예방을 위해 우선 1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지 검토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대만히 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에 배수시설의 설계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변경된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75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용역 의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지연

사실 관계

- 공무원 A는 공공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설계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 예산 소관부서에 설계예산의 배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예산 조정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기관장에게 외주 용역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 해당 공무원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체에 구두로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신청 취지

-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임

심의 결과

-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업체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실시 설계 등 외주 용역을 추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 후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역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바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76

계약서 작성 전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회계·계약 절차 위반

사실 관계

- 주 ○○대사관에서는 청사 및 관저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 청사 및 관저에 사용할 가구의 구매 추정가액이 각각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 관저 가구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신청 취지

- △△국의 열악한 특수지 환경에서 충분한 인력 없이 청사 및 관저 국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 및 절차를 따를 경우 외교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과오임

심의 결과

- 청사 및 관저 국유화 사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 업체에 계약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특혜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절차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77

확인 절차 누락으로 인해 ○○급여 부적정 지급

사실관계

- 공무원 A는 ○○급여 수권자의 사망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및 순위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 수권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 받지 않아 실제 수권자의 사망일이 2006. 1. ○.임에도 수권자의 아들이 신고한 날인 2014. 1. ○.을 수권자의 사망신고일로 보고, 그 시점에 수권자의 동생으로 순위변경 결정을 함
 - 이에 따라 2006. 1월부터 상당기간 ○○급여금을 부정 지급한 수권자의 아들에게 시효기간 만료로 ○○급여금 환수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

신청취지

- 고의로 ○○급여금 부정수급을 눈 감아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미결된 업무를 조속히 해결하고, 차순위 수권 유족에게 빨리 혜택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임

심의결과

- 수권자의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부정수급 결과를 야기한 것은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수권자의 사망기록이 포함된 기본증명서 제출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수권자의 사망일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고,
-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A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기본증명서 발급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Part
3정기평가보고서
작성
사례



78

공공시설 건축공사 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사실 관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 및 배출자 신고 ②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용 신고 ③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실적 및 재활용실적을 보고 ④배출자 및 처리시설 운영 등 처리상황을 기록 ⑤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A군에서는 ○○지역 공공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공사의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포함)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 또한 해당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일부를 재활용 순환골재로 사용하고 잔여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지 않고 야적하고 있음

신청 취지

- 섬 지역 특성상 콘크리트 폐기물발생 인접현장에 대하여는 국가자원재활용 정책 취지, 예산절감(약 6억 원)의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령을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

심의 결과

- 법령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79

○○복합센터 부지 토지매매 변경계약 부적정

사실관계

- ○○청에서는 패션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00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용지에 '00글로벌패션 복합센터'를 2년 6월 이내 착공하고 5년 이내 미준공시 환매특약 조건으로 A사와 2013.10. 토지매매계약 체결
 - ○○청은 A사가 5년 이내 건물 준공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토지매매변경계약서(안)을 마련하여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10. A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홀히 하였음
 1.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상정 안건 주요사항 누락
 2. 「산집법」을 위반한 판매시설 처분(분양) 허용 약정 신설
 3. 약정기간 내 착공 미이행 및 준공 불가 토지 환매 등 미검토

신청취지

- 토지매매계약 후 5년이 도래함에 따라 조성사업의 백지화 보다는 강력한 위약벌을 동원한 변경계약을 통하여 향후 본사 및 계열사의 이전 등 본 사업을 정상화시키고자 적극 노력하였음

심의결과

- 약정기간 내 착공지연 등으로 사실상 준공이 불가능함에도 사전에 약정기간 도래에 따른 환매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며
-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변경 계약 또는 환매권 행사 결정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상정시 환매 실익, 변경계약 실익, 세부 변경계약 내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한 약정 신설 및 주요사항을 누락한 것은 적극행정으로 보기 어려움

Part
3

전기·중과실·민원·사례



적극행정 면책 신청방법 안내

Q. 적극행정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안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19년 하반기부터는 감사기간 중에 면책 여부를 심의하는 현장면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인천광역시 훈령)

Q. 면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는 면책 요건이 많고 엄격하여 면책 인용이 쉽지 않았지만, '19. 8월부터 면책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예정입니다.

< 기 존 >

- ▷ 공익 목적
- ▷ 적극적인 업무 처리
- ▷ 사적인 이해관계 없음
- ▷ 충분한 검토, ▷ 절차 완비, ▷ 결재 등



< 개 선 >

- ▷ 공익 목적
- ▷ 적극적인 업무 처리
- ▷ 사적인 이해관계 없음
-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Q.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별지의 양식을 작성하여 감사결과 처분 전까지 감사자 또는 현장에 있는 감사반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순한 사안은 감사 현장에서 즉시 심의하여 판단할 예정이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감사기간 종료 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 | |
|--|---------|
| 감사지적 사항 | |
| 구체적 판단 기준 | 신 청 내 용 |
|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 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감사기구의 장 귀하

PART 4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CONTENTS

I. 정책분야

| | |
|--|-----|
| 1. ○○○○○ 운영재단 출연 여부 | 343 |
| 2. 주상복합 건축물과 방송시설의 획지분할 | 349 |
| 3. 여건 변화(농경지→산업단지)에 맞는 시설물 정비 방안 | 354 |
| 4.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56 |
| 5. ○○○○ 생태공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363 |
| 6.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 산정방식 | 368 |
| 7. 모바일 광고사업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 371 |
| 8. 도서구입 시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 | 375 |
| 9.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사업 | 378 |
| 10.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 382 |
| 11. ○○○센터 운영기관 변경 | 385 |
| 12.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행정대집행 실시 | 388 |
| 13. 물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요청 | 391 |
| 14. 코로나19 방역목적을 위한 14세미만 정보동의 가능여부 | 394 |
| 15. 협의취득 시 매도기관 매수기관 상호 감정평가 결과 반영 | 397 |
| 1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 401 |
| 17. 재개발사업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 403 |
| 18.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작성의 건 | 405 |
| 19. ○○○(주) 토지매매계약 변경 계약 체결 | 407 |
| 20.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에서 교육재난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409 |
| 21. ○○지구 ○○시설 사업비 정산금 관련 | 413 |
| 22. “우회고가 정비공사” 관련 허부도로 포장공사 우선(분할) 발주 가능 여부 | 416 |
| 23. 공유재산(임대시설)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환급 가능 여부 | 419 |
| 24. ○○협회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 | 422 |



II. 주민불편 및 기업애로사항

| | |
|---|-----|
| 25. 면세점 이용 관광객 보행통로 불편 개선 | 424 |
| 26. (주)○○○ 앞 도로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완화 | 426 |
| 27. 소규모 공장 앞 통신주 이설로 기업불편 해소 | 428 |
| 28. 교통시설물(가드레일, 횡단보도) 정비로 보행안전 확보 | 429 |
| 29.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430 |
| 30. 인도변 시민 통행불편 통신주 이전 | 432 |
| 31. 진출입로 앞 경관녹지 해제 | 433 |
| 32. ○○○○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관련 | 438 |
| 33. 관급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441 |
| 34. 방치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 | 443 |
| 35.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주차장 폐지 관련 | 444 |
| 3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감면 | 446 |
| 37. 수출이행여부신고 한시적 과태료 부과 면제 가능 여부 | 448 |
| 38. 재개발 사업에서「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 451 |
| 39. 건축물 신축 관련 도시공원 내 도로 진출입로 사용 | 454 |
| 40.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관련 | 459 |

1

○○○○○ 운영재단 출연 여부

① 사업 개요

- 공사 기간 : 20** ~ 20**(1단계)
 - 000 1, 2공구 : 착공('0*. *. **), 준공('1*. *. **)
 - 000 3공구 : 착공('1*. *. **), 준공('1*. *. **)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연면적 ***,***.***㎡
- 사업비 : 00억원[국비 23.1%, 시비 23.1%, 민자(SPC) 53.8%]
- 사업구조
 - 000 : SPC(○○○○○ 주식회사)에 부지 매각
 - SPC : 수익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 조성 후 ○○청으로 이관

②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 시설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관리 위탁할 것인지, 일반재산으로 보아 재단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인천○○청은 지방자치법상 출장소이자 ○○시 직영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 특별회계가 적용되는데 재단으로 직접 출연이 가능한지
- 인천○○청에서 직접 재단에 수익계약 방식으로 ○○○○○ 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시설물을 출연할 경우 취득세 등 각종 세금부과 대상여부

③ 검토결과

■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 또는 일반재산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관리위탁 및 출연 방안 비교

| 구 분 | (제1안) 관리위탁 방안 | (제2안) 재산 출연 방안 |
|------|--|---|
| 정 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행정재산)으로 하여 00청과 재단이 관리위탁 계약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일반재산)으로 하여 재단에 현물 및 현금 출연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2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8조 ■ 『○○○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 구 분 | (제1안) 관리위탁 방안 | (제2안) 재산 출연 방안 |
|---------------|--|---|
| 시 설 물 임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 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정 및 업체선정 시 법령에 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 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정 및 업체선정 시 임대조건 완화가능 |
| 위탁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모집 원칙이나, 수의계약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으로 출연시 불필요 |
| 갱신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단위 위탁계약(연장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 |
| 세금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미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과 |
| 관리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청에서 관리감독 및 사전 통제 의회 및 시(감사)를 통하여 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청에서 관리감독 가능 의회 및 시(감사)를 통하여 감독 |

- 재산 출연 방안 : 재산을 일반재산으로써 재단으로 출연 가능, 단 세금부과(취득세, 보유세)가 예상되어 재정부담 발생 우려
- 관리위탁 방안 : 행정재산으로써 〇〇청에서 관리감독 및 통제 가능

감사의견 (권고)

- 〇〇〇〇〇는 산업부의 국가프로젝트사업으로 000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출연을 목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재단으로 출연이 가능하나, 재산출연 시 세금 부과로 재정부담 우려가 예상 되어 출연의 실익이 없으므로 행정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위탁 방안으로 추진함이 합리적임

00청 특별회계에서 재단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입법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의 자금과 부지가 시 일반회계로 일방 전출 됨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재정부실을 우려하여 시 일반회계 또는 시의 다른 계정으로 전출을 막고자 만든 제한 규정임

- 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시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교육사업이라는 개발사업 또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본연의 사업에 투입 되는 것으로 ○○청 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재산 관리(처분)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함
 - ※ 000 의견 : 재산이관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동 세출예산에 따른 지출행위는 해당 특별회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행행위에 해당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시·도의 다른 회계 등으로의 전출에 해당되지 않음
 - ※ 000 의견 : 舊 「지방공기업」 제77조의3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단법인 ○○○○○을 설립하면서 재단법인으로 현물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인천○○청은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의해 사업소에 해당되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로는 지방직영기업에 해당됨
-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처분·관리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9조에 따라 관리자의 업무로 인천○○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동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청장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그와 관련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함

감사의견 (자문)

- ○○청 특별회계에서 재단으로 출연이 가능하지만 세금 부과로 인하여 출연의 실익이 없기에 관리위탁이 타당하며, 향후 2단계 사업 완료 시에도 이에 대한 동일한 검토가 필요함



■ 재단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와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재단에 수의계약이 가능함

감사의견 (자문)

- 신속하고 능동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000 유치와 민간부문의 선진경영·관리 기법 등의 도입을 목적으로 20**년 운영재단을 설립하였으므로
-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운영재단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하게 하고,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 ※ 우리시의 출자·출연 기관인 인천□□□□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000센터를 참조하여 “관리위탁 체결 및 관리위탁 임대 실태”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재산 출연할 경우 각종 세금부과 대상여부 검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 재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함

-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므로 재산 출연 시 대가없이 불필요한 조세만 추가 부담하게 됨
 - 출연 시 조세 부담액(예정액)
 - * 취득세(1회성)+보유세(매년)
 - 보유세 부담액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국제도시 개발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승시 부담액 증가 예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50% 감면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직접사용” 여부 해석 내용에 따라 감면제외 가능성이 있어 감면이 안될 경우 세금은 배가 됨.
 - 위 감면금액 증가분만큼 2018년도부터 지방교부세 패널티 예상
→ 기준재정수입액 중 세입확충분야 ‘지방세 감면액 축소’ 분야 패널티
[전전년도(2016년) 감면액 - 전전전년도(2015년도) 감면액] × 100%

감사의견 (자문)

- 현행 세무관련 법령상 운영재단으로 재산을 출연 할 경우 세금부과로 재정악화 우려가 예상됨으로 ○○청에서 ○○○○○○를 행정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재단으로 하여금 관리위탁토록 함이 타당함

4 건설팅 의견

- 舊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후 「○○○○○○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 운영재단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 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지정·고시 되었음



- 따라서 ○○○○○○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운영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세무관련 법령상 운영재단으로 재산을 출연할 경우 세금부과로 재정악화 우려가 예상되어 출연의 실익이 없기에 ○○청에서 운영재단으로 하여금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 하고 향후 세법 및 감면조례 제·개정 등으로 세금 감면이 될 경우에 출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청에서는 20**년도부터 ○○○ 시설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운영재단과 직접 관리위탁을 체결하여 ○○○○○○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외국명문대학 유치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청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행정재산의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다음 운영재단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시기 바람
- 아울러, 운영재단에서는 000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고 ○○○ ○○○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고 임대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2 주상복합 건축물과 방송시설의 획지분할

1 사업 개요

■ 복합개발 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

| 구 분 | | 주상복합 | | | 방송통신 시 설 | 합 계 |
|------------|-----|------------|-----------|------------|-------------|------------|
| | | 아파트 | 판매시설 | 소 계 | | |
| 대지면적(㎡) | | 16,***.** | 2,***.** | 18,***.** | 3,***.** | 22,***.** |
| 연면적 (㎡) | 합 계 | 113,***.** | 14,***.** | 128,***.** | 15,***.** | 143,***.** |
| | 지 상 | 79,***.** | 3,***.** | 82,***.** | 10,***.** | 92,***.** |
| | 지 하 | 34,***.** | 11,***.** | 45,***.** | 5,***.** | 50,***.** |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구 00동 2**-*번지는 사유재산인 주상복합건축물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인 방송국이 동일 필지에 건축 중으로 공공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분할이 필요함
- 방송시설용지 분할 시 주상복합용지가 ○○시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지 않아 현 상태에서는 분할이 불가하며, 하나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 전 지역에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정함
- 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부지로서 토지의 분할 여부가 해당 획지의 밀도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공재산은 사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시계획과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분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 규정상 분할이 불가함
- 이와 같이 현행 규정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행정적인 어려움 및 준공 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대상 토지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등)

| 당 초 (개발 전) | | | | 변 경 (개발 후) | | | |
|------------|---------------------|--------|---------|------------|---------------------|--------|---------|
| 지 번 | 면적(m ²) | 도시계획시설 | 소유자 | 획지명 | 면적(m ²) | 용도 | 소유자(예정) |
| 00동 2**-* | 18,724.8 | 자동차터미널 | 00산업(주) | C5-A | 18,724.8 | 주상복합 | 00산업(주) |
| 00동 2**-* | 3,656.2 | 경관녹지 | 00시 | C5-B | 3,656.2 | 방송통신시설 | 00시 |

주 1)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획지 변경 :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20**-*.**))

주 2) C5-A : 15,068.6m² (2**-*번지 중 일부) + 3,656.2 (2**-*번지 전부)

주 3) C5-B : 3,656.2m² (2**-*번지 중 일부)

주 4) 토지교환 : 2**-*번지 일부(3,656.2m²)와 2**-*번지 전부(3,656.2m²)를 소유권 교환 예정

■ 용적률 및 주택 연면적 비율

() : 방송통신시설 분리 기준

| 구 분 | 주상복합 | | | 방송통신 시 설 | 합 계 |
|------------------------|--------------------|------------------|-------------------|-------------------|------------|
| | 아파트 | 판매시설 | 소 계 | | |
| 대지면적(m ²) | 16,***.** | 2,***.** | 18,***.** | 3,***.** | 22,***.** |
| 연 면 적(m ²) | 113,***.** | 14,***.** | 128,***.** | 15,***.** | 143,***.** |
| 용 적 률(%) | 352.99 (421.91) | 15.73 (18.79) | 368.72 (440.7) | 46.59 (285.25) | 415.31 |
| 주택연면적 비율(%) | 78.83 (88.45) | 10.29 (11.55) | 89.12 (100) | 10.88 | 100 |

③ 검토결과

■ 시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교환 및 기부채납)할 수 없음

● 교환(취득) 토지의 사권(私權) 설정

- 교환(취득)할 방송통신시설용지(C5-B)는 주상복합용지(C5-A)와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단지로 공동개발토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사권(주상복합@ 입주자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1) 형성이 설정됨 주2)
* 공동개발 근거 : 건설협약서('1*.*.**) 제6조, 지구단위계획('1*.*.**))

● 기부채납 방송시설의 정화조가 교환 취득할 토지 외부에 위치

- 사업자(00산업(주))가 방송시설용지에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할 방송 시설의 정화조가 주상복합용지(106동) 지하에 위치

감사의견 (권고)

- 교환(취득) 토지 :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에 의거 지적 분할 및 주택단지 분할하여 공유재산을 교환(취득)하고 정상적 사용권리 확보
- 기부채납 방송시설 정화조 : 교환(취득)할 방송통신시설용지 안으로 이설

■ 교환할 토지 분할시 도시계획조례 저촉여부 검토

- 주택단지 분할에 따른 주상복합용지 주거연면적 비율 초과
 - 방송통신시설용지를 주택단지에서 제척하고 주상복합용지(C5-A)만을 주택 단지의 범위로 한 주거 연면적 비율은 약 88%로서, 「00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에서 정한 기준(80%미만)을 초과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기준(90%미만)에는 적합)
 - ※ 주상복합용지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 중이고, 주택단지 분할로 인하여 명목상 주거연면적 비율은 증가하지만 실질적인 건축물 규모 및 개발 밀도의 증가 등은 수반하지 않음

감사의견 (권고)

- 주택단지 분할 : 방송통신시설용지를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로 결정하고 주택단지 범위에서 제척하여 주택단지 분할(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되, 공동개발로 인한 사업자 개발이익 적정여부 검토 필요
- ※ 주상복합용지 특례 적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주상복합용지의 주거연면적 비율 부적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관리

■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자 개발이익 검토

- 시유지인 방송통신시설용지(C5-B)를 주택단지에 포함하여 개발함으로써 주상복합용지에 건립 가능한 공동주택의 규모가 증가하고,
- 이로 인한 사업자의 개발이익(공동주택 분양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협약서('13.*.***) 체결시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개발이익 추정 약 00억원)

**감사의견 (조언)**

- 사업자 소유토지 이외에 시유지를 주택단지에 포함하여 개발함으로써, 일반적인 주택 사업과 차이가 있으나, 사업자가 주민제안시 공동개발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에 제공하는 공공기여 계획을 제출하였고,
- 실제 주택건설사업의 용적율(약 440%)이 공공시설 기여규모 산출시 적용된 용적률 (700%) 보다 작고, 공공시설(방송시설)의 건설비는 약 00억원으로 건설협약서상의 공공 시설 무상제공 규모인 0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이익을 산정·비교하고 환수가 필요한 공동개발(시유지의 주택단지 포함)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 개발이익 환수 검토 : 사업자의 공동개발 개발이익 환수로 특혜의혹 해소(사업자 협의· 설득 병행)
 ⇒ 개발이익의 사용 : 개발이익을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주상복합@와 방송시설 경계부에 소음차단 수림대 조성, 외부인 출입 통제시설 설치 등)과 미흡한 방송시설 보완 ⇒ 입주자 민원 예방 및 방송사의 입주 환경 개선 도모

향후 방송시설 관리·처분 검토

● 일반재산으로 관리·처분할 경우

- ① 매각 : 관리비 부담이 없고 재정확충 차원에서 검토 필요, 공공목적으로 매각시에는 재산의 용도 및 지정용도에 의한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각 가능
 - 감정평가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
 - 한국00공사, 한국0000공사 등에게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② 대부 :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효율적인 대부방법 검토 필요
 -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와 건축물은 대부기간 5년(갱신은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가능
 -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전 갱신 가능(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 이내)
- ※ 일반재산의 위탁은 한국00관리공사, 00공사에 한하여 가능함

●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

①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 관리에 적합한 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갱신은 1회한 5년 이내)
- ※ 수탁자는 행정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2번이상 위탁기간 갱신 가능(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 이내)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등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위탁의 관리·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44조)

② 사용·수익허가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기간 5년(갱신은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가능
-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수의로 허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전 갱신 가능(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 이내)

감사의견 (조언)

- 최적의 관리방법 강구 : 방송시설의 유지관리비, 건축물 감가상각, 입주 방송사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매각 또는 대부·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 등 최적방안 마련
- 방송사 입주 인센티브 모색 : 방송시설에 입주하는 방송사에 대한 대부료 감면 등 입주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송사 유치 도모

4 권설텍의견

- 00동 일원의 개발사업은 유희토지 개발과 방송국 유치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재 상태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방송국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여
- 방송시설 미입주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및 입주자 등의 민원, 지역경제 침체, 방송시설 유치 실패 여론 형성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 방송시설의 조기입주 등 정상운영을 위하여 상기 감사의견에 따라 관련기관(부서)별로 주택단지 분할 및 개발이익 환수 등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관(부서)별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개발이익 환수 등(시 0000과)
 - 방송시설 기부채납, 방송국 유치, 공유재산관리·처분 등(시 000실, 시 0000담당관)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주택단지 분할), 지적분할, 정화조 이설 등(□□구)



3

여건 변화(농경지→산업단지)에 맞는 시설물 정비방안

1 사업 개요

- 공 사 명 : ○○의 ○ □□사업(○○천)
- 위 치 : 인천광역시 ○○구 소재 일원
- 사 업 량 : 하도정비 L=1.32km, 교량 2개소, 조정 및 배수문 1식
- 사 업 비 : 00백만원
- 사업기간 : 20**.*.*. ~ 20**.*.**.
- 현공정률 : 6%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의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설계에 반영된 조정시설물의 안정성이 우려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 공정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천 하도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 토사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배수로를 메울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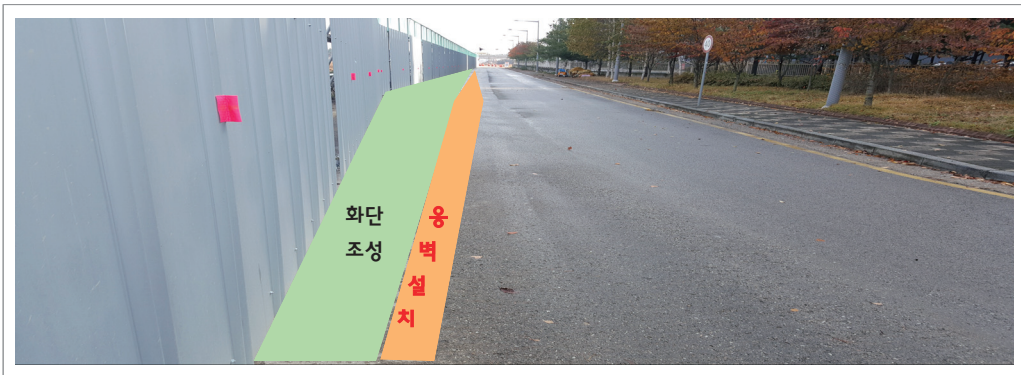
4 컨설팅의견

- ○○천 기점 옹벽(L=196m, H=3.1~3.7m)에 조정시설물로 화강판석 붙임이 반영되어 있으나, ○○천 홍수위가 옹벽 높이와 거의 동일하여 호우시 화강판석의 탈색과 탈락이 우려되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공중을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동 옹벽 우측 도로에 폭 1m의 화단 조성과 화단 보호를 위한 L형 옹벽(H=1.3m, L=187m)이 반영되어 있으나, 도로의 폭이 8m로 좁아 L형 옹벽 설치시 통행불편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L형 옹벽을 경계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위 개발제한구역내 배수로는 과거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시설이나, 현재 지형의 변화(농경지→산업단지)로 배수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오히려 주변 지형과의 높이차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농로의 정비차원에서 메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천 기점부 전경>



<옹벽 설치 구간 전경>



<○○천 중점부 및 수로(구거) 전경>





4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업 개요

- ○○○공원사업소의 주요시설로는 92과 332종 6550본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식물원과 1만 300여 주의 다양한 장미가 심어져 있는 장미원, 58종 231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동물원, 23만㎡의 00수목원, 환경00관, 자전거광장, 00산 등산로, 사계절 썰매장 등과 00광장과 전망대, 궁도장, 조각원, 야외음악당, 산림욕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조잔디 운동장과 풋살장을 비롯한 운동시설도 마련되어 있음
-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20**년도 0000국 업무보고에 따라 시민이 행복한 공원시설 확충 및 운영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원이용객의 불거리 충족을 위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및 컨설팅 의견

■ 권역 및 스토리텔링 길, 통행로 개선

- 공원 특성에 맞는 권역별 존(Zone) 설정
 -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주요 이용하는 곳은 남측 어린이 동물원과, 산림욕장, 야생화단지, 호수, 장미원, 시민의 숲 지역으로 공원시설의 특성 및 스토리텔링, 안내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아니하여 ○○○공원 전체면적(2,665천㎡) 중 일부만 관람하는 실정이므로 공원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실정
 - 따라서 공원 방문객의 관람을 위한 공원정문(서측)의 중앙도로와 중앙부 호수를 기준으로 공원의 특성에 맞는 권역별 존(zone)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공원조성과 권역 상세한 안내체계를 마련하여 공원 방문객이 쉽게 구석구석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권역 (zone) 설정 사례 >

| 권역(존) | 주요시설 | 공간설명 |
|----------------------|---------------------------------|-------------------------------------|
| Healing zone (치유) | 습지원, 반디논, 역새원, 치유의 숲, 등산로 | 숲과 습지를 산책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 |
| Feeling zone (감성) | 목재문화체험관, 수목원 | 자연교육을 통해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는 공간 |
| Smiling zone (웃음) | 잔디광장, 야외무대, 호수, 장미원, 야외음악당, 꽃광장 | 가족과 연인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이야기하는 웃음이 넘치는 공간 |

● 공원 특색에 맞는 길(road) 명칭부여

- ○○○공원 내 주 통행로 가로수를 기준으로 자체 설정한 벚나무길 및 느티나무길이 있으나 방문자의 관람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발생시 방문자가 위치를 쉽게 인지하고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위치표시가 없으므로 공원 방문객들이 쉽게 관람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주요 통행로에 공원 특색에 맞는 길(road) 명칭을 부여하고 위치 안내표시를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의 관람 동선을 확대해 위치안내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길(road) 설정 사례(도면 별도 붙임) >

| 연번 | 길 명칭 | 구 간 | 연장 | 특이사항 |
|----|-------|---------------|--------|--------------------------------------|
| 1 | 벚나무길 | 남문~호수 | 976m | 벚꽃, 단풍 등이 좋은 ○○○공원의 대표적인 길 |
| 2 | 00천길 | 청소년수련관~자전거광장 | 770m | 00천변 길로 습지관람 및 인천종주 코스 길 |
| 3 | 수목원길 | 수목원입구~온실 | 1,370m | 수목원을 둘러보는 주요 코스 |
| 4 | 느티나무길 | 호수3거리 ~ 호수3거리 | 1,215m | 호수주변을 순환하는 느티나무길 일주 |
| 5 | 야생화길 | 야외음악당~야생초화단지 | 1,20m | 계절야생초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길 |
| 6 | 둘레길 | 동물원~00산~00골 | 1,995m | 남문을 통해 동물원과 00산 정산을 거쳐 00골로 이어지는 둘레길 |
| 7 | 치유의 길 | 메타길~00산~00광장 | 1,185m | 메타세콰이어길과 편백나무 숲으로 숲 치유의 코스 |

< 등산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사례>



Par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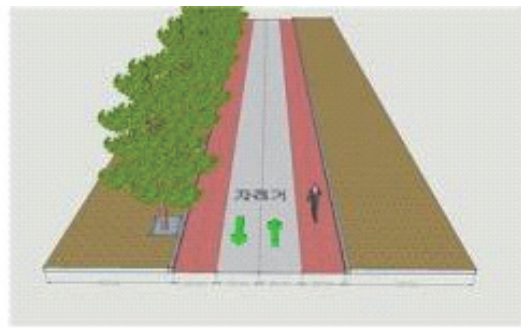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 공원내 주요 통행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

- 남문 출입구 벚나무 길과 중앙 호수 주변 느티나무길 도로에 자전거, 마라톤,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도로변 인도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확대하여 확보하고 도로는 자전거, 마라톤 동선을 구분하는 통행 노선(차로)을 표시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필요

<보행도로 설정사례>



● 공원 시설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및 자연경관 자원화

- 0000사업소는 00공원의 오랜 역사와 문화, 생태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용객을 감동시킬 00공원 만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00공원의 이야기, 00공원의 4계절 풍광, 공원 내 특색 있는 나무 9그루 등 스토리텔링하여 00공원의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이용객이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이해를 돕고 있음
- 따라서 ○○○공원이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벚꽃길, 느티나무길, 메타세콰이어길, 습지원, 수목원과 어린이 동물원 주변 부영골, 습지원 젖우물터, 자연생태원 갈참나무와 소나무, 00산 석재, 편백나무 숲의 대형 참나무 등 공원내 특색 있는 나무 및 조형물 등을 발굴하고 찾아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하고 목재 체험관의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설관을 설치함으로써 공원 이용객들의 이해를 돕고 자연경관 자원으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스토리텔링 대상 사례>



버드나무

갈참나무와 소나무

00산 석재

<□□ 하늘제 사례>



000 나무

친구나무

■ 공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물 개선사항

- 편백나무 군락지를 자연 치유의 숲 공간으로 운영
 - ○○○공원 메타쉐쿼 길과 삼림욕장 및 숲속의 쉼터 조성된 지역과 00산 중턱에 공원 이용객들이 무분별하게 평지를 만들어 자연훼손이 발생하고 있고 자리다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편백나무 군락지 2.5ha를 시민들이 힐링 및 치유의 숲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나무 숲 및 삼림욕장, 숲속의 쉼터와 함께 자연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천의 대표적인 “자연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편백나무 숲 현황>



<치유의 숲 운영사례>



● 구 테니스장 관리소를 어린이 숲 체험학교 등으로 활용

- 최근 새로운 교육 형태로 어린이 숲 체험학교 및 어린이 집이 증가하고, 부모들이 어린이 숲 체험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공원 내에 인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숲 체험원을 운영¹⁾하고 있으며, 숲 체험원 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린이 숲 체험자의 편의제공과 다양한 숲 체험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공원 시설율(22.11%) 한계로 새로운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유아 숲 체험원 인근 삼림욕장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구) 테니스장 관리실²⁾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숲 체험학교 및 치유의 숲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여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3대가 숲 문화체험 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현황 : 인증번호 : 북부00청 제20***호 00수목원 유아숲체험원(2016.*.**), 면적 : 24,167㎡

운영실적 : 2016년 총 572회 11,177명 참여

주요시설 : 대피소, 하늘데크, 간이화장실, 연못, 밭줄놀이시설 등

2) 현황 : 위치 - ○○구 ○○동 ***(공) 외1필, 규모 - 지상1층 면적201.57㎡ 사용형태 - 창고 및 기간제 근로자 탈의실

〈체험원 및 테니스장 관리실〉



숲 체험원



구 테니스장 관리실

●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공간 조성

- 인천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봄·가을 현장학습 체험을 위해 ○○○공원을 방문하여 호수 및 야생화단지 등을 관람하고 특별한 활동 없이 현장학습 체험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공간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공원 북측 외곽 순환도로 인근에 메타세콰이어 숲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썰매장이 시설노후화 및 기온 상승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에코어드벤처 시설 등 청소년 체험 공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메타세콰이어 숲 에코어드벤처 사례〉





● 환경00관 기획전시 등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 활성화

- 자연환경과 인간문화를 이어주는 인천의 미래환경을 알리기 위해 환경00관³⁾을 운영하고 있으며, 20**.*. 조성 완료 후 현재까지 시설물 리모델링 및 전시물 개선된 사항이 없고 환경00관 관람 현황에 보면 초·중교생들이 부모와 함께 관람하고 있으며, 일반 관람인원도 약 30천명씩 감소⁴⁾하고 있고 일부전시물은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인천00공단 및 환경단체, 00 나비공원 등 연계하여 전시물을 상호 교체 전시와 ○○○공원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특별 기획전시 등 기획전시를 활성화하고 어린이 숲 체험장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하여 방문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위 치 : 00구 000로 ***(00동), 조성기간 : 20**, 6. ~ 20**, 4. 면적 : 1,618.18㎡, 주요시설 : 3개 테마전시실, 환경실험실, 녹색자료실, 야외학습장 등

4) 관람인원 : 20**년 297,014명, 20**년 248,179명, 20**년 240,116명, 20**년 210,557명

5

○○○○ 생태공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업 개요

- 위 치 : ○○구 ○○동 소재 일원
- 면 적 : 1,561천㎡
- 둘 레 길 : 3.4km, 갈대길 : 1.7km
- 염 전 길 : 1.4km, 습지길 : 1.24km
- 사 업 비 : 00백만원
- 주요시설 : 습지, 생태관찰대, 생태전시관, 조류관찰대, 염전저수지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및 컨설팅 의견

-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생태공원이 훼손되었어도 방치하고 있으며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원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옛 00터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안내판 및 휨스 불량으로 00터 안으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00터의 소중한 염전 부산 물품이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생태공원 내 둘레길 중 동문 방면 둘레길은 폭이 좁아서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간에 충돌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자전거길과 보행자길을 분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 관리가 소홀함
- 00택지와 공원입구(0문) 진입로인 지하도는 도로 포장 등 정비가 불량하여 공원 진입 시에 흙먼지 등으로 인하여 불편이 초래되며 특히 얼음 빙판시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야간 및 새벽에는 지하도 밑 진입로가 어둡고 우천 시에는 진입로에 물이 흘러 공원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수문 입구는 노후화 되어있고 정비가 되지 않아 미관상 공원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진입로 폭이 좁아 보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수문 입구 진입로 폭을 확대 및 꽃길 등을 조성하고 생태공원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정비 관리가 소홀함
- 생태공원 정문 입구의 인도변은 인도폭이 좁고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나무 등 수풀이 정비되지 않아서 생태공원을 찾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공원 내의 해양 쓰레기장은 둘레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 악취 발생 및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함



■ 공원 내 그늘쉼터(원두막) 설치

- ○○○생태공원은 여름 하절기 및 햇빛이 있을 시에는 나무 그늘 및 쉼터가 부족하여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그늘 쉼터(벚집 이용 등)가 조속히 설치 되어야 함
- 특히 둘레길 북문 및 동문에는 쉼터가 전혀 없어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둘레길 등에 벚집이나 나무 등을 이용하여 그늘쉼터(원두막)를 설치하도록 제안



■ 연꽃공원 조성

- ○○○생태공원에는 염수습지, 기수습지, 담수습지 구역이 있습니다. 염수습지 지역은 염분이 있어 연꽃 등의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되지만 기수습지 지역 및 담수습지 지역은 염분량이 소량이어서 생물을 식생 할 환경이 됨
- 따라서 생태공원을 활성화하고 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태공원 내의 습지 지역에 연꽃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



화장실 및 수유실 설치

- 생태공원 내 화장실이 관리사무실 포함하여 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넓은 공원에 비례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간이화장실은 여름에 악취가 발생되기에 화장실 시설을 설치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내 유아를 위한 수유실이 없어 불편이 있으니 공원내 적정 장소에 수유실을 설치 하도록 제안



(현재) 간이화장실 설치지역



(개선) 수유실 설치(00공원 동물원 내 수유실)

해수 족욕탕 설치

- 생태공원 내 갯벌체험장을 찾아오는 이용객이 하절기 때에는 많이 있지만 그 외 공원내에서 즐길 놀이가 부족하므로 해수 족욕탕을 설치하여 즐거움과 건강을 줄 수 있도록 제안



(현재) 빈 공간에 활용 시설물 없음



(개선) 해수 족욕탕



■ 둘레길에 바람개비 동산 조성

- 생태공원 둘레길은 대부분 습지지역으로 볼거리가 부족하므로 둘레길에는 바람개비 길을 조성하고 습지지역에는 바람개비 동산을 만들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제안



(개선 1) 바람개비 둘레길 설치

(개선 2) 바람개비 동산 설치

■ □□축제와 연계 축제 실시

- 인천□□□□축제는 수도권 천해의 관광명소인 □□□□에서 관광객과 함께하는 인천의 대표축제로서 □□□□는 연간 5백만명이 찾아오는 인천의 명소이기에 □□□□ 축제기간 동안에 연계하여 습지생태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축제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습지생태공원에 찾아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제안



(현행) 00축제 행사 (생태공원은 제외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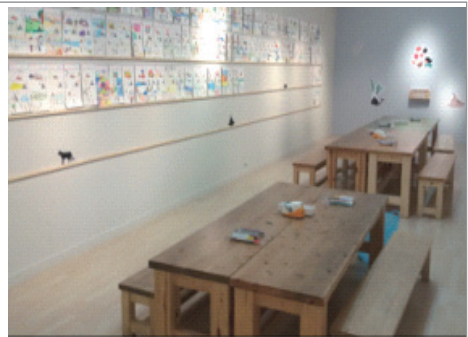
(개선) 생태공원에서 00축제와 연계행사 실시

■ 전시관내 생태 교육장 설치

- 현재 □□□□생태공원에서는 습지생물과 갯벌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운영하여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전시관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로는 생태교육에 미흡하므로 전시관 2층 카페 옆 공간을 이용하여 생태 교육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폭넓은 생태교육과 습지체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빈 공간 시설물 없음



(개선)생태 교육장 조성



6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지가 산정방식

1 사업 개요

● 개발사업 현황

- 사업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
- 토지위치 : 인천광역시 00구 ◇◇◇ 10-** (답 → 대)
- 토지면적 : 1,681㎡ (※ 20**.*.* ◇◇◇ 10-** → ◇◇◇ 10-** 토지분할)
- 사업기간 : 20**.*.**(허가), 20**.*.***. 착공, 20**.*.***. 준공
- 개발목적 :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일반음식점) 신축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지가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참조
-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부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및 부과 관청 사이 의견 대립
 ☞ 대법원 판결 20**두***, 20**두***** 참조
- 개시시점지가를 감정평가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문변호사 ①,② 간 의견 상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7항제2호 참조

3 컨설팅 의견

■ 모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에 있어 개시시점 지가 및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대법원 판례 선고 20**두 8**(20**.*.**), 20**두 22*** (20**.*.**.) 판결내용에 따르면 토지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수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 위 대법원 선고 판시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10-**번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위해 ◇◇◇ 10-**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토지의 특성 중 면적감소 및 형상이 변경되나,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용도, 지목, 고저, 방위, 접면, 기반시설 등)이 분할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음으로 분할 이전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종전 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고 개발사업 시행 및 완료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개시시점지가를 감정평가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 서울행정법원 20**구합 ** (20**.*.**.) 판결내용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 20**.*.**.) 내용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시시점지와 종료시점지가를 상이하게 적용함으로써 개발이익의 부당히 축소 또는 확대될 우려가 크므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개시시점과 종료시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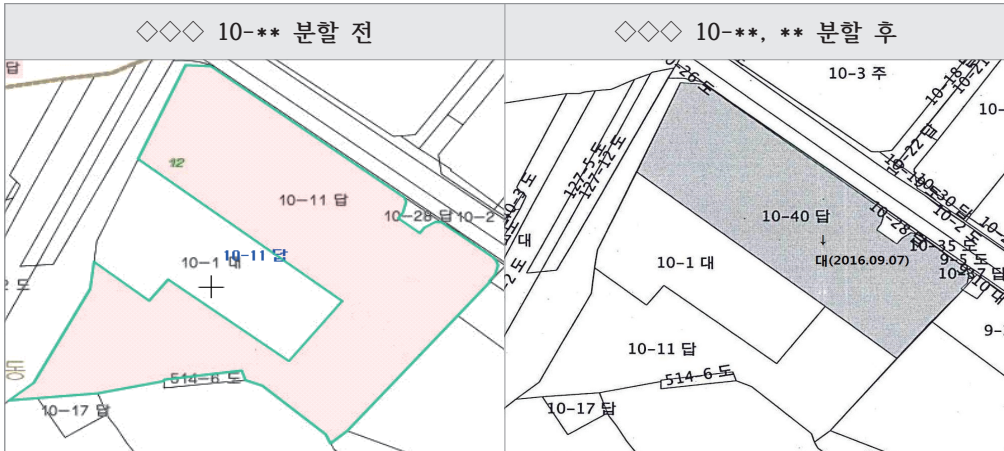
■ 토지이동 및 지목변경 내역

- 토지분할(20**.*.*)

| 토지소재지 | | 토지 이동 전 | | | 토지 이동 후 | | | 토지분할 신청사유 |
|-------|-----|---------|----|---------------------|---------|----|---------------------|--------------|
| 시 군 구 | 동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 ㅇㅇ구 | ◇◇◇ | 10-** | 답 | 2,844 | 10-** | 답 | 1,163 | 건물 신축 |
| - | - | - | - | - | 10-** | 답 | 1,681 | |



● 토지분할 전, 후 지적도



● 토지특성 상세항목

| 구분 | 토지 지번 | 개별 공시지가 | 용도 지역 | 토지 용도 | 고저 | 형상 | 방위 | 접면 | 거리 | 철도 | 폐기물 |
|-------------|------------------------|------------|-------------|----------|----|-----|-----|----------|-----|------|-----|
| 분 할 前 | ◇◇◇ 10-** (1*1.17준) | 000원 | 제1종 주거지역 | 주거 기타 | 평지 | 부정형 | 북동향 | 광대 세각 | 50m | 500m | 그이상 |
| 분 할 後 | ◇◇◇ 10-** (1*1.17준) | 000원 | 제1종 주거지역 | 주거 기타 | 평지 | 부정형 | 북동향 | 광대 세각 | 50m | 500m | 그이상 |
| | ◇◇◇ 10-** (1*1.17준) | 000원 | 제1종 주거지역 | 상업용 | 평지 | 부정형 | - | 광대 세각 | - | 500m | 그이상 |

● 지목변경(20**.*.*)

| 토지소재지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시 군 구 |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 □ □ 구 | ◇ ◇ 동 | 10-** | 답 | 1,681 | 10-** | 대 | 1,681 |

7 모바일 광고사업 관련 수익계약 가능 여부

1 사업 개요

- 계약기간 : 5년
- 계약금액 : 00천원
- 계약방법 : 수익계약
- 사업대상 : 전동차 000량
- 사업내용 : 고객에게 인포테인먼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수익 창출
- 추진방향
 -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 고객에게 무료 콘텐츠 및 긴급재난안전문자서비스 제공
- ※ wifi 모바일광고 시스템 : 고객 스마트폰에서 사업자 wifi망 연결 시 영화·웹툰·게임·소셜 등 다양한 콘텐츠와 공공정보를 데이터 비용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하여 수익 창출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wifi 모바일광고 시스템이 특허 취득이 된 것이므로 업체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인천00공사 수익사업 운영내규」 제4조에 의하여 수익계약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
- 00공사에서는 수익계약 방침을 받아 시범사업 실시, 원가조사 용역 등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자와 계약 협상을 완료 함
- 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 등에 비용을 투자한 상황이고 관련법령 및 변리사의 기술독점성 인정 등으로 입찰 유찰이 명확한 상황에서 입찰진행으로 인한 사업지체 및 행정낭비를 없애고 적극적 업무추진 지원을 위하고자 함

3 검토결과

■ wifi 모바일광고사업 관련규정

- 00공사의 「수익사업운영내규」 제4조에서 계약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또는 의장등록 등이 되어있어 경쟁입찰이나 공모추첨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사항

- 00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동차 내에서 wifi 모바일 광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개업체(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후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업체와 시범사업을 기 시행한 상태이며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협상을 완료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wifi 모바일광고 시스템은 사업자 부담으로 전동차 내에 라우터를 설치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 스마트폰에서 사업자 wifi망 연결시 영화, 만화, 게임, 음악, 뮤직비디오, e-learning(잡지·책) 등 다양한 콘텐츠와 공공정보를 데이터 비용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임
- (주○○○○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무료로 wifi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를 통하여 그 광고 수익금 중 확정 계약금 00천원과 초과 매출액의 **%를 00공사에 지급하고자 함
- 프리와이파이 서비스와 광고 및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wifi 모바일광고 시스템)은 와이파이를 통한 광고, 공공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 해당업체가 라우터를 이용하여 wifi 모바일 광고사업 권한 취득

☞ wifi 모바일광고 시스템

- 그동안 추진사항

- 모바일 광고사업 사업자 발굴 : 20**. 4 ~ 7월
- (주○○○○ 사업제안서 접수 : 20**. 8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보고회 개최 : 20**. 9
- 시범사업 실시 및 결과보고 : 20**. 11 ~ 12월
- 원가조사 용역 실시 : 20**. 11 ~ 12월

시스템 · 광고형태 “NO Data, Free Contents, Commercial ad”



전동차내 라우터 설치

Wifi존 형성



설정에서 SFi망 선택



로딩광고



플랫폼, 배너광고

검토사항

- 00공사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전동차 내에 라우터를 통한 와이파이 서비스와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주)◇◇◇ 업체에서 특허 등록받은 시스템(라우터→주파수를 통한 사업자 와이파이망(SFi망) 설치→콘텐츠 제공→광고수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따라 위의 시스템을 채택하여 계약하고자 한다면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 사업자 와이파이망을 설치하여 무료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영화, 만화, 게임, 등 각종 콘텐츠와 광고를 제공 하는 시스템(사업자 와이파이망(주파수 또는 통신망) 설치→콘텐츠 제공→광고수익) 운영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
- 비록 특허 등록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개업체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논란 및 특혜시비가 발생될 수 있으니 공개에 의한 공모로 협상을 통하여 시민 고객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00공사에는 최고의 수익금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공개에 의한 공모 방법으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를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할 수 있음
 - ☞ 한편 1개업체가 응모 시에는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가 있다면 유효한 입찰로 간주할 수 있으니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음



4 컨설팅 의견

- 지하철 내의 일정공간을 이용하여 모바일 광고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성 여부 및 불편사항 등이 최우선으로 반영·검토가 되어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 방법이 타업체로부터 특혜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전동차 내에 라우터를 통한 와이파이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수입을 하는 사업만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은 특허 등록된 사업이라 수익계약이 가능하지만, 특허 등록이 아닌 모바일로 영화, 웹툰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타업체에서도 가능한 사업이기에 공개에 의한 공모로 모바일 콘텐츠 제공 및 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최고의 수익금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도서구입 시 입찰가격에 대한 제한 기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00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사업비 : 00천원
- 도서관 개관 일정 : 20**.*.**.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인천지역서점 도서구매 요청과 입찰자격에 제한 기준과 관련 00도서관 개관도서 구입 시 입찰참가자격 2개 항목 제한 가능 여부
 - ▶ 항목 1 : 입찰공고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소재한 업체
 - ▶ 항목 2 : 서적 도·소매업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소지에 방문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지역서점
- 계약부서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2개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사업부서 의견 : 인천지역서점 도서구매 요청으로 인천광역시 소재한 업체로서 주소지에 방문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지역서점으로 제한 요청
- 추진근거
 - 도서구매계약 관련 안내사항 통보(행안부 0000과, 20**.*.**.)
 - 지역서점 활성화 협조(문체부 000000과, 20**.*.**.)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계약방법 개선계획(시 0000과, 20**.*.**.)
 - 공공기관 도서구입시 인천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요청(시 0000과,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3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요령 제3절(제한 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사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

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 지역제한 입찰시 입찰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2) 용역 : 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3) 물품 :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 ○ 도서관에서 도서구매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소재한 업체로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소지에 방문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지역서점으로 제한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한입찰의 중복 제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 된다고 판단됨

- 다만 00부 000000과-*****(20**.*.*)호 「지역서점 활성화 협조」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해당 지역에 매장을 갖춘 서점) 우선 활용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 시 0000과-*****(20**.*.*)호 「공공기관 도서구입시 인천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요청」의 공문을 통보하여 인천지역의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입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00부 유권해석(0000과-*****. 20**.*.*)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절 제5호 라목)
 -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간서적이 출판될 시 해당도서를 구매할 경우 “부당하게 시기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3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1-6.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제(도서정가의 10% 이내 할인)가 적용되어 일괄구매하더라도 예산절감이 되기 어려우므로 통합발주 대상에 포함시킬 실익이 없어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 가능

● 도서구입 계약방법 개선계획(0000과, 2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 가급적 개별 서점의 구입을 지양하고 협동조합 등 공동이익을 위한 단체에서 구매

- 신간도서는 분할계약금지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입사유 발생 시 수시 구입 추진

4 권설텍 의견

● 00도서관에서 도서구매를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소재한 업체로서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소지에 방문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지역 서점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담당자 주의사항 중 제한입찰의 중복 제한(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과 출판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우선구매가 가능하며 지역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업자와 계약 추진도 가능함

●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가칭) 자료선정위원회 등 설치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14.11.21.) 개정에 따라 도서구입 계약 시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대량의 일괄구매보다는 이용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소규모 수시 구매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총사업비 : 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융복합지원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협약당사자와 별도의 업체선정 절차 없이 계약 가능여부
- 협약당사자와 계약 가능하다면 협약서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거 별도의 계약서 필요여부
-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市 계약심사 대상여부

3 검토결과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00000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호) 제35조에 의하면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상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지원 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융복합지원사업의 시행기관은 00000공단(○○○○○센터장)으로 센터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고를 하며 공고내용에 지원사업의 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6년 1월에 공고를 하였고 인천광역시 □구에서는 구립경로당 4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와 44개소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음. 2016년 10월에 00000공단에서 최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1월에 00000공단(000000센터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 체결의 당사자
 - (갑)전담기관장 : 000000센터 소장
 - (을)주관기관장 : 인천광역시 □구청장
주관기관장 : 인천광역시 □구청장
 - (병)참여기관장 : (주)◇◇◇◇◇ 대표이사
참여기관장 : (주)◇◇◇◇◇ 대표이사
 - (정)수요자 대표 : 인천광역시 □구청장
- 협약의 주요 내용
 -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융합복합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르며 사업 계획서 내용은 협약과 동일한 효력
 - (갑), (을), (병), (정)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수행
 - 정부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선금금 및 잔여보조금을 지급
 - (갑)은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00000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공개경쟁계약(공모에 의한 낙찰자결정)의 계약방법으로 사업자가 선정 되었기에 (갑), (을), (병), (정)이 체결한 협약서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을)이며 주관기관인 □구에서 참여기관인 (병)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의 협약당사자 중 전담기관은 (갑)인 00000공단(000000센터장)이므로 (을)인 인천광역시 □구에서 별도의 계약 체결 및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 제10조에 따라서 (갑), (을), (병), (정) 공동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특히,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품의서·계획서, 입찰유의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도 계약문서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계약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 심사대상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심사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협약당사자 간에 기 협약이 체결되어 (20**.*.**.) 사업비 및 공사참여자가 결정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컨설팅 의견

-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요조사 공고하여 산하기관인 00000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의한 낙찰자결정의 방법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에 동사업의 주관기관인 인천광역시 □구(을)에서 참여기관(병)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융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체와 별도의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 등을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00000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이며 공모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약이 체결되어 사업비 및 공사참여자가 결정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기에 계약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10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1 사업 개요

- 0000보조경기장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 20**.*.*.
- 사용기간: 20**.*.*. ~ 20**.*.*.
- 사용목적: 00파크
- 체육시설 예상 사용료 내역서 전달 : 20**.*.*.
- 전용사용료: 00원
- 부속시설사용 기본료: 00원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인천000000 의견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보고 위 사용허가 신청 기간의 조기, 주간, 야간 사용료를 모두 부과함이 적법
- 신청인 (주)0000 의견
 - 사용허가 기간 중 존치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조기, 야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나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
- 0000보조경기장 체육시설을 00파크로 사용허가(20**.*.*~**.*)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부과는 사용허가 기간 중 조기, 주간, 야간 사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검토결과

- 0000보조경기장에서 20**.*.*부터 20**.*.*까지 50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00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00파크 운영기간 동안에는 운영하지 않는 조기, 야간에도 00파크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할 수 밖에 없음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9조 2항은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0000공단 법률자문(20**.*.*)』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00파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아침과 야간에도 그대로 적치하여 둔다면 그러한 적치행위 자체로 체육시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00파크 시설물로 인해 아침과 야간에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아침과 야간에 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00파크 영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체육회의 책임이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00파크 관련 시설물을 사용허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치하여 둔다면 이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아침과 야간에도 체육시설을 점유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용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9조에 서 사용료는 사용기간과 요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관련 시설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용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단서부분(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은 실질적으로 행사나 경기에 이용되지 않은 채 적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선고(20**다6****) 판결』에 의하면 “물건에 대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음

4 권설팅 의견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설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간, 야간 관계없이 사용기간에 해당되며 타 시립체육시설(00경기장, 00체육관 등)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주간, 야간 구분 없이 건물 철거 시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0000공단 법률자문,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후 아침과 야간에도 그대로 적치하여 둔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시설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0000보조경기장의 00파크 사용·수익허가 사용에 관하여 아침과 야간에 위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보며 주간, 아침, 야간에도 체육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야간 사용료를 모두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향후에는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체육시설물 수익사용에 따른 부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등 관련규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1

○○○센터 운영기관 변경

① 사업 개요

- 소재지 : 인천 □구 00동 2***번지 000센터
- 대지면적 : **,***.**, m²
- 건축면적 : *,***.**, m² / 연면적 : **,***.**, m²
-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 준공 : 20**, *월
- 개관 : 20**, *월
- 사용실태
 - 주요 시설中 체육동(수익시설)은 기존의 목적과 같이 사용되고 있지만 복지동은 대강당과 일부 시설 제외하고 공실로 방치
 - 복지동 1층 市 00공단 00사업단, 00청 0000과 사무실 및 인천00경찰대가 무상 임대 사용 중

②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000센터 관리 운영기관 변경(00청→□구청)을 위한 계획수립 중 □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이관방식 및 법령해석 등에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최적의 안을 찾기 위해 컨설팅 감사요청
- 사전 컨설팅 요청 사항
 - 1안) 무상양여에 따른 업무 이관 가능 여부
 - 2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따른 업무 이관 가능 여부
 - 3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감독부서지정으로 업무이관 가능 여부

③ 검토결과

■ 무상양여를 통한 이관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4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 행정재산의 양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양여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및 총괄 재산관리관 이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의 재산전출은 유상이 원칙임(특별회계 부실화 방지)
- 경자법상 무상양여의 규정은 없고, 양여의 경우 상급기관이 하급 기관으로 공유 재산에 대한 이전을 의미하는 바, 000센터의 일반회계(총괄재산관리관)로 이관 및 □구청장으로 양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문제점
 - 000센터를 □구청장에 양여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 문제, 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자치군·구의 무상양여요구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의 생점화 등 추가적 문제가 있음

■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관리 이관 가능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5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7항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수익계약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함
- □구청장이 000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할 수 있고, 000센터를 □구청 직원이 상주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000센터 운영비 □구청 전액 부담 협의 : '1*.*월(00청↔□구청)
(※시 특별교부금 50억 3년간 지원 조건)
- 문제점
 - □구청 직접 운영관련 사항 미협의(운영 인력상주 등 조직개편)

■ ○○○○센터 조례개정을 통한 □구청 관리위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22조

-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업무형태임
- 000센터는 「인천광역시 000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에 따라 0000공단 위탁 운영 중
- 문제점 : 000센터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에 위탁관리 하는 것은 00청장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위·수탁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4 컨설팅 의견

- 000센터의 이관과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 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법 규정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구청 운영이관 방안이라 판단됨
 - 000센터 운영에 따른 조건부 무상양여 또한 검토 가능한 방안이나, 일반회계로 (유상)전출이 필요하고, 무상 양여에 따른 타 자치군·구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00청은 □구청장과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000센터 운영업무의 이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000센터의 □구청 직접운영(조직상주)
 - 000센터 운영비 □구청 전액부담(협의 중)
 - 000센터 이용료 전액 □구청 귀속
 - 건물가치 상승을 발생하는 수선·증축 00청 부담
 - 유지·관리비 □구청 부담
 - 기타
- ※ 협의 조건 및 내용 등 협약서 및 허가조건에 명시



12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행정대집행 실시

1 사업 개요

- 방치폐기물 보관장소(임시보관장소) 인·허가 현황
 - 20**.**.**: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용적 700㎡, 중량 1,050톤)
 - 2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 및 임시보관장소 사용승인 취소
- 토지 소유자 현황(3인) : (주)○○ 42.12%, ○○(주) 27.59%, (주)○○ 30.29%
 - ※ 토지소유권 이전관계 : A(폐기물처리업자), B(현 토지소유주), C(이전 토지소유주)
 - C소유 토지를 신탁공매로 B가 인수함
 - A는 이전소유자인 C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음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명령을 미 이행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근거로 현토지 소유주에 처리명령하고자 구(區)고문번호사 및 0000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하였으나, 법률 해석이 이견되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사전컨설팅을 요청함
- 사전 컨설팅 요청 사항
 - 가. 현 토지소유주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미 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 * 현 토지소유주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이전 토지소유주의 신탁공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득함 이 경우에 현 토지소유주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나. 방치폐기물이 건설폐기물임에도 공공처리시설 반입 처리가능여부
 - 다. 구상권 청구에도 환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면책가능여부

3 검토결과

- 방치폐기물 처리의무자의 처리명령 미 이행에 따라 관할구청이 현 토지 소유주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검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 대법원 20**.**.**, 선고 20**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주)00000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담보목적으로 허가부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허가부지가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어 현 소유자가 허가 부지를 인수한 것이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신탁공매에 의해 부지를 인수한 현 토지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지,
- 또는 방치폐기물 처리의무자가 토지를 소유한 바 없던 토지가 전전 이전되어 현재 토지소유자가 그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초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사료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각호에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 토지소유주에게 처리의무자의 미이행을 이유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인지에 대한 검토

4 컨설팅 의견

- 현 토지소유주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미 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 법률자문 결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는 공매의 경우에도 강제환가 절차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비록 「신탁법」에 근거하여 현재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현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된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및 미 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방치폐기물이 건설폐기물임에도 공공처리시설 반입 처리가능여부

- 본 방치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타 지자체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 필요
- 행정대집행 시에는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인 관측(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구상권 청구에도 환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면책가능여부

-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률자문 결과, '관계공무원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련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구상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라고 회신된 바, 이는 적극행정으로 판단됨

13 물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요청

1 사업 개요

- 물산업 우수 기자재 등록제도 운영
 - 추진근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추진목적 : 물산업분야 우수기술·제품의 발굴 및 보급 촉진
 - 시행주체 : 0000000협회 *
 - 주관기관 : 한국0000협회
 - * 환경부, 특·광역시, 공공기관 등 00개 기관이 참여하여 물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코자 0000000협회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서 체결('1*.**.**))
- 추진경과
 - 물산업 우수 기자재 등록제도 시범사업 실시('1*. *. ~ '1*. *.)
 - 1차 : 00개사 **개 제품 신청, 0개사 **개 제품 등록, 2차 : 0개 품목 추가등록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물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체 감사부서 검토 요청(한국0000협회 000팀-***, 20**.*.**))
- (질의 1) 물산업진흥법 제10조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 (중략) ~ 협력 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 등을 구매 ~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수제품을 지명/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근거로 ‘물산업 우수제품’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3)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제10호를 근거로 ‘물산업 우수제품’ 생산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3 검토결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p>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① 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 <p>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p> | <p>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p> <p>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p> <p>7. 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p> <p>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p> <p>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6.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p> |

4 컨설팅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명입찰, 수의계약, 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을 지정 할 수 있고,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을 구매 하거나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해당 제품등에 대한 지명·제한입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8호, 제22조 10호, 제25조 제1항 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등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가능할 것이며 최종 계약방법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발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4 코로나19 방역목적을 위한 14세미만 정보동의 가능여부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용역기간 : 20** 5월 ~ 6월
 - 00000센터 개소식에 시범 활용하고, 6월 이후 본격 활용
 - 사업비 : 00천원 범위 내
 - 사업주체 : 인천00공사
- 방법 : QR코드 전용 웹 서버(00공사 기존 서버 활용) 이용
- 주요기능(안)
 - 출입자 명단 확인 및 발열 문답 기능
 - 행사별 관리자 권한 주최 측에 부여, 3달 후 자동 삭제 기능
 - 00공사도 출입자 정보 접근 가능토록 함(사전 동의 필요)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市 소관 산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출입자 명단(성명, 핸드폰번호)을 수기로 작성 관리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기대장을 전자출입명부로 관리하고자 함
- 도서관의 경우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이 잦고, 출입자인증시스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모 동의 절차 없이 휴대폰을 통한 문자인증으로 출입자명부를 운영하고자 함
- 공공기관에서 방역목적 등을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전산 또는 수기)를 운영할 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를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
 - ※ 코로나19 방역목적의 방문자 출입대장 작성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 동의없이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3 검토결과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기대장을 전자 명부로 관리하고자 함. 도서관의 경우 14세 미만의 이용이 잦고, 어린이들의 경우 코로나 취약계층으로 출입자인증시스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한 문자인증으로 관리하고자 함(부모 동의 절차 없이)

-> 국가재난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4호~6호를 적극 적용하여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만14세 휴대폰 및 문자 인증으로 출입자전산관리가 가능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수집 운영)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참고사항

① 법률자문결과

- A 법무법인 : 코로나 19대응에 불가피 하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B 법무법인 : 도서관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의무가 없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함

② 중앙부처 질의결과

- 0000위원회 : 공공기관의 온라인상 개인정보수집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4 컨설팅 의견

- 국가재난인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이용이 잦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게 현실임. 그러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수집 운영) 2호,3호,6호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조(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 ※ 행안부 유권해석(00과-***, 20**.*.**.)
-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방문자 방역관리 모바일웹 구축시 보건 복지부에서 시범 도입중인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할 필요

15 협의취득 시 매도기관 매수기관 상호 감정평가 결과 반영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0000 통합관리센터 조성
- 위치 : □구 소재
- 기간 : 20**년 3월 ~ 20**년 2월
- 면적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 사업내용 : 0000센터
- 소요예산 : 00백만원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구청과 인천00공단은 0000 통합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에 따라 인천00공단 000동청사를 협의매수하기로 합의함
- 매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를 □구청에서 추천 1명, 인천00공단에서 추천 1명으로 협의하던 중 인천00공단은 공단만 감정평가사를 2명으로 추천하여 산술평균 금액을 매각금액으로 산출한다는 입장
- 본 사업은 20**.**.**. □구청에서 『0000 통합관리 조성』을 건의한 토의사항으로 인천시 0000담당관은 인천00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 □구청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이며 매수를 반드시 해야하는 입장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매도인 및 매수인 각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평가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정을 하도록 의미하고 있는 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구청)은 사업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거 하여 반드시 인천00공단 00동청사를 매입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매도자(인천00공단)만이 추천하는 2인의 감정평가사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받아들여 건물을 매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3 검토결과

● 핵심쟁점사항

- ① 매수인(□구청), 매도인(00공단)간의 0000 통합관리센터 조성에 관한 부지(□구 00동 소재 인천00공단 00동청사)에 대하여 협의매수와 관련한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핵심쟁점사항으로 분석됨
 - 매수인(□구청) : 당 센터조성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약칭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각각 1인씩 선정하여 매입을 원함
 - 매도인(00공단) : 00공단 건물은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처리되는 내용으로 우리공단에서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하여 매각 결정을 원함

● 핵심쟁점사항 분석

- ① 매수인(□구청) 주장은 토지보상법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에 의하여 공익 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법 적용이 가능하나, 동 사업은 토지 보상법에 의한 사업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 동법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00공단)주장 내용은 00공단 정관 및 재산관리 규정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자체 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그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결과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술평균토록 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2007년도 현물 출자한 00공단으로 소유권 이전된 동 시설에 대해 00공단에서 공유재산법을 준용하여 매각결정 하는 사항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참고 : 00공단 0000실-****호(20**.*.*)

| |
|--|
| 인천광역시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00공단 정관 제19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5.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 인천00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1-18>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 인천00공단 재산관리규정 제10조(재산의 취득·처분·변경) 재산의 취득·처분·변경(신축, 증축, 철거 등)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산심의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가격평정) ①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재산가격평정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산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조서, 인근 유사물건에 대한 매매실례조서(별지 제2호 서식), 토지 개별공시지가 등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한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컨설팅 의견

- 매수인(□구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이 관련법에 의한 적용조건(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선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매도인(00공단)이 관리하는 자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00공단 정관 및 재산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처리과정상 공유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거래당사자간 신뢰형성 및 공정성 등을 판단하여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사안임

1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관련

1 사업 개요

- 인천00000주택조합 000 사업계획
 - 위 치 : 인천광역시 00동 소재 3필지
 - 대지면적 : 000㎡
 - 연 면 적 : 000㎡(용적률 : 00%)
 - 규 모 : 지하 *층~지상 **층, 공동주택 *개동(59㎡형 ***세대)

2 주요내용(건설탕 사유)

- 인천00000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빗물유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 00과에서 20**.*.**.변경 통보한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 개선(안)”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한지 사전 건설탕감사를 요청함

3 검토결과

- 관련규정 검토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하 ‘빗물부담금’이라 함) 산정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제4항 및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에 따라 부과하며,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 허가조건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 관련 허가조건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임시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고시·공고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하수량 산정방법 및 하수량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 변경 및 추가 제출되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정”한다고 조건 부여되어 있음
- 관련부서(시 00과) 협의 의견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3항 및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빗물유출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빗물 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 개선(안)”과 관련한 원인자부담금[빗물 유출부담금] 적용시점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협의 및 보완 등]가 완료되어 확정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됨

4 컨설팅의견

- 상기 검토내용(관련법, 주무부서 의견)과 같이 빗물부담금 적용시점(산정기준일)에 대해서는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 개선(안)”을 적용하여 확정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빗물부담금을 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17 재개발사업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1 사업 개요

- 면 적 : 00㎡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용 적 률 : 00%(정비계획상 용적률: 250% 이하)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근거규정 해석에 어려움으로 사업시행자와 이견이 발생하고, 정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안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
- (요청 1) 「건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용적률 완화를 받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지?
- (요청 2) 요청1과 같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완화 용적률이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에 완화 용적률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3 컨설팅의견

■ 요청 1에 대하여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도시정비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임
- 위에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또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말하는 것임



- 아울러 동 사항과 유사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관련부서 의견 및 서울·경기도의 유사사례 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요청 2에 대하여

- 상기와 같이 건축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할 때는 인·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됨

18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작성의 건

1 사업 개요

- 「○○○ 다목적강당 및 놀이시설 건립사업」
 - 위 치: □□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20**.*. ~ 20**.**.
 - 사업량: 지상3층
 - 예산액: 00백만 원
 - 사업내용: 다목적강당 및 놀이시설, 맘카페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개요
 - 사업량: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1식
 - 예정가격: 00백만 원
 -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 평가방법: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참여업체별 제안서 평가
 - 참여업체: 놀이시설 전문 업체 6개소(설명회 참석업체 기준)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작성대상 중 평가인원 일부가 모집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0000지역 다목적강당 및 놀이시설 건립사업」의 시설공사 준공 전 놀이시설 납품(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이 어려운 실정
-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항
 - 관련예규에 따른 예비명부 모집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 모집된 인원만으로 평가 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

3 컨설팅의견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제외 통보 함



-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각종 사례와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람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수하여 추진
 - 제5장 제4절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및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
 - ② 보다 적극적인 평가위원 모집방안 마련 시행(자체 운영 지침 등)
 - (00청) 사전에 평가분야별로 수배(또는 수습 배) 인원의 인력풀 구성 운영
 - (00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매뉴얼 작성 운영
 - 평가위원회예비명부 구성 후 입찰공고, 외부기관 등에서 평가위원 추천 등
 - ※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을 예비명부 작성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

■ 권고사항

-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과 관련한 □□군 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 매뉴얼 등 마련 방안 강구

19

○○○(주) 토지매매계약 변경 계약 체결

① 사업 개요

● 토지매매계약

- 투 자 자 : A, B(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 대상부지 : 00동 소재 00㎡(약 6,800평)
- 총사업비 : 약 00억원
- 건축개요 : 업무시설, 교육센터 등

②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사업자 입장

- 그간 외투사업자 요청 등에 의한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과 제반 사정 등에 의해 사업 일정 지연에 대한 귀책에 인정하나 위약벌 등이 포함된 변경 계약 체결하는 00청의 선처 시 반드시 계약의무 이행 약속
- 환매권 행사 결정시, 대표의 배임을 피하기 위해 소송 진행 불가피

● 00청의 대응방안 검토 내용

- 제 1안) 환매 절차 이행
 - 장점 : 계약 내용에 근거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업의 귀책에 대한 책임 부과
 - 단점 : 소송 장기화(최소 2~3년) 및 제3의 기업유치에 장기간 표류 가능성 있음
 - ※ 인근 용지 7필지도 미매각부지로 남아 있음
- 제 2안) 토지매매변경계약 체결로 착·준공 기한 연기
 - 장점 : 본 기업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적합한 제약·의료기기 제조 및 연구기업으로 사업 준공시 고용 창출, 바이오클러스터 시너지 효과 기대
 - 단점 : 토지매매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감사 사례가 있어 행정적 부담 있음

● 00청의 대응방안 논의 결과

- 환매권 행사 보다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변경계약 체결
- 연장된 착공시기 어길시 환매
- 기업에게 시설별 공정계획서를 제출, 사업지연위약금, 준공을 통제할 수 있는 위약벌 등을 포함하는 토지매매변경 계약 체결

Part
4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 사전컨설팅 감사 요청 사항

- 환매 절차 이행(계약금 10% 물취 후 토지 환수)은 계약 내용에 근거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기업의 귀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관례상 기업과의 소송 장기화 및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비전에 맞는 제 3의 기업 유치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 가능
- 00청은 본 기업이 사업 추진의지가 있고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본 업체와 사업 추가 지연 및 준공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약벌이 들어간 토지매매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변경계약 체결이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 및 공정성 위배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자 함

3 컨설팅의견

-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며 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없는 이상 보호되는 것으로, 계약된 사항의 집행(환매 절차 이행 등) 또는 내용의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판단 및 정책적 결정에 따를 사항이므로,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사전 컨설팅 감사의 대상)제2항에 따라 제외 대상임을 통보함
- 참고적으로,
 - 해당 토지 매매계약서 제12조 등에서 정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착공 및 준공 시기가 연장된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제외)는 제13조 등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 및 환매 대상에 해당할 것임
 - 또한 협약당사자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착공 및 준공 시기가 연장된 경우라고 판단되어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당초 해당 토지의 공급 목적과 그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환매특약이 만료시효(20**.*.**.)가 임박한 점 등 다양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계약 해제 및 변경 등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유, 무형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대방이 부당하거나 자연스러운 가치상승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20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에서 교육재난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1 사업 개요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 검토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으로 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호, 20**.*.*)
 - ▷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 모두 포함
 - ▷ 학교 밖 청소년 별도 지원방안 마련·추진(지자체)
- 사업내용
 - 지급대상 : 인천소재 교육청 지원대상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청소년 중 해외 출국자 제외)
 - 지원인원 : 약 8,000 여명
 - 지급금액 : 00만원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방문 신청(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 타당성 검증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근거로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의거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의거 000실 문의 시 동 규정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00000실 변호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별도의 조례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Part
4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변경 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제75조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1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금 또는 현물(상품권) 지급이 가능 한지 여부
 - 가출, 신용불량 등의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동의가 아닌 본인의 동의를 받고 현금
또는 현물(이음카드, 문화상품권 등)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유도 필요함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특수상황과 조례 제·개정 의 행정절차 이행에 수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시에서 별도의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일한 재난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3 권설텡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근거로 재난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및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 권고사항(조례·지침·사업계획 등에 반영)을 이행할 경우 지원금 지원이 가능함
 - ※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 모두 포함과 관련한 위원회 권고 사항(의안번호 제20**-***호, 20**-**.)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이행한 경우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의거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1조(목적) 및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위원회 심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 운영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할 사안임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변경 후 재난지원금(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 가능여부
 - ⇒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및 관리부서(0000과)와 “취약계층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아래 관련법, 규정, 붙임을 참고하고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 충분한 재논의(공론화 포함)를 통하여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안임
 - 학교밖청소년법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제11조(자립지원), 청소년 복지법 제14조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 고용노동부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취약계층의 범주에 위기청소년 포함
 - 청소년복지법 제2조 제4호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1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금 또는 현물(상품권) 지급이 가능 한지 여부
 - ⇒ 현금 또는 현물(상품권) 지급여부는 (청소년복지법 제14조 등)관련법, 규정, 지침, 유권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자체 결정할 사안임
 - 가출, 신용불량 등의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동의가 아닌 본인의 동의를 받고 현금 또는 현물(이음카드, 문화상품권 등)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일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동법 제22조 제6항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참조 필요
- ※ 행정안전부 회신【0000000과-*** (20**.*.**)】
- 기타(권고)사항
 - 본 컨설팅 감사 신청에 대해서는 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례·지침·사업계획 등에 반영 통해 해결 추진)으로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규칙」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단순질의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부서)에서 해결 가능 등)에 해당되어 동 규칙 제11조 제3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21

○○지구 ○○시설 사업비 정산금 관련

① 사업 개요

- 사건명 : 인천지법 20**가합***** 「정산금 청구」
- ○○지구 ○○시설 사업비 정산금 및 지연이자 청구
- 패소시 판결금 : 총 00억원(청구금 + 지연이자)

② 주요내용(건설팅 사유)

- ○○지구 ○○시설 사업비 정산금 청구 소송 패소 관련 사업비 정산금 및 지연이자 청구금 확보 필요
→ 지방채 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 불가능
- 지방채 발행 불가에 따라 예산 미확보로 패소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발생
- 구 예금담보를 통한 금융 대출로 패소판결금을 긴급 마련하여 신속하게 패소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 최소화 필요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심의·의결 후 구 예금담보를 통한 금융대출이 가능한지 질의

③ 검토결과

- 관련법 규정의 처리기준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24조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 행정안전부)
- 유사업무 처리
 - 2019.~2020. 현재까지 市 소송비용 및 판결금 집행 건은 이자비용 증가 억제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하여 대부분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음



● 市 관련부서 협의 의견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규정에 의거, 지방채는 증권발행방법으로 차입하는 지방채증권과 증서로 차입하는 차입금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금융담보대출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채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상기 소송 청구금 지급건은 지방채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4 컨설팅의견

- 지방자치법 제12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 용어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와 증서로 차입하는 지방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관련법령과 사례,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지방채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담보대출을 포함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본 소송의 패소 판결금의 지급을 위한 사안은 지방채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의회 심의·의결 후 구 예금담보를 통한 금융대출은 불가한 것으로 의견 제시함
- 또한 본 컨설팅 감사 신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단순질의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에서 해결 가능 등)에 해당되어 동 규칙 제11조 제3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 권고사항

- 유사한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패소가 예상되어 소요 예산 확보와 예산절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판결 이전에 판결금 분할 상환 등 절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 귀 기관이 소송의 피고로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패소가 예상되거나 승소가 불분명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에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필요함



22

“우회고가 정비공사” 관련 하부도로 포장공사 우선(분할) 발주 가능 여부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구 ○○동 ~ □구 ○○동(우회고가교)
- 사업규모: L=*,***m, B=**,.*~**.*m(4~6차로)
- 총사업비: 00백만 원
- ※ 현재 진행상황: 실시설계용역 중(0000본부 00부)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사전컨설팅 배경

- 우회고가 정비공사는 기본설계 준공시 1,2구간을 분할하여 단계별 시행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 단계별 철거로 인한 교통불편 장기화, 인천대로 사업시기 중첩에 따른 교통 대란 등이 우려되어, 도로기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변경 (단계별 → 전체 철거)을 검토 중에 있음
- 우리부서는 방침 결정시, 전체구간 철거공사 이전에 차량 우회로의 사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교부된 국비(50억)의 적기 투입 등을 위해 비포장 하부구간 (0+880~1+200, L=320m, 약 9.9억)을 선행구간으로 선정하여 토지보상 및 하부도로 포장공사를 우선 추진할 계획임

●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내용

-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인 단계에서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회로의 사전 확보가 필요한 고가 하부구간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자체 입차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반 되는지 여부
- (갑설)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되므로 분할계약 불가

- (을설) 고가하부 도로포장공사는 상부고가 철거공사에 선행하여 우회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로 사료되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설계서가 별도 작성이 가능하고, 개별적·독립적 시공이 가능하므로 분리 발주 가능

3 주요내용분석

- “우회고가 정비공사”는 기본설계에서는 1, 2구간을 분할하여 단계별 철거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1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나, 주변여건 및 연계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단계별 철거 시 장기간 교통혼잡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체 철거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 전체철거 시 우회고가 전 구간 교통통제가 불가피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 우선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현행 우회고가 하부 구간(L=320m) 이용한 교통처리 대책 검토과정에서 단계별 시행에 따른 분리발주 필요성이 대두

【 단계별 시행 】

- * 1단계 : 우회도로 확보, 시범운영(2개월), 문제점 및 개선마련 시행
- * 2단계 : 우회고가교 전면통제, 고가교 철거 추진

【 분리발주 시행(안) 】

- * 1단계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포장 추진을 위해 우선 발주 추진
- * 2단계 우회고가교 철거 발주 추진
-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으나 단서규정⁵⁾의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규정>

- 5)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리·분할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총칙) “5-가”에서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5-나”에서는 예외 규정으로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4 컨설팅의견

- 주요내용 분석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미 수반, 하자책임 구분,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 지장이 없고, 공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시행에 따른 분리 발주는 가능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단계에서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 검토등의 절차이행을 통해 발주 및 계약부서의 담당자가 종합 검토 후 최종 결정 할 사안임
- 본 컨설팅 감사 신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단순질의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에서 해결 가능 등)에 해당되어 동 규칙 제11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음

권고사항

- 사업계획 변경 검토 시 단계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 시행하고, 우회도로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충분한 협의, 예산의 중복투자 예방, 인·허가 절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3 공유재산(임대시설)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환급 가능여부

① 사업 개요

- 시설명 : 00000 매점
- 임대면적 : ***㎡
- 사용·수익허가자 : 000
- 입찰일시 : 20**.**.*** ~ **.**.
- 개찰일시 : 20**.**.***
- 허가통보 : 20**.**.***
- 연사용료 : 000백만원

②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000공원 및 00원의 잦은 폐쇄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사용수익 허가자로부터 매점 운영에 어려움으로 사업포기 후 허가받은 잔여기간에 대한 선납한 사용료 일부 반환을 요구함
- 관련 법령 및 000공원사업소와 매점 운영자간의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이 가능한지 질의

③ 주요내용분석

- 현행 공유재산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공공 또는 공공용의 필요에 의한 직권 취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취소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 * 공유재산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①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무단으로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 ②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본 공유재산(매점)의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에 의하면 제12조에 의하여 “우리사업소에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3조에서는 ‘사용자’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우리 사업소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책사유에 의한 직권취소 외에도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사유로 허가 취소요청 및 취소가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1조 규정에 따라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적용)하는지 여부등의 검토가 쟁점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 * 제11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와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취소 가능
- 한편, 관련부서 협의의견에서도 중앙부처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재산관리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의 귀속의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정산 후 나머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내용 인용
- 또한, 대법원 판례(19**.*.*.선고 **누*****, 판결)에서도 허가 취소 처분 시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 내용 인용
 - * 공유재산 업무편람(2018) 제2장 공유재산관리편 내용 중 인용(P99~104)

4 컨설팅의견

- 상기 주요내용 분석 및 각종 관련자료에 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상황에서 사용허가 기간 내 잦은 매점폐쇄 및 수익원인 00원 폐쇄가 상호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과 대법원 판례와 중앙부처 질의회신 내용 인용 결과 사용·수익허가자가 허가취소 요청 및 취소 후 잔여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재산관리관이 아래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용료 반환이 가능한지 최종 결정할 사안임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검토

-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하여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을 근거로 판단하여 기 납부사용료의 귀속 규정 해석

- 또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공원 편의시설의 장기간 운영지연 초래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현재 계약자와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목적달성 가능하도록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계획 및 운영요령」의 업무처리 통보[0000담당관-*****(20**.*.**)와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허가기간 연장, 사용료 감경 등을 추가 협의 후 편의시설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권고사항

- 사용·수익허가 처리업무 일반조건 부여시에는 「공유재산 업무편람(2018, 행정안전부)」(P102~104)을 참고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와 사용료 반환등에 업무 처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24

○○협회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

① 사업 개요

- 20**. *월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사건발생
- 20**. *월 : ○○협회 행정처분 조치
- 20**. *월 : 외부 법률자문 의뢰
 - ○○협회 지방재정법 위반 사건 민사소송 제소실익 질의
 - 법률고문 의견(2명 : 제소실익 없음. 1명 : 협회 채권자로서 대위소송 가능 답변)

②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협회를 상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하고 반환조치 요구하였으나 협회 기능 상실
- 지방세징수예에 따라 독촉 및 압류위한 재산조회 실시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회수 난망
- 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한 회수를 위해 제소 실익에 대한 외부법률 자문의뢰 결과, 2인 - 제소실익없음. 1인- 협회 채권자로서 대위소송 가능 답변
- 자문결과 소수의견(1인)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민사소송 제기 검토 및 패소 시 책임 여부 검토

③ 주요내용 분석

- 본 컨설팅감사 신청 사항 중 민사소송 제기 검토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의거 행정절차와 방법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같은 규칙 제14조(제소)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 여부, 증거자료, 법률고문 자문의견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송결과 패소 시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소송 결과 이전에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장 소 확정 후의 조치 및 수입료 등 참조

4 컨설팅의견

- 본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부서에서 본건과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 결과, 관련법, 관련판례, 법률 자문의견 등을 참고하여 소송가능성 및 제소실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부서(00000실, 고문번호사)와 업무협의 후 소송 제기 여부등을 결정할 사안임



25

면세점 이용 관광객 보행통로 불편 개선

1 사업 개요

- 기업현황
 - 소재지 : □□구 000로 ***
 - 기업명 : 000면세점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인천내 유일한 000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체 관광객인 중국 유커는 물론 다수의 외국인들이 관광버스를 이용 동 면세점을 이용함에 현 위치 승·하차시 자전거도로를 위해 설치된 화단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이용시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요청

3 검토결과

- 임회자 : □□구 00과 000(자전거도로 담당자) 외 1인
- 조사결과
 - 현장확인 결과 000면세점 주변 도로의 경우 도로 협소로 대형버스 진입 난항
 - 현행 00대로 앞을 이용 일시 정차를 통해 관광객 이용토록 유도중
 - 대형버스에서 승·하차시 화단 및 자전거도로 진입시 단차로 인해 외국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관계기관 입장(□□구 00과)
 - 자전거도로내 화단 단차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개선이 필요함에는 의견 일치
 - 자전거도로내 화단을 버스정류장처럼 조성시 불법 정차 구역으로 만연화됨은 물론 역민원 제기를 우려함
- 현장 협의안(市 00과, □□구 00과)
 - 화단내 단차 문제로 대형버스에서 승·하차 하는 외국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단내 자전거도로 단차를 없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 또한 현재 市 차원 추진중인 자전거도로 활성화 용역에 의견을 제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모색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2014년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2010년 17.6%에 이르던 방문 비중이 2011년 9.0%, 2012년 7.7%, 2013년 7.8%, 2014년 5.0%로 외래 관광객의 인천 방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자료 :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관광부, 2015.2. 이하 자료 출처는 동일)
- 시내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 나름의 마케팅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인천시와 시민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함. 거시적인 지원 정책과 아울러 외래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지원과 관심이 절실함
- □□구 000로에 소재한 인천 유일의 시내 면세점인 '000면세점'은 시내 중심지 위치하고 있어 활성화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주변 교통 환경이 열악하여 외래 관광객들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 특히 대형 버스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경우, 이면 도로 등에는 대형 버스 주정차 공간이 없어 건물 전면에 승하차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임. 그러나 건물 전면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들이 승하차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를 분리하는 화단으로 인해 외래 관광객들이 넘어지는 일이 빈발하여 관광 인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4 컨설팅의견

- 자전거도로와 화단 단차(15cm)로 인한 관광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근 버스정류장과 동일한 형태로 자전거 도로를 높여 정비





26

(주)00 앞 도로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완화**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현황

- 소재지 : □구 0000 ***
- 기업명 : 00공장

● 기업애로사항 내용

- □구 00동에서 40여년간 인천발전을 선도한 공장기업으로 동 기업 정문을 통해 자재 및 납품을 위한 화물차량이 진·출입함에 왕복1차선인 000로 진입시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해제 요청
※ 최근 동 업체의 애로사항 일시적 해결을 위해 임시 통행허가증 발급
- □구 00동에 소재한 (주)00공장은 19**년 우리나라 최초로 000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40년 동안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현재 (주)00공장에서 생산하는 000는 시장점유율 **%에 이르러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억달러가 넘는 국내 최고의 기업임
-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년 매출액 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 성장하여 인천지역과 국가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 산업체임
- (주)00공장은 ***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0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어 고용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주)00공장은 중후장대형 제품인 000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완제품을 출고하고 부품을 입고하는데 불가피하게 대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주)00공장에 대형화물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정문 도로가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 따라서 1일 180여대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어 조업에 큰 차질을 겪고 있음

2 건의사항

- (주)00공장의 정상적 조업, (주)00공장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주)00공장 정문 인근의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주)00공장 화물자동차 출입 현황(1일)

| 구분 | 용도 | 대수 | 중량 | 비고 |
|-------------|----------|-----|-------|--------|
| 완성 차량 출고 | 컨테이너 트럭 | 10 | 25톤 | 중형 000 |
| | 트레일러 트럭 | 5 | 25톤 | 대형 000 |
| | 기타 5톤 이상 | 15 | 5톤 초과 | 소형 000 |
| 협력 업체 부품 입고 | 소형 부품 | 105 | 5톤 이하 | |
| | 대형 부품 | 45 | 8톤 초과 | |
| 계 | | 180 | | |

3 협의결과

- 관계기관 현황 : 인천0000청 0000과
 - 협의자 : 00계 000 수사관
- 의견조율 내용
 - 동 구간의 화물차량 진입 해제건은 0000청 소관 업무로 확인되며, 1995년 화물차량 통행제한 고시 당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으나 최근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 임시 통행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나 기업애로사항의 적극 해결을 위해 통행 해제 등 규제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 소관청에서는 최근 버스노선 개편 등의 현안사항으로 인해 미흡하나 조속히 해지검토 등을 통해 기업애로사항 해결 의지 표명
 - 통행제한 해지 관련 검토 시 시민의 안정성,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관할구청, 교육청과도 협의가 필요한 실정임

4 컨설팅의견

- 임시 통행증을 발급을 완화하고 향후 통행제한 구역 해제 검토



27 소규모 공장 앞 통신주 이설로 기업불편 해소

1 현 황

- 위 치 : □□구 00농장 0000사 앞(00동 *-***번지)
- 내 용
 - 00농장 일원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으로 도로폭 협소하며 보도가 없고 양방향 차량통행도 불편
 - 공장 앞 통신주로 인하여 차량주차 및 통행에 불편 초래

2 추진사항

- 기업애로사항 발굴 : 20**.*.*
- 통신주 이전관련 해당 구 관련부서 협의 : 20**.*.*
 - 기업인들은 통신주 제거를 원하고 있으나 설치자는 비용문제로 난색 표명
 - 소규모공장의 영세성과 차량 추돌 위험 등을 설치자에 지속 건의하여 이전완료

3 추진결과

- 통신주 이전 처리 완료 : 20**.*.**



조치결과(前)



조치결과(後)

28 교통시설물(가드레일, 횡단보도) 정비로 보행안전 확보

1 현 황

- 위 치 : □구 00동 ***-**, 인천지하철 2호선 00역
- 내 용 : 0000단지 입구 교통신호등 앞 횡단보도가 가드레일에 막혀있고 0000단지 입구 교통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 무단 횡단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

2 추진사항

- 기업애로사항 발굴 : 20**.*.**,
- 기업애로사항 통보 : 20**.*.**,
 - 가드레일 정비 : □구 00실
- 20**.*.**: 횡단보도 상 설치된 철제가드레일 철거 작업지시

3 추진결과

- 횡단보도 정비 완료 : 20**.*.**,
- 횡단보도 상 설치된 철제가드레일 철거 작업완료 : 20**.*.**,
 - 가드레일을 제거하고 횡단보도를 재도색하여 공단근로자의 보행 위험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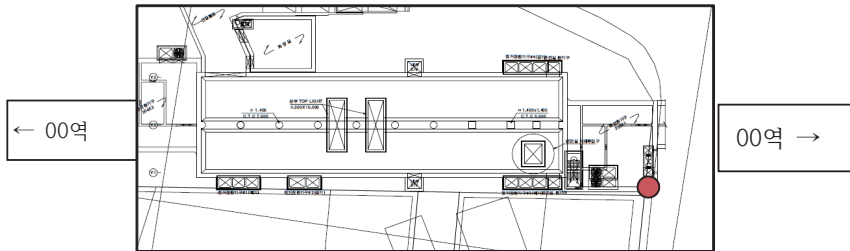




29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1 현 황

- 위 치 : □구 00동 ****-**-****번지 일원
 - 00역사 지상부 공원내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
- 규 모 : 길이 4m, 폭 2m, 깊이 3m이상(추정) 지반 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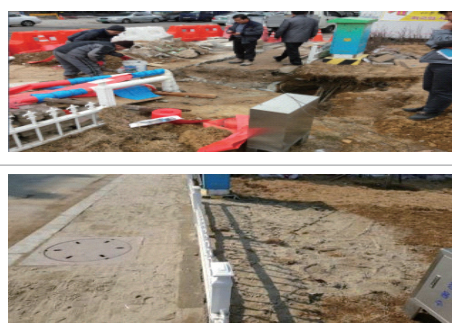


2 추진사항

- 지반침하 발생 현장발견 및 시정지시 : 20**.*.**.
 - 지반함몰 전파 : 00역사 역무원 및 토목파트 신경전
 - 현장점검 : 인천00공사 토목파트 및 00건설(시공사)
 - 현황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요구(00공사 00실)
- 지반침하 조치이행 사항 확인 : 20**.*.**.
 - 00역 확인결과 20**.*.**. 안전시설 설치상태로 존치.
- 지반침하 조치이행 현장 대책회의 : 20**.*.**.
 - 참석자 : 00공사 2명, 00개발, □구청 00과 담당자, 00동 ****-**-****번지 신축공사 감리자 외 1인
 - 회의내용
 - 지반침하 발생 규모 및 원인규명, 구체적인 보수·보강계획 없이 보수작업 불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맨홀 주변 터파기 및 배수작업 진행중)
 - 지반침하 규모 확인(기존보다 더 확대) 및 주변 일대 침하현장 확인
 - 00공사 0000단에 상황을 전파하고 합동으로 대책마련 요구
- 조치계획
 - 00공사 00실에 지반침하 발생 대책마련 소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0000단 및 토목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자 함

3 추진결과

- 지반침하 정비 기간 : 20**.*.**. ~ 20**.*.**.
- 지반침하 처리 완료

| | |
|---|--|
|  |  |
| 조치결과(前) | 조치결과(後) |



30

인도변 시민 통행불편 통신주 이전

1 현 황

- 위 치 : 인천*호선 00000역 *번출구 인도
- 내 용 : 횡단보도 앞 인도(폭 12m) 중앙에 통신주가 존치되고 있어 시민 통행불편 초래와 야간 자전거 및 보행자 충돌 위험 상존

2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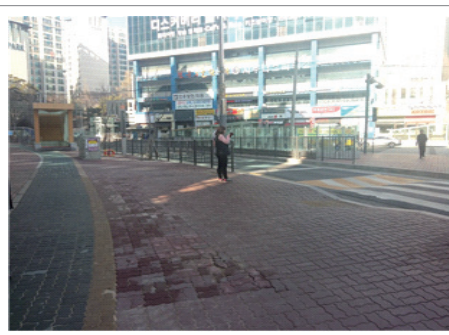
- 20**.*.**. : 시민불편사항 현장 점검
- 20**.*.**. : 00콜센터 및 000지사 통신주 이전 업무협의
 - 00청 CCTV 및 통신선로로 □구청 00출장소에 도로굴착 허가신청
- 20**.*.**. : 00 000지사 및 00출장소 업무협의
 - 도로굴착허가 처리 및 통신주 이전 추진일정
- 20**.*.**. : 도로굴착 허가 처리(□구청 00출장소)
- 20**.*.**. : 도로굴착 및 통신관로 설치공사 시행
 - 장비 : 포크레인(02), 지원차량 8대, 작업인부 7명, 인천도시가스 2명 등
 - 조치사항 :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시설 설치
- 20**.*.**.(조치완료) : 통신주 제거 및 통신선 설치, 인도복구

3 추진결과

- 통신주 이전 완료



조치결과(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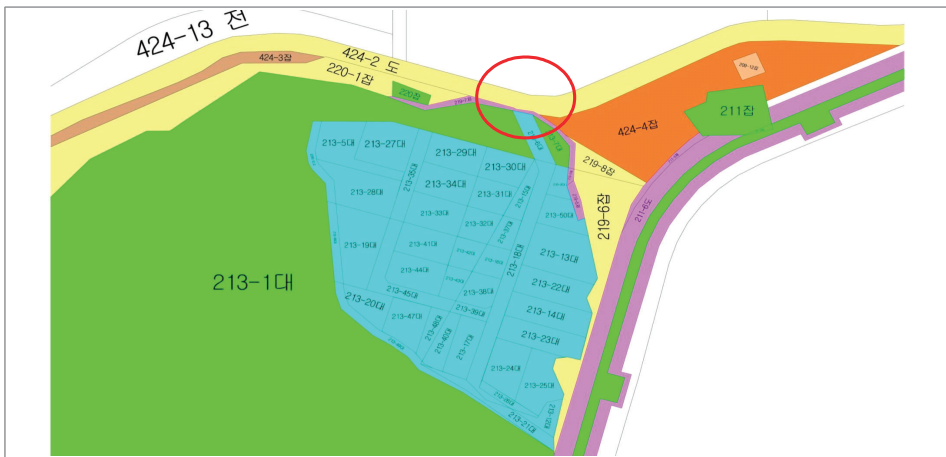


조치결과(後)

31 진출입로 앞 경관녹지 해제

1 민원현황

- 성 명 : ○○기업 대표 000외 15인
- 내 용
 - 2006년 한국0000공사에서 00동 ***-*번지 차량진출입로앞에 경관녹지 임의 지정으로 주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태임
 - 인천000000위원회 결정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개 중소기업의 고충을 처리해결해 주시기를 요청
- 위치도



2 민원발생과정

- 건축허가 신청(소유자 → □구청)
 - 00동 2**-**번지 : '1*.*.2 허가신청, '1*.*.6[00청]경관녹지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의, '1*.*.7[00공사] 진입로 사용은 기반시설 완료후 관리청의 점용허가 필요, '1*.*.9[□구청] 00와 재협의, '1*.*.10[00공사] 기 협의의견과 동일, '1*.*. 16[00청]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00가 개발계획 변경요청할 경우 검토하여 추진
 - ※ 00동 ***-*, -*, -**, -**번지는 허가신청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부적합으로 자진 허가 취하신청하여 취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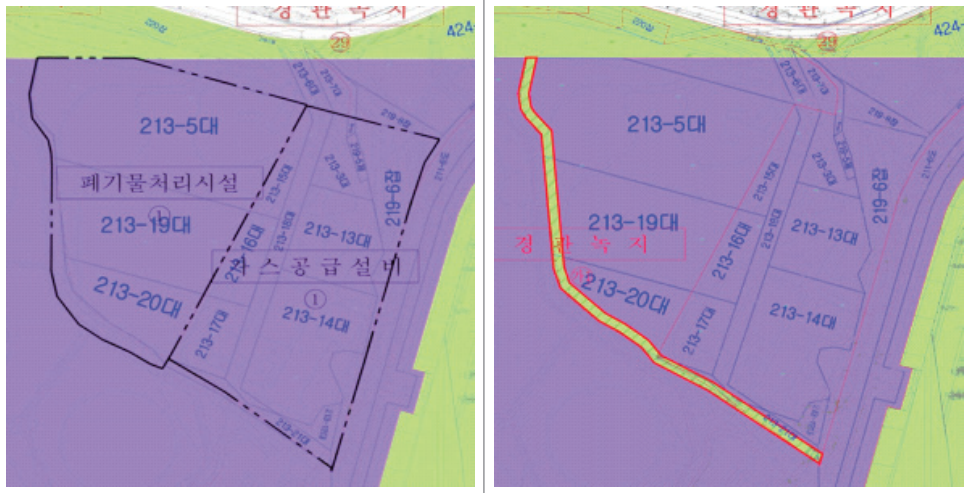


- 건축허가에 따른 완충녹지 해지요청 민원답변 ('1*.*.14. 00청 → ○○기업)
 - 00국제도시 개발사업시행자(00공사)가 답변할 사항으로 이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사업계획 확인요청 회신 ('1*.*.22. 市 0000과 → ○○기업)
 - 201*년 제**회 000000위원회 심의 당시 차량 진·출입계획은 기존 현황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00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요청 회신('1*.*.7. 00공사 → ○○기업)
 - 전면도로는 25m로 확폭되는 도로로써 공사 진행중('18. 12월 완료예정)으로 상기 도로 및 경관녹지는 공사완료 후 관리청에 인계인수되는 기반시설로써 건축주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관리청의 점용허가 결정이 필요함
-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기업애로사항에 따른 협조 요청('1*.*.14. 市 0000과 → 00청)
 - 차량 진·출입 계획은 기존 현황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진입도로 이용을 위한 경관녹지 저축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녹지 기능상 지장이 없다면 향후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해소방안 강구 요청

3 진출입로 추진과정

- 가스공급설비
 - '9*.*.4. 실시계획인가, '9*.*.17 실시계획 변경인가, '9*.*.18 건축물 사용승인, '0*.*.18 가스공급 변경결정(12,135㎡ → 12,176㎡, 증41㎡), '1*.*.12 가스공급 이전결정(39,670㎡, 청라지구내), '1*.*.20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00공사 → 00)
- 진입로 점용
 - '9*.*. 9 도로굴착 허가(□구청→00공사), '9*.*.21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00동 ***-*번지 34㎡), '0*.*.26 도로점용허가 갱신 안내(□구청→00공사), '0*.*.6 도로점용허가 갱신회신(00공사→□구청)
- 00지구 실시계획
 - '0*.*.21 최초승인(경관녹지 신설 30㎡), '1*.*. 1 변경승인(경관녹지 : 당초 30㎡ → 변경 272㎡ [증]242㎡)
- 폐기물 처리시설
 - '9*.*.20 시설결정(12,785㎡), '9*.*.16 사용신고, '9*.*.30 사용종료, '1*.*.30 사후 관리 만료(20년), '1*.*.29 사후관리 종료처리(□구), '1*.*.22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제안 제출, '1*.*.26 제**회 0000위원회 심의, '1*.*.7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 폐지, 녹지 : 신설)

20**.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호]



4 검토결과

■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2항
 -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제3항
 -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등)
-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녹지점용허가) 제2항
 - 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 소송판결 등 사례

● 00시 000청장의 건축신고불허(반려) 처분 취소 판결

- 1심[00지방법원 20**.*.** 선고 20**구합****] : 원고(건축주) 승소

- 00시 00구 00동 입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함
-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완충녹지안에 별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 완충녹지에 이미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2심[00고등법원 20**.*.* 선고 20**누****] : 원고 승소

-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

- 3심[대법원 20**.*.*. 선고 20**두****]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 승소

- [사실관계] ①토지에 접하는 진입도로가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점용을 허가할 수 없으므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등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등을 반려. ②진입도로는 완충녹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 등이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③완충녹지는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녹지로서 지정 후 진입도로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대신할 이면도로도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축산농가 등은 계속 진입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알수 있음
- [판결] ①진입도로는 완충녹지 지정 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로서 아직 녹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②행정청이 녹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③이건 진입도로로서 토지에 대한 진입로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④따라서 건축신고 등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다. ⑤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건축물의 점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00시 000청장)를 기각하고,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

5 컨설팅의견

00지구 경관녹지 일부해제로 진출입로 확보

- 관련기관 회의개최 및 00공사에 경관녹지 해제 통보
 - 20**.*. 14일 ○○기업에서 00지구내 경관녹지 일부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기관(00청, 00공사)에서 책임전가하여 발생
 - 20**.*.14~15일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협조요청 및 회의개최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 유사사례, 항공사진등을 분석하여 20**.*. 28. 컨설팅감사 결과(경관녹지 해제)를 00공사 등에 통보
- 00지구 개발계획변경 관보 고시로 조치완료
 - 00공사는 00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20**.*.5. 관보(제 19***호)에 「00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2-③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인천광역시 000000청 고시 제20** -**호)함에 따라 건축허가 진출입로를 위한 경관녹지 일부가 해제완료 됨

국유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완료

- 국유지 매입을 위한 용도폐지 신청 권고
 - 20**.*.28. 경관녹지 일부해제 통보때 국유지(제방)가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어 건축허가가 어려운 점을 발견하고 즉시 민원인에게 국유지 매입을 위한 용도폐지 신청을 권고
 - 20**.*.31. 관련기관 회의개최 및 20**.*.**일 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하여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이행 조속 추진 요청
- 재산 총괄청 이관 및 매각완료
 - 20**.*.24.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재산을 이관하여 20**.*.13. 국유지를 000에게 매각함에 따라 진출입로 확보가 완료됨



32

○○○○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관련

1 사업 개요

- 입주기업 사업계획 및 변경 신청 현황

【(주)00000 현황】

- 위 치 : □□구 00동 소재
- 업 종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생산품 : 00 Filter
- 용지면적 : *,***,**m² / 제조시설 : *,***,**m² / 부대시설 : *,***,**m²
-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 : 20**

- (당초)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 (변경)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 00청과 (주)00000는 ○○○○단지내 u-IT클러스터내 산업시설용지 토지매매계약체결

- 계약서 상 용지의 지정용도는 “지식기반제조”로 지정하고, 제1조에 따라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11조에 의거하여 매매계약 해제 가능

※ “지정용도”란 사업계획서상 목적용지를 사용할 용도로 확약한 것으로, 지구 단위계획상 허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한다고 규정

- 업체는 당초 입주심의 신청('1*.*월)시 사업계획에 “EMP메탈시트 및 필터” 생산으로 제출하여 입주 승인

- ‘1*.*월 EMP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회사 재무건전성 위협 등을 이유로 생산제품을 영상정보디스플레이(“무인결제 키오스크” 등)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지정용도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 지연

※ 당초공급 용지의 가압류 말소 소송, 공급용지의 변경으로 초기투자비용과 건축 설비투자 손실 발생 및 국내·외정세변화로 EMP관련사업 어려움 예상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질의1)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업체가 입주심의 신청 시 생산코자한 제품과 사업계획 변경하여 생산키로 한 제품 성격이 크게 차이는 있으나, 계약서상 지정용도인 “지식기반제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과 지구단위 계획상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검토 할 경우 변경승인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되는데 변경 승인해 줄 수 있는지

- RFID와 IOT를 동일한 의미로 판단해도 되는지?(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관련하여 부서 간 의견 대립)
 - 〈0000과 의견〉 당초 입주공고시 지식기반제조 업종 중 유치분야를 “RFID/USN”으로 제한, 계약변경 신청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RFID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IOT 분야로 RFID와 IOT를 동일업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
 - 〈00000과 의견〉 IT분야 기술특성 및 시대 환경적 변화로 인해 현 시점에서 RFID 용어는 IOT와 동일하다고 판단
 - 〈한국0000협회 의견〉 RFID와 IOT는 시점에 따른 개념전환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000000부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3 권설텍의견

- 질의1) 관련
 -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르면 입주기업이 업종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주계약을 변경하여야하며, 변경 대상은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호, 20**.*.**) 업종변경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상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은 변경 대상으로 보아야 할것임[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관리기본계획, 용지공급 지침서, 토지매매계약서 등에는 업종변경(사업계획서 변경 포함)에 대해 따로 명시된 사항이 없고, 매매계약서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 변경 할 수 있음
 - 따라서, 변경 승인은 귀청이 신청서에 언급한바와 같이 변경 신청된 업종이 당초와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제조” 업종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사항(사업계획서)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질의2) 관련
 - RFID/USN과 IOT는 동일 개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술적, 기술적, 단지조성 목적 및 용도등 개념해석(분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사전컨설팅 의견으로 제시하기 곤란함
 - ☞ 단) 관련기관 자문(한국0000협회)등의 내용 및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승인부서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검토하여 판단



● 권고사항

- 첨단산업은 기술발전 속도와 제품교체 시기가 매우 빠른 업종으로 급변하는 첨단산업 환경,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주기업의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불편·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관리기본계획, 공급지침서, 매매계약서 등)는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발굴·개선 하고, 첨단산업 현장 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단) 관련기관 자문(한국0000협회)등의 내용 및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승인 부서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검토하여 판단

33 관급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1 사업 개요

● 사업현황

- 계약건명 : 00장-00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관급자재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구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0000
- 입찰일 : 20**.*.**,
- 계약일 : 20**.*.**,
- 계약기간 : 20**.*.**~20**.*.**.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거래실례가격의 조사내용

- 품명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1800A*13t*1m, 내부액상에폭시

| 구분 | 단위 | 입찰당시 | 물가변동당시 | 등락율(%) | 비고 |
|-----------|----|-----------|-----------|--------|------|
| 가격정보(조달청) | m | 등재가격없음 | 891,500 | - | 우수제품 |
| 물가정보 | m | 1,421,500 | 1,565,830 | 11 | 00스틸 |
| 물가자료 | m | 없음 | 없음 | | |
| 견적가 | m | 944,540 | 1,350,692 | 43 | 00업체 |
| 스틸데일리 | kg | 490 | 700 | 42.9 | 후관 |

※ 가격정보지 등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회계예규)

● 검토의견

- 입찰당시의 가격산정은 물가정보, 견적가 및 유사품목인 스틸데일리가 조사되었으며 비교한 결과중 물가정보지에 의한 자료가 가장 객관적 자료로 평가됨
- 조달청 자료인 가격정보는 현재 입찰당시 자료조사가 어렵고, 견적가는 물가 지에 제품규격이 없는 경우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설계당시 조사가격으로 입찰당시와 차이가 있고, 스틸데일리는 유사제품이나 동일규격과 차이 있음

● 검토의견(00본부 00부서)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 증감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계약의 경우 입찰일 기준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되 이러한 가격자료에 대하여는 적용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물가변동당시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되는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에 따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요청사유
- 조달청 제3자단가가격이 견적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견적가격의 신뢰성 등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컨설팅의견

- 사전컨설팅 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관련법령에 의거 가격의 적용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00청 질의 응답사례에서 제시하고 있음
- 업무처리시 참고사항으로
- 단 당초계약시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됨
 - 아울러 견적가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등)의 견적이 적정성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 추진등도 강구

34 방치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

1 국유재산(방치 토지) 현황

-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 방치된 국공유지(□□구 00동 소재, 한국00공사 소유)가 무단 경작, 폐기물투기 및 노점상 난립 등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주민 안전 위협 상태
- □□구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꽃밭 조성 등 환경 개선을 공사에 요청하였으나, 한국00공사와의 논의가 부진한 상황

2 주요내용(권설텍 사유)

- 해당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총괄청은 한국00공사이며, 총괄청의 승인 없이 해당 공간을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용 등의 문제 발생
- 국공유지 소재 지역은 □□구청 관할이며, 민원인들은 □□구청에 관리를 요구하는 실정이지만 총괄청의 승인 없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관리할 수 없는 실정
-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장기 방치된 국유지에 대한 효과적 활동방안 모색 필요

3 권설텍의견

-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하여 □□구는 한국00공사에 무상사용 허가 신청 가능
-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개선 방향 논의
 - ※ □□구, 한국00공사, 인천광역시, 정부0000단 간담회 개최
 - □□구는 해당 부지를 꽃길 조성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한국00공사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간 내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계획(허가기간 갱신 가능)
 - 다만, 해당 부지에 대한 경계 측량·명확화, 불법 점유자 퇴거, 쓰레기 수거 및 가건물 철거 등은 한국00공사에서 시행
 - □□구는 지면 단차 정리 및 꽃길조성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협의
 - ※ 추후 □□구와 한국00공사는 공문(의견조치 및 사용허가)으로 합의
- □□구는 관련 기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꽃길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체계적인 추진 필요



35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주차장 폐지 관련

1 사업 개요

- (부지현황) □□구 00동/ ****.*㎡ / (주)000 소유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해당 부지는 당초 설치목적이었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인 ‘화물주차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부지 소유자인 (주)000의 생산제품 운반 차량 및 직원차량 주차용도로만 사용되는 실정
- ☆☆☆☆단지 내 해당 업체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공동기숙사, 식당 등)이 부족하여 해당 업체 및 주변 업체 근로자들의 불편이 상존하여 (주)000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근린생활시설 등 근로자용 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그러나 □□구에서는 □□산단 내 주차시설 부족,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한 지가상승 및 개발이익의 특혜소지로 해제가 곤란하다는 입장
 - ※ (0000과)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대체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면 폐지 검토 가능
 - (0000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대체시설 검토 없이 폐지 곤란, 주차장 시설임을 알고 매입하였음에도 시설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매입 목적 위배

3 컨설팅의견

- 해당 기업체 경영의 불편요소 해결 및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 특혜소지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여 실질적 주차난 해소와 동시에 기업의 애로(편의시설 확충)를 해결하는 대체 방안 추진 가능

-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기능을 발현시켜 ☆☆☆☆단지 내 노상 불법주차 차량(대부분 근로자 개인 차량)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 ‘폐지’가 아닌 ‘변경’ 필요(화물주차장 ➡ 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결정하고, 비도시계획시설인(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가 가능한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
- 가령, 해당 부지의 경우 지하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역할을 하고, 지상은 해당 업체에서 희망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근로자용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평면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변경 결정)
 - ▶ (사례) 0000터미널, 00종합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비도시계획시설 설치



3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감면

1 사업 개요

-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및 여객선 이용객 급감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상황 해소를 위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일시적으로 감면(인하)하고자 함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감면 요율
 - 적용기간 : 6개월
 -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로 정한 어항시설 사용·점용료를 기존 적용 요율의 100분의 50으로 감면(인하)
 - ▶ (연간사용료)=공시지가(원/㎡) × 사용면적(㎡) × 50/1,000 → 25/1,000
 - ▶ 수산물 직매장의 요율은 25/1,000 → 12.5/1,000
- ※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계획에 따름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의 사용·점용료의 감면 조항이 없음
- 그러나 어촌·어항법 제42조에 따라 어항관리청(인천시)이 조례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어항시설부지 및 시설물 대부분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 및 운영 요령 및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항시설 사용·점용료를 기존 적용 요율의 100분의 50으로 감경 가능여부 검토 요청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항만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감면 하고 있음

3 권설텡의견

- “지방어항시설물”의 “공유재산” 대상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관리관이 판단할 사안임
- 중앙정부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추가지원대책’ 사용료 감면 추진
 - (항만시설사용료) 연안여객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지원(총 00백만원,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화물선사 제외)
- 지방어항시설 사용·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 및 운영 요령”에 의거 해당 재산관리관이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의 사용·점용료의 감면 조항이 없으나
 -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그 종물등 재산 말함,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계획 및 운영요령에 의한 지방어항시설(공유재산 경우)의 사용·점용료 등 감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지방어항시설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유권해석 등)후 결정
- 본 계획의 추진배경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운 항만분야 사용자(임차인)의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 추진이 필요



37 수출이행여부신고 한시적 과태료 부과 면제 가능 여부

1 사업 개요

- 등록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말소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해당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폐차 또는 신규등록*
 -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규등록
-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고 폐차 요청 또는 신규등록 신청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로 국내활동 해외바이어의 귀국 등 중고차 수출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기매입차량(수출말소)의 수출에 지대한 차질 발생
 - 수출물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손실과 수출 미이행 대상 자동차의 증가로 과태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관련 업체* 운영에 어려움 호소
 - * 인천광역시 00 중고차 수출단지 內 약 800여개 업체 영업 중

<표-1>인천 중고차 수출말소 및 수출량 현황(IPA자료)

(단위: 대, %)

| 구분 |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비 고 |
|-------|-------|--------|--------|--------|--------|--------|------------------------|
| 수출말소 | 2020년 | 6*,*** | 7*,*** | 1*,*** | 1*,*** | 9*,*** | '1*년 수출말소 (2*,***대) |
| | 2019년 | 1*,*** | 2*,*** | 2*,*** | 3*,*** | 2*,*** | |
| 수 출 량 | 2020년 | 8*,*** | 2*,*** | 2*,*** | 2*,*** | 6*,*** | |
| | 증 감 율 | -2*,* | 3,* | 1*,* | -2*,* | -7*,* | |

※ 출처 : 인천광역시

- 이에, (사)한국00000조합은 국토부에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 한시적 기한연장과 과태료 면제 등을 건의
 - (회신 결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관할관청이 사실관계 확인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소관 부처의 회신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미부과에 대한 감사지적 부담 등으로 군·구별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 상이
- 코로나19로 수출량 급감예측이 불가하였던 시기의 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를 위해 정부합동감사 대상 제외 필요

3 컨설팅의견(00부 회신 포함)

- 수출의 이행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은 수출말소된 자동차는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폐차 또는 신규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수출 미이행 후 폐차 또는 신규등록까지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84조 제3항 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자동차 수출 미이행의 고의·과실 여부
 - <표-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중고자동차 수출량이 각각 *.%, **. % 증가
 -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인 3월 △**. % 감소, 팬데믹 선언 이후인 4월에는 △**. %로 감소폭 확대
 - 아래의 <표-2>와 같이 수출말소 차량의 폐차 또는 신규등록 시 수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보다 손실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 부담을 선택

<표-2>중고차 수출말소·부활(신규)·폐차 시 손익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 매입원가 | | | | | | | | 판매가 (B) | 손익 (A-B) |
|-----|-------|-------|-----|-----|-----|-------|------|------|------------|-------------|
| | 소계(A) | 매입가 | 탁송비 | 말소비 | 수수료 | 번호/보험 | 신규검사 | 취등록세 | | |
| 수 출 | *,*** | *,*** | ** | ** | ** | - | - | - | *,*** | *** |
| 신 규 | *,*** | *,*** | ** | ** | - | *** | ** | *** | *,*** | (-),*** |
| 폐 차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인천광역시



- 결과적으로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 및 의견 제시
 - ⇒ 재난위기 심각단계(2.23)부터 팬데믹 선언(3.11)까지 기간이 짧고, 수출량의 감소는 국제적 영향(팬데믹)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 팬데믹 선언일(3.11) 이전 수출용으로 말소등록된 차량 중 팬데믹 선언일(3.11) 이후 수출 이행 여부 신고대상이 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는 향후 정부합동감사 대상에서 제외
 - ※ 다만, 고의·과실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조치

38 재개발 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재개발정비사업
- 면 적 : **,***㎡

2 쟁점사항

-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용적률 완화를 받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지
-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완화 용적률이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에 완화 용적률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3 검토결과

■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 제6조(적용의 완화) 제2항
 - 허가권자는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5호 나목 :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
 -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제5항
 -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 질의회신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등

● 0000부 질의회신

- 질의요지 :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법령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 고시된 정비계획의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규정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0000시 및 00도 유사사례

- 0000시 : ○○18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00도 : ○○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4 컨설팅의견

■ 정비계획 용적률 초과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나목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 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임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또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말하는 것임
- 동 사항과 유사한 00부 질의회신, 관련부서 의견 및 00시, 00도의 유사사례 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 용적률 반영 관련

- 건축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할 때는 인·허가권자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



39 건축물 신축 관련 도시공원 내 도로 진·출입로 사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구 0동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위 치 : 인천광역시 □구 0동 **-* , **-* , **-*번지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 ***.***m²)

| 건 축 물 | 공 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 □구 0동 **-*번지 ○ 규모 : 지상1층(목조주택 40.18m²) ○ 준공일 :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m² ○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 공원결정 (최초, 총독부 제19**-*호) · 20**.*.*.*. : 조성계획 (변경)결정(인고 제20**-*호) |

2 쟁점사항

- 건축(신축)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 가능여부

【00부서 의견】

-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해당 부지는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건축이 가능함
-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의 진·출입로 신청사항은 현황 및 입지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의 확인에 의거, 신청부지에 접한 공원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00부서 의견】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2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으로 규정한 바, 공원이용객을 위한 보행로가 사유지

- 차량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은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발생하는 행위로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3호의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인 도로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의하면 도로의 정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규정된 바, 민간의 건축행위를 위한 진입로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님
 -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제3호 및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녹지점용허가)제2항 제2호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군관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점을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법에서 정의하는 “공원녹지”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진·출입로 등의 영구히 점용될 수 있는 형태의 공원점용 행위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

【자체00부서 의견】

-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 제외)에 2미터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광장, 공원, 유원지 등)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로의 관리주체인 00과가 도로허가의 주체가 되며, 해당 건축허가의 승인 시 공원 진·출입로가 영구히 점용될 우려가 있어 건축협의를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현황분석

- 00공원은 19**.*.*.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총독부 제19**-*.*.호)후 20**.*.*.*.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인고 제20**-*.*.호)을 통해 조성완료 되어 □구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 공원 내에 입지한 대상 도로는 그 개설 시기가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19**년 이전부터 이용 중인 현황도로로서 0동과 00동 구간을 잇는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임

- 일반적으로 공원시설로 결정된 공원 내 “도로”는 모든 공원 이용객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특정인(또는 목적)을 위한 공원 점용허가 대상물이 될 수 없음. 즉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불가피 할 경우 공원의 지상·지표·지하에 목적하는 시설물을 설치(또는 행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건축 관련부서(可能-법률적·사유재산권보호)와 공원관리부서(不可-공익성 침해여부)간 상호 의견 조율 지연으로 민원처리 지연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공원의 점용 가능에 대한 분석

- 본 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본 도로는 공원 세부시설 중 “도로”에 해당됨. 따라서 「공원녹지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및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의 관련규정에 의한 적정성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 본 도로는 도시공원 내 공원 세부시설 중 “도로”로 결정(20**.10)되어 있으며, 과거부터(19**년 이전 추정)사실상 공공시설인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대다수 일반인들이 이용(차량 및 보행, 인접대지 및 건재상 진출입 통로 등)중에 있어 공용도로로 본 도로를 이용한 건축 등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점용허가는 불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판단근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본 도로 인접 건축물은 시민들의 재산권의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법적기준에 따라 양성화(19**.*.*)되어 기 진·진출입(구)로로 이용 중에 있음
 - ② “00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00공원 동측에서 북측을 연결하는 구간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방통행도로 지정(공공도로)한 사실이 있음
 - ✓ 20**년 5월 인천00경찰서로부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정
 - ☞ 보·차도 구분 없는 양방향 통행도로 → 보·차도로 구분된 일방통행도로
 - ③ 질의회신 사항 및 공원관련부서 의견 종합검토

【0000부】

(질문)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진·출입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를 위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진·출입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을 뿐 건축물을 위해 공원에 별도의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미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공원의 점용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

(질문) 연접토지 건축행위를 위한 공원시설인 도로 사용 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여부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공원시설인 도로를 별도의 시설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이 이용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임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이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市 00관리 부서】

(의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 중 “도로”로 결정되어 있지만, 과거(19**년 이전 추정)부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한 건축 등은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점용허가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여부 분석

-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고시 및 건축허가 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의미하고 있음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규정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4조(도로의 지정)제4호에 따라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이해관계인의 동의 불필요)를 거쳐 도로를 지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구청장”이 도로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컨설팅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점용허가 불필요 및 「건축법」 도로의 지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차량 진·출입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단) 현행도로가 차도 및 보도가 구분된 도로로 건물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보도구간에 횡단차로 설치 등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형질변경(시설물 등 공작물 설치)등을 고려하여 보도횡단차로(진·출입로)설치 면적은 공원점용허가를 별도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가의견(아래 사항 포함)을 제시하며,
 - 보도 횡단차로 설치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을 점유자와 협의하여 설치방안 강구와 각종 행사 기간 중 도로가 통제 될 수 있음을 이용조건에 부여하여 공원도로 안전성확보 유도
 - 보도 횡단차로 설치는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기준 및 시공기준을 참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민원해결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선·후 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민원을 해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기타 권고사항

- 00부서에는 현재 00공원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명 부여 등 정비 및 급회 문제된 공원세부도로에 대해 市00부서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방안을 함께 모색
- 이력확인이 불가한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 존재 및 미결정 도로 등

40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관련

1 불법지하수 개발현황

- 위 치: ○○군 ○○면 △△리 ***-**-**번지
- 내 용: (용도-농업용수) 깊이 900m, 지름 200m, 양수능력 300㎥
- 행 위 자: 000(○○면 △△로)

2 주요내용(컨설팅 사유)

- 민원인(000)이 관련 법률 무지에서 굴착 등의 행위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원상복구보다는 보완처리하게 검토를 요청한 바,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3 컨설팅의견(00부 회신포함)

■ 인천광역시 자체00부서 의견

- 타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는 의제되지 않고,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것을 오인한 것에 대한 책임은 민원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임
- 또한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제3항 제2호 규정 단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동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이후에 추가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 사항으로서 추진은 어려움
- 그러나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군의 발전 방향이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점
- 또한 「온천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게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이미 발견된 중요한 자원인 온천수를 원상 복구하여 달성할 수 있는 행정청의 실익 검토와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00부 의견

-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대신 보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 또는 고갈되거나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려는 것인데,
- 만약 같은 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굴착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오하여 토지를 굴착함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 기존에 굴착한 토지를 되메우도록 한 후에 다시 굴착허가를 하여 동일한 개발 행위를 반복하도록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지하수가 더 이상 개발 또는 이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토지를 되메우도록 하는 원상복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그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거부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이후 「지하수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확인되어 같은 조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민원인은 이후 □□군에서 「지하수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요건을 갖추었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조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경우,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감사이음

적극 행정을 지원합니다

발 행 인천광역시
기 획 인천광역시(감사관)
발행일 2020. 9.(초판)
디자인 웨스트코(주)

www.incheon.go.kr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발간등록번호 : 54-6280000-000464-01